

2020
여름

생협 평론

39

길잡이 모두 함께 빌어먹는 세상을 위하여 4
— 김찬호(편집위원장)

특집

재난의 시대,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좌담] 코로나19에 비친 사회적경제 14



길현중 변형석 안인숙 정태인 김찬호

코로나19를 이겨낼 소중한 치료제,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38
: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격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
— 주대규(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이사장)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경제의 대응 51
: 대구 사례를 중심으로
— 김재경((사)커뮤니티와경제 소장)

지역과 국가의 경계 없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 71
— 신재민(해외정보분석연구 협동조합)

재난 속 생활 방역 그리고 돌봄 노동자 91
—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감염병 재난, 생활공동체로 살아남기 96
— 정미정(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에이팍코리아) 이사장)

이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떠오른 기본소득 116
— 홍기빈(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쟁점과 정책적 함의 126
— 윤모린(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장)

생협 zoom in 우리에게 필요한 여행 138
— 김성광(작가)



기획 연재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사회적경제와 제도정치를 잇는 안성시장, 김보라 —우미숙(『생협평론』 편집위원)	140
	주요 개념 길라잡이	
	임팩트란 무엇인가 —도현명(임팩트스퀘어 대표)	150
서평	가치를 넘어서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소리 : 최인석,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오경아(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158
	별난 사람들의 별난 기업 : 베아트리스 바라스, 『별난 기업으로 지역을 살린 아르들렌 사람들』 —정설경(성대골어린이도서관 대표운영자)	163
	협동조합 소식	COVID-19에 대응하는 스페인, 이탈리아의 의료협동조합 —이주희(SAPENet 지원센터 국제팀장)
청년의 소리	사회적경제의 시선을 행간에 담다 —송소연(라이프인 기자)	172
	정기구독 안내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204 176 195

생협 평론

계간 2020년 여름 제39호 **퍼낸날** 2020년 6월 20일 **퍼낸이** 고명희 **편집위원** 김아영 김현숙 박범용 우미숙 조금득
 조현경 주세운 황명연 **편집위원장** 김찬호 **코디네이터** 이은정 **퍼낸곳**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등록번호** 구로, 바
 00038 **등록일** 2016년 4월 5일 **주소** 07317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 **디자인편집** 잇다 **인쇄** 아람P&B **ISSN** 2093-987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도서 문의 (주)알마**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길 8 | 전화 · 02-324-3800

길잡이

김찬호

편집위원장

모두 함께 빌어먹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걸식 아닌 밥이 어디 있니?

본래 자기 것이 없는데

서로 걸식하는 거지

형편 되는 대로 빌어먹고 빌어 먹이고

오늘 내 무릎에 네가 기대고

언젠가 올 오늘엔 네 무릎에 내가 기대고

내 것을 준다는 의식 없이

그저 우린 서로를 빌려주며

먹고 먹이는 거지

걸식하고 남는 시간에 무얼 하냐고?

열렬히 노동해야지

영혼을 다듬는 거야

—김선우, 「걸식이 어때서?」

다섯 살 무렵이었을 것이다. 집 뒤편에 있었던 공터에서 어떤 아저씨가 죽어가던 모습을 나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허름한 검은색 작업복 차림이었고 병색 짙은 얼굴은 상처들로 가득했다. 숨을 거두는 순간, 십 원짜리 지폐 몇 장을 쥐고 있던 손이 스르르 펴지고 있었다. 내게 가장 오래된 기억으로 저장된 장면은 그렇게 한 인간이 처연하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십오 년 남짓, 서울에는 아직도 가난과 굶주림이 가득했다. 수많은 부랑자와 행려병자들이 정처 없이 떠돌던 시절이었다.

당시 동네에서 흔히 마주치던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걸인이었

다. 요즘처럼 길거리나 전철 계단에 엎드려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동냥하는 이들이 많았다. 돈 대신 밥을 얻어먹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차려준 작은 밥상을 우리 집 대문 앞 골목에 얹아 맛있게 먹고 길을 떠나던 어느 소년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야말로 ‘문전걸식(門前乞食)’이 자연스러운 세상이었다.

어느 나라에서든 거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에 따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지방민의 서울 이주가 급증하면서부터 거지가 집단화되고 하나의 ‘직업’으로 형성되었다. 하지만 걸인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노동력 대 생산수단 간의 비례관계가 계속 바뀌는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부터였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임금을 끊임없이 절감해야 하는 시스템은 일정 규모의 산업예비군을 배출하면서 그 최하층부에 거지를 퇴적시켰다. (전우용, 『서울은 깊다』 참고)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걸인은 많이 줄어들었다. 조금만 노력하면 살림이 크게 나아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높아졌고, 끊임없이 팽창하는 산업이 노동력의 수요를 계속 창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IMF 구제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의 터전이 흔들리고 이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노숙인들이 늘어났다. 실직자들은 저마다 살길을 찾아 가게를 차리거나 개인 사업에 뛰어들지만, 결국 자영업과 영세기업의 과다 경쟁으로 생존율이 점점 낮아져왔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는 경제를 한층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주로 금융 부문에서 비롯된 예전의 경제위기와 달리 외부 충격에 의한 자본주의 자체의 순환 위기라서 훨씬 더 난감하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촌 전체를 휩쓴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 전방위적인 충격으로 인해 펼쳐지는 사회적 풍경은 새로운 듯하지만, 이미 벌어지고 있던 변화를 가속화하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 과잉생산과 금융

거품 그리고 양극화로 위기에 치달던 자본주의, 온라인 거래의 급증으로 존재 위기에 놓이던 오프라인 매장(특히 자영업), 자동화로 인해 축소되어 가던 일자리,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으로 표상되는 자국 우선주의, 인간관계의 단절과 일상의 고립(일인 가구, 혼밥 등) 등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번 재난은 그런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시키고 폭주하게 하는 방아쇠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위기 탈출의 통로가 보이지 않는 요즘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단순히 경제가 나빠져서만이 아니다. 경제로만 보자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던 시절에도 자살은 지금보다 적었다. 문제는 공동체의 균열, 사회의 해체다.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 동네에는 떼떽하게 돌아다니는 룸펜이나 건달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무능하지만 이웃 관계나 패거리 속에서 나름대로 기를 펴고 살았다. 빈자들끼리 어우러지는 공간에서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자괴감을 심각하지 않았다. 달동네가 사라진 자리에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빈곤은 반지하, 옥탑방, 쪽방 등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어갔다. 복지 시스템이 많이 확충되었지만 가난하면 웬지 '기생충'으로 여겨지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모멸감이 만연한다. 목숨이 넘어가는데도 남에게 손길을 내밀지 못한다.

김선우 시인은 결식의 정당성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있다. 제 앞가림을 못 하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생활의 필요가 점점 더 상품 및 서비스 구매로 충족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돈이 개인의 자립을 보장하는 토대로 여겨진다. 사실은 시장을 통해 더욱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고 있는데도, '능력(=재력)'을 갖추면 '자립'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인은 말한다. 본래 자기 것은 없다고. 서

로 기대어 빌어먹고 빌어 먹이는 것, 자기를 내어주면서 함께 걸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이번 재앙은 그 엄연한 진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죽비가 아닐까. 세계를 주목하게 한 K-방역의 비결은 상당 부분 탁월한 사회적 유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자가 격리 등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한 것,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 붕괴의 위험으로 치달을 때 전국에서 의료진이 달려온 것, 병상이 모자라 몸 둘 곳이 없는 대구의 환자들을 광주 등 여러 도시의 병원으로 모셔온 것 등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극도로 고립되어 생활하면서 오히려 넓고 깊게 연결되는 운명공동체, 그 경이로운 역설을 이번 감염 재난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또한 확진자에 대한 낙인, 특히 소수자 집단에게 가해진 혐오, 병원이나 가정 등 돌봄의 현장에서 이뤄진 막대한 초과노동 등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숨 가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동안 추구해온 사회적 가치는 이 중대한 위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었는가? 앞으로 길게 이어질 재난과 그에 따른 상시적 경제위기 속에서 버티어갈 수 있는 자력은 있는가? 더 나아가 이 비상 국면을 활용하여 사람 중심으로 경제를 전환시킬 수 있는 지렛대는 무엇인가? 이번 호는 그런 질문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경제는 물론 삶과 사회가 송두리째 붕괴될 수도 있는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미디어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특집에 실린 원고들은 현장의 긴박한 움직임을 뒤늦게 그러나 생생하게 전해준다. 특히 대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지원하는 한편 곤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마스크나 도시락 등의 물품을 발 빠르게 전달한 것이 돋보인다. 소통과 협동으로 '위기 관리 거버넌스'를 조직해간 과정은 사회적경제가 지역과 접목되는 구체적

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구호 물품이 답지했지만 다른 일들로 과부하가 걸린 행정 시스템이 현장에 원활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병목현상'을 아이쿱생협이 돌파한 스토리도 흥미진진하다. 민간 재난구호 협업 플랫폼이라는 것을 가동하여 번거로운 절차 없이 현물을 선 지급하는 방식은 나눔의 혁신 모델로 평가된다.

이렇듯 사회적경제기업은 재난의 피해를 입어 일정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다. 그 가운데 노동자의 보호가 매우 절박했는데, 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로 '고용조정 제도'를 선언했다. 당장에 일거리가 없다 해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디자이너들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BI/CI 제작에 재능기부로 나선다거나, 어느 사회적기업이 고객들의 가정에 '청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등이 소개된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를 시행한 것, 재료를 나누어 주고 '콩나물 키우기'나 '요리하기' 등의 주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상호 유대를 활성화한 협동조합이 다뤄진다. 코로나 확산세를 감당하지 못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유럽에서도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신속하게 도모한 상황들도 상세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인터넷망이 갖춰지지 않았던 시대에 이런 재난이 터졌다면 그 충격과 피해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메르스 전염 때의 뼈아픈 실수를 거울삼아 방역 체계를 업그레이드해 놓지 않았다면 K-방역은 불가능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사회적경제의 토대를 이 정도나마 다져놓지 않았다면, 방역에 매달리느라 고용과 복지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웠던 관료 시스템의 공백을 순발력 있게 메울 수 없었으리라. 또한 여러 생필품을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곧바로 유통시키는 인프라를 스스로 구비하고 있었기에, 행정과 시장의 사각지

대를 물심양면으로 보살필 수 있었다. 자발적 결사체들의 힘으로 호혜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위로와 연대의 생활공동체를 실현한 것은 사회적경제의 뿌듯한 발자취로 기억될 것이다.

지금 전개되는 사태에서 짐작되듯이, 이번 재난은 긴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오랫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인류가 확실하게 퇴치한 바이러스는 천연두 밖에 없다. 코로나는 끊임없이 변종하고 진화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것일 수 있다. 이미 일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자는 뜻이다. 따라서 그동안 막강한 위력으로 현실을 지배해온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전제들은 이제 근원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그런 리모델링의 한 가지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해내려면 문명의 구도와 흐름을 명료하게 읽으면서 개입과 실행의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번 호의 나머지 내용들도 그런 문제의식으로 기획되었다. <좌담>에서는 현장의 실천가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그것을 둘러싸고 관점과 생각을 나눈다. 모든 것이 뒤집히고 엉클어지는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감하면서 사회적경제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를 탐색하는 토론이 흥미진진하다. <이슈>에서는 지난 3월에 발표된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쟁점과 함의를 정리해주는데, 협동조합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지만 정책적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할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번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널리 담론화된 '기본소득'의 기본 취지를 살피면서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과 맥락을 짚어준다. 그리고 <주요 개념 길라잡이>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자주 쓰이는 '임팩트'의 정확한 의미와 쓰임새를 밝히는데, 사회적경제가 당위적 가치를 내세우

는 것만으로 사업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준다. <생협 평론이 만난 사람>에서는 의료생협의 활동을 발판으로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안성시장으로 당선된 김보라 씨를 찾아가 사회적경제와 제도정치 의 연결고리에 대한 다채로운 상상을 나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생활 방역, 확진자, 자가격리, 코호트 격리, 섯다운, 드라이브스루, 언택트, 슈퍼 전파자, 인포데믹, 코로나 블루, 재난지원금, 뉴노멀...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일상어로 자리 잡은 개념들이다. 짧은 기간 동안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면서 세계관이 뒤바뀌고 기존의 상식들이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재난은 그동안 묻혀 있던 사회의 여러 취약점들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의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준다.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산재로 희생되는 현실에서 노동을 새롭게 배치하는 기회로도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여린 존재임을 자각하고 기꺼이 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걸식하고 남는 시간에 무얼 하냐고?

열렬히 노동해야지

영혼을 다듬는 거야

재난이 세상을 멈춰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막한 지경에 몰리고 있다. 그야말로 '빌어먹을' 상황이다. 그런데 시인은 기꺼이 빌어먹자고 제안한다. 일을 나누고 삶을 누리면서 유쾌한 순환을 일궈내기. 그렇게 해서 고양된 기운으로 영혼을 보살피기. 사회적경제는 그런 마음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뉴노멀'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보자.

특
집

재난의 시대,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상황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많은 우려와 담론이 쏟아지고 있고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호혜와 연대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헤쳐 나가야 할지,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올 수 있는데 협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생협 평론

좌담

코로나19에 비친 사회적경제

_____ 김현중, 변형석, 안인숙, 정태인, 김찬호

코로나19를 이겨낼 소중한 치료제,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격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

_____ 주태규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경제의 대응

: 대구 사례를 중심으로

_____ 김재경

지역과 국가의 경계 없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

_____ 신재민

재난 속 생활 방역 그리고 돌봄 노동자

_____ 최영미

감염병 재난, 생활공동체로 살아남기

_____ 정미정

좌



김찬호
『생협평론』 편집위원장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UCLA시민사회연구소 연구원, (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혁신자문단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내가 사는 지역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의 관계를 만드는 일이 삶과 행복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변형식 트래블러스맵 대표

대안학교 교사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경험을 하고 여행 업계 최초의 사회적기업이자 공정여행사인 트래블러스맵을 설립했다. 여행을 통한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형 솔루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코로나19에 비친 사회적경제

담

때 2020년 5월 15일(금) 곳 아이쿱신길센터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활동가로, 회장으로,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활동을 했다. 퇴임 후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으로 사회와 경제가 따스하게 어우러져 삶을 밝혀주고, 삶과 삶이 협동으로 연대하여 온전한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사회적경제의 힘을 믿고 활동하고 있다.



정태인 경제학자, 독립연구자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초실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고 독립연구자이자 경제학자이다. 생태전환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과 글도 발표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달라진 세계

사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재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전 지구적인 위기가 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엄청난 상황들에 어떤 것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까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변화 속에서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포스트 코로나는 어떤 모습일지 처음에는 좀 큰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맥락을 따라가며 초점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인 코로나19가 2019년에 나타난 바이러스라 코로나19이지만,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 위기로 코로나22가 나타날 수도 있고, 코로나 25도 가능한,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자연을 파괴해서 과거에는 별로 접촉이 없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옮겨진 것인데 현재와 같은 문명이 지속되면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1.5도 올라가게 된다면 기후 위기가 전면화되어서, 인류 종말 위기의 초입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기에 잘 대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선진국들도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정부라던가 시장 메커니즘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경제와 연결이 되면서 바이러스에 대처하면 경제위기가 오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바이러스가 다시 부

흥하는 상황입니다. 경제문제도 새롭게 다시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현중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국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대응하는 방식들이 워낙 큰 차이를 보였고 이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는 순서나 성과들도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90년대 후반부터 이야기되어왔던 세계화라는 것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기도 한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퍼지게 되니까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또 국가 내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움직임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그간의 세계화의 지향점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연구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택트Untact, 비대면과 관련해서 디지털화나 디지털 경험들이 갑작스레 생활 깊숙이 들어오게 되고, 이에 따라 기술 진보나 디지털화에 사람들이 보다 빨리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주제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형석 몇 년 전에 ‘플레이그Plague Inc., 전염병 주식회사’라는 게임이 유행했는데 이 게임은 전 세계를 감염시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이 목적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포인트를 쌓아서 바이러스의 여러 유전자적 변이를 중간중간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병하기까지 잠복기가 며칠이나, 발병하고 나서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사망률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계산해서 가장 적절한 수치
 의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키면 전 세계가 감염되는 것입니다. 이 게임
 은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철도가 어
 떻게 움직이는지 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실제로 전염병을 연구하
 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할 정도로 현실성을 가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예전
 에는 국지적으로 끝났거나 치사율이 너무 낮거나 해서 이렇게까지
 확산된 적이 없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진화하고 있고 다른 변종 바이
 러스들이 주기적으로 생길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
 른 빈도로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언
 택트가 강조될 때는 조금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자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
 택트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자면서 제
 안되는 것들은 바이러스를 피해서 숨는 식의 대응 전략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대응을 제대로 못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가장 취약한 집단,
 가장 취약한 계층들에게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인간이 가지
 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올라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
 한 인류 차원의 중요한 결정 내지는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시점이라
 고 생각합니다.

안인숙 굉장히 큰 질문이라서 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스트 코로
 나, 계속 성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 사회를
 지탱했던 기반 자체가 위협에 빠진 건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최
 근에 우리의 일상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나 환경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 하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 전 포항이나 경주에

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면 땅이 흔들리는 건데, 근처에 있는 핵 발전소, 허약한 필로티 주택 건축물 등 우리의 경제활동 결과물이 우리 삶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게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기 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반사회적인가 하는 것이 제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에 대한 대응과 함께,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이 무엇 때문인가를 더 성찰하고 반성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실

사회 그럼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사회적경제 영역은 코로나 국면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업종별로 다른 건지,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건지, 위기의식과 더불어 새로운 틈새를 보는 가능성도 있는 건지 현실이 궁금합니다.

변형석 피해를 입은 정도는 일반적인 다른 업종들, 시장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려고 하는 의지는 영리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강한 것 같습니다. 일반 시장 안에서의 기업들과 비슷한 경제적인 여건이나, 매출 구조나, 직원 수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봤을 때 '그래도 이걸 유지하고 지켜야 해'라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지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돌파구가 생겨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주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서로 강건해서 상호부조가 일어나거나 상호연계를 통한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규모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자 생존하기에 급급한 상태에서 이런 위기가 벌어지면 사회적경제의 연대, 호혜 이런 힘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더 헌신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조가 일반 영리 시장의 구조와 다르게 호혜와 연대를 통해서 유지, 지탱 가능한 안전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오래 버틴 만큼 더 심각한 피해나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게 현재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이나 지원제도 이전에 경제주체 간 협력적 과정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협력이 가능한 축적된 자기 잉여가 있는 조직이 사회적경제 안에 거의 없어서, 아무리 연대의 정신이나 가치를 내걸어도 그것을 실행할 현실적인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정태인 정부가 대출해주는 중소기업 자금이 있고 사회적경제 관련한 기금이 서울시, 화성시 등 몇 군데 있지만 심사 조건이 까다로우니 실제로 기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현재 자영업, 중소기업 지원 기금의 일부를 칸막이 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형석 그래도 잘 가동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인데, 150억을 증액했습니다. 개별 한도도 늘리고, 공급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관련 금융정책들 중 일부를 사회적경제기업 부분으로 별도 운용해달라고 건의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신청을 하

고 나면 심사하는 데 두 달 정도 걸리는 구조여서 급한 곳에서는 바로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회가치연대기금도 있지만 아직 많이 모이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모아놓은 세 가지 정도의 기금(한국사회혁신금융, 전국주민협동연합회 기금, 사회적경제공제기금)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현장의 필요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끌어와서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까지 채용해서 빠른 속도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간조직들을 키우고 정부가 이 조직들이나 다른 중계기관, 사회적금융 중계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면 일정 부분 보완,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우리 삶과 사회적경제에 미친 영향

사회 재난의 역사에서 빼놓지 않는 사례가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이때 교회가 다 무너지고 유홍 지역만 남아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다면서 계몽주의, 볼테르 등의 영향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해라는 건 우리가 당연시했던 전제나 통념을 흔들어버리는 일인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세계가 올지, 완전히 바뀌는 게 어떤 것일지, 사회적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변형석 저희는 여행업종이다보니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쪽입니다. 직원들이랑 휴업을 하고 한동안 쉬다가 2주 전쯤 워크숍을 하면

서 코로나19에 대해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어서 국내 여행이 가능한 시기,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기 등을 예측해보았는데, 국내는 6월 말, 해외는 내년 1월 정도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사람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갈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안 됐습니다. 종식되는 날 바로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과 영원히 회복이 안 될 것이라는,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불편함은 아마 영원히 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연휴 때 보았듯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필요에 따라 그동안 했던 일들이 곧바로 재개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불편함, 두려움 등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내재화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행을 놓고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태인 이 바이러스 자체는 방심하면 터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태원을 보면서는 느꼈고 미국이나 영국, 특히 유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메르스 이후 3T, 즉 검사하고 추적하고 치료하는 것을 법으로 분명히 했기 때문에(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점들도 있지만) 이번 일에 잘 대응할 수 있었지만, 유럽은 메르스나 사스를 전혀 겪지 않아서 안일한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치사율이 2.5% 정도였는데 의료 자원의 한계를 벗어나는 중환자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됐고, 락다운(Lockdown, 봉쇄조치)을 해서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방식의 대응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은 락다운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방역도 잘했고 경제도 상대적으로 1분기까지는 괜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듭니다. 생산시스템 자체는 금방 회복이 되겠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다 수출 대상국인 나라들 상황이 어려

워서 당장 2분기 수출이 마이너스 40%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제조업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난지원금 주는 데 3개월이 걸린 것처럼 대응이 느리고, 경제 대응 정책이 대기업지원금 등 위주입니다. 전국민고용보험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나왔지만 제도를 바꾸는 데 오래 걸릴 뿐더러 집권당도 미온적이고 이외에도 그린뉴딜 등 나올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다 나왔지만 실행에서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길현종 계속 생각해왔던 건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나라 걱정을 좀 덜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나라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민주화, 대북 문제, 정치에 대한 감시, 여기에 감염병이라는 요소까지 더 추가가 된 느낌입니다. 촛불 이후에 제가 바랐던 흐름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이나 자기 삶을 돌아보고 소소하게 만들어가는 재미와 행복을 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경제나 지역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보다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국가(연방 수준)에 대한 걱정을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사회적경제에 긍정적일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국가와 지역 사이에서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언밸런스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현재의 구조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의 전반적인 균형을 생각하면 우려되는 부분도 일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

회적경제 측면에서 보면 자기 동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거대 담론에 주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남습니다.

안인숙 저는 그것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중앙의 역할, 중앙 집중화된 권력이 큰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DNA나 경험도 있지만, 무력감을 느끼면 그건 민주주의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서 '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고용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고, 일상의 생활공간에서도 소비자로서만 존재할 뿐이고, 자기의 주도성이나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이나 구조가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의지적으로 재구성한다고 하면, 저는 핵심은 상품 세계, 즉 소비 영역은 줄이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인간이 자기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의지의 투쟁이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했을 때, 자본이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재빠르게 기술을 개발하고 자본을 투여해서 우리를 갈라놓고 못 만나게 하면서 자본이 만든 플랫폼 안에서 살게 하는 세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중심에 두고, 다가오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형석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사회적경제 당사자로서 스스로 반성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나 보면, 계속 정부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어떻게 하고 지원을 어떻게 해라 등등.

위낙 국가 주도로 되어왔던 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는 현실론으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사회적경제의 정신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정부에게 뭘 하게 해서 그것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발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건강하게 시민사회를 지켜내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국가가 잘했다 못했다고만 평가가 되고, 우리의 역할이나 능력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정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큰 틀에서 전략을 잘 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점 없어지고, 이러면서 국가 걱정을 더 하게 되는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성찰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길현중 코로나19라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라는 단위를 조금 더 낮춰서, 국가와 지역을 함께 생각하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면(그러기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좀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관점에서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인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 연설에서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다중심 접근”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문제든 중심이 여러 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 경찰제도가 나온가, 지역 경찰제도가 나온가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롬의 주장은 경찰 업무 중에 지방 자경단이 잘하는 업무가 있고, 광역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중간 단위의 주 단위가 할 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중

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회적경제나 공동체는 언제나 다중심성이 그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환경문제 해결에서도 다중심성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국제협약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개인이나 지방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개인과 지방, 지역공동체, 국가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 또는 시장과 국가 공동체 이런 식의 여러 중심이 연결돼야 합니다. 방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는 것이지만, 국가 방역 시스템이 있고 지역의 의료생협이라든가(원래 역할은 예방이지만) 지역의 거점들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방역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막아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환과 새로운 도전

사회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어떤 점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는 어떤 변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 전환의 계기나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이 있을지요?

정태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시장, 국가 시스템과 복지, 민간 보험 등을 연결하는 것을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를 생각해보도 국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린뉴딜이든 뭐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린뉴딜도 생태전환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류의 위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위치한 중심에서 참여를 할 때에만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업 문제나 그린뉴딜, 생태전환의 문제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얘기할 때 국가와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해서는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실업극복국민운동처럼 전 국민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 개념도 없을 때였지만, 그 때 사회적경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생겨났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든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는 운동을 직종 간 네트워크, 지역별 네트워크 등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문제도 국가에게만 맡겨 놓으면 한전이나 대기업이 나서서 동네 공터나 숲을 갈아엎고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지을 생각을 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를 주면, 주민들 스스로 어디에 만들면 좋을지, 태양광이 좋을지 풍력이 좋을지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실행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나서서 실행하면 민원 문제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기술적인 4차혁명을 빨리 도입해서 이 시기를 극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생태 위기나 사회의 위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려면 사회적경제와 지역이 나서서 생태전환, 그린뉴딜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형석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생태전환 같은 아젠다를 한국 사회가 끌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다 정부가 끌고 가기는 힘듭니다. 여기에 의지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 정부를

돌려싸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집합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린뉴딜만 봐도 신재생에너지 등을 끼워 넣는 수준이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는 관점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생태적 위기를 자초한 인간 활동의 결과인데 정부나 기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린뉴딜이 정부의 전면적인 기조로 들어서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양한 인식과 세계관을 가진 세력들이 그린뉴딜 관련 일을 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20년 전(외환위기 때)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강한 힘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약 10년 간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으면서 경험한 바로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영세한 조건 속에서 생존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이 동질적인 사고를 가진 집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람들이 생태전환이라는 아젠다에 모두 동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시민사회의 여러 세력들과 굉장히 폭넓은 연합, 공동의 전선을 형성하는 새로운 흐름이 필요한데, 생존에 힘써야 하는 사회적경제에서 그런 흐름은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태인 코로나19위기대응시민사회대책위가 꾸려져서 530여 단체가 모여 있는데, 사회적경제나 환경과 관련한 단체는 잘 안 보이고, 있더라도 누군가 주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환경, 사회적경제에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도 그렇습니다.

안인숙 IMF 외환위기 때는 대량 실직 사태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실업이라고 하는 크고 선명한 의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경제가 생겨나긴

했지만 정말 자기의 텃밭, 이것을 지켜가느라 힘들고 혹은 그것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의 칸막이도 크기 때문에 생협, 신협, 마을기업 등이 서로 교류하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생존을 넘어 이후 사회에 대응하는 공동의 전략이나 기조를 만들 수 있는 신뢰나 시스템이 허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경제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게 하는 환경은 외부에서 촉발되기보다는 시민 혹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문화 예술 분야도 정부의 재정사업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어서 정부가 사업을 중단하니까 매출이 뚝 끊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젊은 청년 문화인들이 눈을 돌린 게 일반 시장입니다. 우리 민족이 워낙 가무를 즐기다 보니 가수로 데뷔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삼백만 원 들여서 음반을 만들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자신들을 불러주는 또 다른 관계망을 스스로 찾은 것입니다. 획일화된 상품으로서의 예술문화 상품이 아니고, 사람들과 만나게 만드는 매개가 되고, 더 바란다면 사회적 소비로 발전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오히려 사회적경제의 변화를 촉발하는 것은 달라진 감수성 혹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현종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제3섹터가 다종다양하지 않고 아주 독특하게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지역이나 동네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조직이 아니고, 국가 등 보다 큰 담론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제3섹터가 국가 차원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지향성을 가지는데, 이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조직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정책 주요

테마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위기(세계금융위기 등) 때 다른 섹터에 비해서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일자리 관련해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에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계신 분들의 선한 마음에만 기대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부나 자원봉사, 민간을 통한 자원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연결돼서 자원봉사나 기부 수입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버텨볼 수 있겠지만, 사회적경제 전반을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공동체 내 주민들의 관심을 통해 기부나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고, 내가 지금 참여한 단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이 더 부각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1섹터(정부), 2섹터(시장), 3섹터(사회적경제)가 균형 있게, 아니 3섹터가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영역을 차지해야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로부터의 기부나 자원봉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형석 이번에 굉장히 칭찬할 만한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혁신파크 내에 있는 20대들이 은평구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 재난용품 등을 고민해서 긴급 재난용품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 동네 약국들과 협력해서 삼사백 명의 어르신들한테 이 패키지를 보내드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역사회 안에서 원래 일어났어야 하는 일인데 아무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친구들처럼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제도화된 시스템 안에서 제도적 전달 체계에 다 맡겨놓고서 시민사회는 그런 역할을 별로 했다는 것을 반증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하신 맥락에서 보면, 국가를 걱정하는 시민사회는 있는데, 진짜로 발 딛고 있는 지역, 나랑 같이 존재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한 시민의식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환경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고 기부와 봉사활동을 위해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아젠다가 던져져도 수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 가보면 연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밖에는 남아 있지 않거나, 도시나 농촌 상관없이 전부 이해관계로서 서로를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비관적이지만, 이것이 현재 지역 커뮤니티 단위까지를 포함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인숙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주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경제, 막연한 관계가 아니고 얼굴을 아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협은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얼굴을 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서로가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양쪽 다 윈윈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생협은 윈윈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경제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관계·연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위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에는 돌봄 조직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재가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관리 차원에서는 보다 인간적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보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제가 생기면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염병 재난이 계속된다면 국가 통제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효율성만을 위주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계속 경계를 해야 합니다. 효율성 위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을 뚫고 나가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전략이 관계의 회복이고 그것이 사회적경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이는 관계,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운동으로

사회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말씀 듣다 보니까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는 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이렇게 운동의 맥락이 있는데 사회적경제 문제로 들어오면서 운동이라는 말 대신 사업, 이런 말 많이 썼고 거기에 연계돼서 국가의 정책이랑 연계된, 활동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실 운동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운동이라는 프레임을 전면에서 내세워야 할까요?

길현종 운동이라는 말이 너무 비장하게 들린다면, 캠페인 같은 것입니다. 대대적인 캠페인이 있어야 하고, 그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 없이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태인 유럽에는 국가, 시민사회, 시장 모두 잘 작동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공동체가 살아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회적경제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 에밀리아로마냐는 국가, 시민사회, 시장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이해하더라도 유럽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곳이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데가 이 지역이었습니다. 아동교육, 성평등 등이 모두 1위이고 차별도 없고 서로 관계망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유럽도 잘하고 있었던 곳이었었는데, 특히 스웨덴이 지금 노르웨이나 핀란드에 비해서 10만 명당 사망자가 열 배쯤 많습니다. 스웨덴은 국가 복지가 발전했고 굉장히 성숙한 개인들이 이 문제를 참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기후 문제나 그린뉴딜 같이 스케일이 큰 문제는 국가 의 제화가 안 되면 아무리 개인이나 시민사회가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그린뉴딜 관련해서는 앞으로 10년 이상 생태전환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건물들, 우선 공공건물부터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층, 특히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그야말로 에너지 빈곤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전기가 싸니까 전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환경을 생각하면 전기 값이 올라야 하고 그러려면 먼저 노후 주택 수리가 필요합니다. 노후 주택 수리 사업은 엄청난 일거리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4차혁명과 관련해서도 사회적경제나 젊은 사람들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나 국가가 나서서 플랫폼을 만들고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산시는 배달앱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랫폼노동 관련 앱이나 세어링

(공유)하는 플랫폼을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면 노동권도 지켜지기 쉽고 플랫폼을 만드는 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 일자리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나 지역 운동이 이번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동시에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인숙 지역에서 좋은 나눔을 실천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돕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돕거나 서로 돕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입힐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의미한 실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훌륭한 플랫폼이나 사회적경제기업 하나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므로 여기에도 역시 관계 혹은 연대의 과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지역 단위로 모이든, 업종 단위로 모이든 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한 줌이든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 한 줌이든 간에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자본이나 실력이나 실천이 증폭되는 경험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으로 지역 차원에서 이종 협동조합 간의 연합회가 허용된 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저는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면 자동적으로 지역 단위의 다양한 중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작을지도 모르지만 상호 연결되어서 자기 역할을 지역에서 찾는다면 훨씬 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리더십의 문제도 있고, 제도나 정책의 영향도 있으며, 야생성의 상실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변형석 생태계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관계를 보면 생태계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분절되어 있고 어딘가로 향하는 단선의 라인들은 있으나 상호 교차되는 라인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이해의 정도, 공감의 정도 내지는 협력의 수준이 낮은 상태여서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업종 단위라던가 지역 단위에서의 연합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한편에서는 주목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의도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규모 있는 형태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당사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움직여야 되므로 시민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건 현재 20대에서 30대까지 청년들은 이런 이슈들과의 결합을 독특하게도 소비 행위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구매하려고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구매로 인해 나온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NO JAPAN’ 불매운동이 성공한 것도 청년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적 소비, 윤리적 소비에 참여시킬 굉장히 훌륭한 조건은 만들어져 있다고 보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공유경제를 ‘쏘카’를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쏘카’는 그냥 주식회사인데 편리하니까 주식회사의 차를 렌트해서 쓰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청년들이 진정한 커뮤니티 방식의 공유경제 경험에 참여했다면—외국에는 차량 공유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비영리 조직이 반을 넘는데—완전히 달랐을 거

라고 생각합니다. 공유경제의 원래 취지에 맞게,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행위에 동참하면서도, 금전적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만들어졌다면 '쏘카'를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사고 전환이나 공유경제에 대한 긍정성이 만들어졌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주식회사가 해왔던 것에서 사회적경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옮겨 가게 되고, 의도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이동하는 경험들이 모이게 되면, 자발적인 생태전환의 아젠다를 흡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청년층에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 희망이 있습니다.

길현중 저는 주체별로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나 중간지원기관, 협회 등이 주류 언론사와 강한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를 축적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례의 좋은 점을 많이 알려야 사람들이 사회적경제가 좋다는 걸 알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알아야 확신이 되고 '아, 사회적경제가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동네에 맛있는 빵집 하나가 생기니까 참 좋구나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생겨야 합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환경문제나 커뮤니티 문제에서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도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나 장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경제 규모의 성장도 필요합니다. 덩치가 커야 사람들이 관심

을 가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형석 사회적경제 영역이 얼마 전까지 정부와 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시민들은 잘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득도 안 되었고, 당위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집회에 참여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태전환이나 그린뉴딜 등 환경과 관련된 아젠다로 간다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싸워왔던 종류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정태인 생태전환은 굉장히 큰 아젠다입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 같은 아이디어도 시민사회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실현하기 힘듭니다. 많은 정책이 분절되어 있고 제도는 복잡합니다. 고용이라는 문제도 사회적경제가 깊이 관여돼 있는 문제입니다. 고용 문제 해결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연대 정신에 의해서 일자리를 같이 나누는 것도 사회적경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는 많은 것이 변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태전환과 그린뉴딜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관계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주 태 규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이사장

코로나19를 이겨낼 소중한 치료제,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격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

“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예고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람 중심의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
사회적경제는 협동과 연대의 힘을
모으고 나누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의 아젠다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해야 한다. ”

불확실성의 위기 상황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하굣길을 맞으러 갔다가 그날따라 심각한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쓰고 운동장에서 뛰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 걱정과 미안함이 엄습했던 기억이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계절을 따지지 않고 찾아오는 불청객인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지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 중증호흡기증후군가 창궐했을 때와는 비교조차 어려운 파급력을 지닌 코로나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해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비단 방역 부분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그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선제적인 방역 활동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사투로 일상을 유지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임을 감안한다면 세계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을 맞이하여 수출 주도의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도 막대한 악영향을 받고 있고, 내수마저 침체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최근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97년 IMF 외환위기를 뛰어넘는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위기로 민간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 이후에는 기후변화 식량위기가 올 것이다’ 등 온통 걱정과 부정적인 전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

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내몰린 상태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다. 신문 지면이나 뉴스 화면에서만 볼 수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지난 3개월간 체험할 수 있었다.

필자는 가깝게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1997년 외환위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았다.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의식주 해결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은 두 번의 경제위기를 끝으로 작별을 고했다.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어쩌면 앞으로 그 간극을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은 구조조정에 앞장섰고, 그 하청기업의 줄도산으로 일자리가 줄고 생활수준은 급격히 나빠졌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자영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내몰렸고, 이는 수많은 신용불량자와 소득 불평등을 양산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위기를 맞은 지금은 어떨까?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지원—비상경제회의’(이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유례없는 경기부양과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비상경제회의의 주된 키워드는 고용이다. 물론 앞선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고용’이 화두가 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이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있을까 싶다.

그러면 협동과 연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회적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어떨까. 전국에서 활동 중인 55개(부문과 지역 연합조직 포함)의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의 연대조직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발 빠르게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이하 대응본부)를 구성하여 대응했다. 물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부문별·지역별 사회

적경제 유관 기관들이 각각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건의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나, 그것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본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함께 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연대회의는 대응본부의 조직을 조사통계반, 모금반, 사회적소비반으로 나누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사통계반은 올해 2월부터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타격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피해 상황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극복 지원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모금반은 피해 정도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2020년 3월 18일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 회의 모습

돕기 위한 움직임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피해를 조금 이나마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당사자와 유관 기관의 자발적인 펀딩과 캠페인 운동을 조직했다. 사회적소비반은 생협 조직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상호 구매하고 공공구매와 연계하여 얼어붙은 내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반별 세부적인 활동 내용과 시사점은 무엇일까.

조사통계반은 먼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지역별/부문별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취합했는데, 저마다 조사한 항목과 내용이 달라서 기관 현황 외에 8개 항목으로 설문을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응본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했다. 3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위치한 사회적경제 조직 365개소에 대한 피해 상황과 요청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많은 시사점과 희망적인 면을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 피해 조사

기업명	개업 연월		
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경남·제주		
사회적경제 유형	① (예비)사회적기업 ② (사회적)협동조합 ③ 마을기업 ④ 자활기업 업종 ① 농·축산·어·임·광업 ② 제조업 ③ 도·소매, 유통 ④ 요식업 ⑤ 문화·예술·관광 ⑥ 교육·보육 ⑦ 보건·복지·건강 ⑧ 청소·환경·재활용 ⑨ 기타 서비스		
업종	총자산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1. 전년 동기대비 1분기(또는 2~3월) 매출 감소 비율

- (1) 감소율 20% 내외 (2) 감소율 40% 내외 (3) 감소율 60% 내외
- (4) 감소율 80% 내외 (5) 기타

2. 매출 감소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복수 선택)

- (1) 인건비 (2) 임대료 (3) 금융조달비용 (4) 원재료비 (5) 세금 등

3. 매출 감소로 인한 긴급 운전자금 필요 유무?

-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 않다

4. 긴급 운전자금 필요시 그 규모는?

- (1) 3천만 원 미만 (2) 3천만 원~5천만 원 미만 (3) 5천만 원~1억 원 미만
(4) 1억 원~2억 원 미만 (5) 2억 원 이상

5.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에서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 3개 중복 선택)

- (1) 공공부문 판로지원
(2)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활성화
(3) 긴급자금 대출/지원
(4) 마스크/소독수 등의 방역서비스 제공
(5) 기타(자율기술 :)

6.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로 고용조정을 고려하고 있나요?

- (1) 있다 (2) 없다

6-1. 고용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수준인가요?

(2019년 12월 근로자 기준)

- (1) 10~30% 감원 (2) 30~50% 감원 (3) 50~70% 감원
(4) 70~90% 감원 (5) 100% 감원

7. 정부에서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대책 중 현장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서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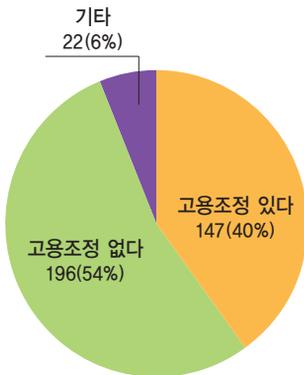
(예시 :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긴급운전자금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접수와 심사 기간이 길고 심사 결과 여신 한도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음)

8. 현재 발표된 내용 외에 정부/지자체/지원기관에 요청할 사항은? (서술식)

조사통계반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큰 시사점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고용 유지에 대한 의지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응 정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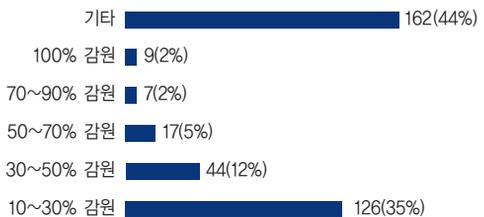
〈그림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 조직 피해 현황조사 결과 : 고용조정 의사/ 규모 현황

고용조정 여부	개수	비율
있다	147	40%
없다	196	54%
기타	22	6%
합계	365	100%



피해조사 응답 : 고용조정 의사 여부, n=365개소

규모 현황	개수	비율
10~30% 감원	126	35%
30~50% 감원	44	12%
50~70% 감원	17	5%
70~90% 감원	7	2%
100% 감원	9	2%
기타	162	44%
합계	365	100%



피해조사 응답 : 고용조정 시 규모 여부, n=36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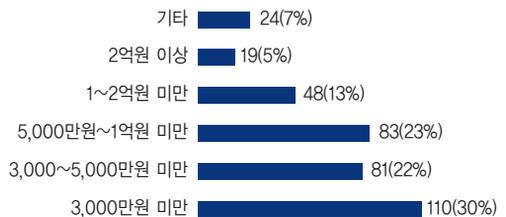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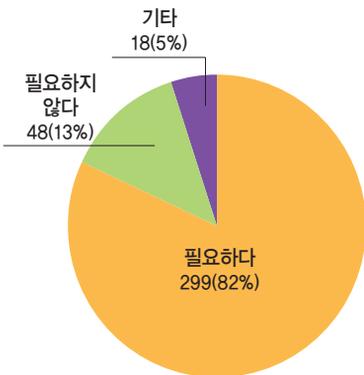
난맥상이 어느 지점에서 발생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365개 사회적경제 조직 중 고용조정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있다(40%)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고용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할지라도 10~30%의 감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비율이 3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 사항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을 하기보다는 현재 인원을 유지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용조정을 고려하더라도 근무나 고용의 형태를 협의하여 조정하는 등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실시하겠다는 서술식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는 전 업종에 걸쳐 나타났다. 매출 감소로 인한 애로 사항으로 인건비 부담(80%)이 가장 크다고 답했으며, 2순

〈그림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 조직 피해 현황조사 결과 : 긴급운전자금 필요 여부/규모 현황

필요 여부	개수	비율
필요하다	299	82%
필요하지 않다	48	13%
기타	18	5%
합계	365	100%

규모 현황	개수	비율
3,000만원 미만	110	30%
3,000~5,000만원 미만	81	22%
5,000만원~1억원 미만	83	23%
1~2억원 미만	48	13%
2억원 이상	19	5%
기타	24	7%
합계	365	100%



피해조사 응답 : 긴급운전자금 필요 여부, n=365개소

피해조사 응답 : 긴급운전자금 규모, n=365개소

위로 임대료(51%), 3순위로 세금 납부(46%) 부담을 꼽았다. 긴급운전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2%였으며, 그 중 3,000만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 사이의 자금 지원 규모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를 차지했다. 정책당국에서 시급히 지원했으면 하는 사항으로는 공공부문 판로지원(35%)과 긴급 소액자금 지원(31%), 인건비 지원(25%) 등이 차례로 꼽혔다.

긴급하게 자금이 조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현재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정책 금융과 시중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고 기회비용이 많아,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더욱 큰 시련으로 작용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부문별 협의회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여 자칫 행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건의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민간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는 앞서 우리가 경험했던 경제위기 때와 같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오게 된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어렵지만 고귀한 의지는 전 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로 ‘고용조정 zero 선언’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응본부는 지난 3월 27일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우리 함께 위기의 강을 건너자—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조정 0%를 선언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것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고용연대기금 조성을 천명하고, 공공부문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우선구매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응본부 모금반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당사자와 유관 기관 등 231개의 기관에서 고용조정 제로 선언에 참여하였고, 약 6.2억 원의 펀딩

사회적경제 코로나대응본부 공고

**『코로나 대응 고용조정0%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 대응 고용조정0%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0. 04. 20

사회적경제 코로나대응본부

‘코로나 대응 고용조정 0%를 위한 사회적경제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출처 :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

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생협을 중심으로 홍보 기획전, 특별 판매전 등의 행사를 기획하여 조합원과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사회적경제 활동

연대회의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극복 활동 외에도 지역별/부문별 주체들이 모여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연대와 기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공감씨즈’다. 대구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의료진과 봉사자의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고, 후원 물품을 지원한 사례는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지역을 불문하고 소

독·방역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요양원 등에 무상으로 소독·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 용품을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밖에도 도시락, 커피, 다과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품을 기부하는 활동이 이어져 지난 3월 19일 기준으로 기부 건수는 총 212건으로 확인되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일이 없어 놀아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 디자인이니 이 재능으로 BI, CI 없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BI, CI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영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라고 말하는 사회적기업가의 얼굴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짜 사회적경제다운 모습일 것이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위기 상황을 겪었으며, 다시 새로운 위기 상황의 진입로에 서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활 방식의 변화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의도한 바 없는 낯선 경험을 하게 된 시기였다.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해진 지금의 시기가 공동체의 의미와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지역이 기반이 되는 사회적경제의 본질적 특징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희망의 시기라고 믿고 싶다.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사회적경제가 만들고, 지키고, 서비스해야 한다. 지역을 재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만큼 지금의 위중한 시기에 소중한 것은 없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활동은 지금껏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하지 않은 적이 없다. 많은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지역을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예고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람 중심의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지금의 사회적경제

는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 때와는 다르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협력 파트너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협동과 연대의 힘을 모으고 나누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의 아젠다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시장은 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화답해야 하는 소중한 시점이다.

김재경

(사)커뮤니티와경제 소장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경제의 대응

: 대구 사례를 중심으로

“ 재난의 시대에 사회적경제인들은 사회적경제가 가져야 하는 사회적 유용성과 자발성의 가치를 잘 살려내면서 ‘시민들의 욕구에 잘 부응하는가’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여러 주체에 의한 혁신적 협력 실험을 통해 시민 욕구에 더 다가가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대안도 꾸준히 모색해나가야 한다. ”

코로나19가 시작되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5개월을 넘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로 퍼져 27만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공장·기업·학교·시장 등 우리의 ‘소중한’ 일상은 멈춰 섰다. 사람들이 넘치던 거리도 텅 비고, 상가는 문을 닫았다. 근 3개월 남짓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으며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경제인들 모두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는 더 가중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힘들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 충격 속에서 정부는 신속히 고용안정지원금, 세제 혜택, 정책자금 등의 많은 재정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턱없이 낮다.

이 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월 19일부터 5월 중순까지의 대구 사회적경제의 대응에 대해 기술한다.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이 재난의 시작을 사회적경제인들은 어떻게 ‘함께’ 대응했는가를 기술할 것이다. 어떠한 평가도 선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매듭 하나 짓는다는 생각으로 정리해본다.

대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다

대구는 2월 19일 신천지 대구교회 출신 신천지 환자의 무더기 전파 사례가 알려지면서 고립무원 지역으로 전락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월 15일까지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섰고, 대구는 완전히 ‘정지되었다’. 당시 대구 시민들은 악화되는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

시간 단축(11.4%)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업종 별로는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 비해 서비스업이 휴업(39.5%)과 재택근무(36.1%) 조치를 가장 많이 실행했으며, 정상 운영은 5.9%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피해 현황을 보면, 대구 전체 사회적기업의 2월 매출액 평균 감소율은 63.5%이며, 예상되는 3월 평균 매출액 감소율은 84.2%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업들이 예상하는, 전체 기업의 총 매출액 평균 감소율을 보면, 3월 중에 제조업(43개사)이 83.4%로 가장 큰 폭의 매출액 감소를, 다음으로 서비스업(120개사)이 77.4%로, 전체 업종 모두 3월 매출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기업의 납품/용역 계약 취소 총액은 2월 20억 1,008만 원이었으며, 3월까지 지속되면 30억 16만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커져 향후 1년간 기업 운영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¹

사회적경제인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일들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우선 신속하게 사회적경제 관련 중앙부처에 당면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민관 공동으로 긴급 제안을 했다.²

제안의 내용은 ①기업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지원(인건비와 임대료) 필요, ②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자금 필요, ③서비스 업종의 정상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등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59.5%)하여 33.3%의 기업이 휴업에 들어갔고, 유급휴직, 연차휴가 등 인건비 부담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따라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출 부담을 줄여 즉각적인 경영 상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1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2020년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2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코로나 이후 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응 현안」.

다수 의견이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정책자금의 필요하다는 의견의 근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수익 구조나 대출 상환 능력 등의 기업 평가를 통해 직접 대출을 시행하고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은 늘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데 있었다. 취약계층 고용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상 정책자금 선정 시 기업 평가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업계에서는 당연시했다. 이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거나, 특징적인 사회적 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적합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정책자금이 긴요한 상황임을 기술했다.

마지막으로는 대구 사회적경제기업의 산업별 특성에 따른 지원을 제안했다. 이는 '서비스업종의 정상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이었는데 제안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구 사회적경제기업은 대구광역시의 산업별 분포와 유사하게 서비스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히 서비스업은 업종의 특성상 타 업종에 비해 휴업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었다. 정상 운영의 비중이 매우 낮고, 차후 납품/용역 등 계약 취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기업 경영은 물론 고용 유지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 내 일반적인 취약계층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내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도 크게 줄어들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예술, 교육, 식품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과 관련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사업을 구성하여 취약계층 등으로 사회적경제 서비스 업종에서 이를 소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는 취지였다. 바우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비 진작 및 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상승으로 경영 상황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했었다.

민들레 흠씨처럼 이웃을 돌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하는 취약계층의 위기도 크게 다가왔다. 2018년 기준 대구 사회적기업은 평균적으로 총 근로자 수 대비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47.8%로, 기업별로 약 3,300여 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³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의 일상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겨우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나 있던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금 움츠러들게 될 것은 명약관화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적경제인들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다. 기업적 손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함께’ 가는 길을 위해 가까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위로와 응원을 보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초기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보다, 먼저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지난주보다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준비한 도시락이 모자라 빵과 음료를 돌리고 마스크를 들렸습니다. (...) 이렇게라도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느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 준비한 도시락이 모자랍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받아 온 빵봉지 꾸러미가 있어 그것으로 돌리는데 그래도 딱 한 사람이 빈손이었습니다. 그 빈손 앞에 저는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지난 2월 26일 대구마을기업협회 밴드에 올라온 글이다. 글쓴이는 쪽

3 (사)커뮤니티와경제 (2019). 「2019년 대구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방 주민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건축·목공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해 온 ‘다울협동조합’의 대표였다. ‘다울협동조합’은 2월 18일 이후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염을 우려해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자, 가장 먼저 도시락을 들고 대구역 뒤편 광장으로 나섰다. 도시락 50개가 70개가 되고, 100개, 120개가 되는 동안 노숙인지원센터는 물론 ‘(사)대구마을기업연합회’, ‘우렁이밥상 협동조합’, ‘달콤한밥상 협동조합’, ‘아가쏘잉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손을 보탰다. 장소는 반월당 네거리와 동대구역으로 확대되었고, 후원 물품도 마스크, 손소독제, 간식 등으로 다양해졌다. 디자인 업체인 청년 마을기업 ‘레인메이커’는 이런 활동을 영상으로 옮겼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노숙인뿐만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는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너도나도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아가쏘잉 협동조합’은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재사용 가능한 천마스크 600개를 제작해 달서구의 복지관과 이주노동자센터에 공급했고,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을 위해 위생용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된 키트 120개를 제작해 전달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보기공방협동조합’은 수제 마스크 200개를 동구청에 전달했고, “기부도 중독인 듯하다”며 안심종합복지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행복주택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500여 개의 면마스크를 추가로 지원했다. 신세대 감각을 살리며 동네 반찬가게를 운영 중인 ‘달콤한밥상 협동조합’은 자원활동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간 동구의 장애우들에게 주 2회 도시락을 배달했다. 이러한 활동을 옆에서 본 회원들의 선행도 이어졌다. ‘달콤한밥상’의 한 회원은 자가격리 장애우들에게 보내는 도시락에 손소독제를 함께 보냈고, ‘동네책방협동조합’ 내 독서일기 클럽에서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을까?’라고 자문하면서 의료진에게 음료와 위생용품을 보냈다. 월 매출 1억 원이 넘는

‘청소하는마을’은 매출이 뚝 떨어졌지만, 취약 지역인 복지관, 어린이집, 청년 카페 등 20여 곳의 전문 방역을 지원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한 지원 활동도 이어졌다. 수제 떡을 제조·판매하는 힐링떡공방 ‘(주)콩지팥지’는 동산병원 의료진 앞으로 영양떡 200개와 더치커피를 보냈다.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반찬배달 사업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설립한 ‘(주)새벽수라상’은 3월 12일부터 일주일간 대구의료원에 하루 30인 분의 도시락을 배달했고, 이후에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달서구 세강병원으로 도시락을 배달했다. ‘동네 책방협동조합’은 동네 인근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세탁이 어려운 의료진을 위해 남녀 양말 1,000켤레와 위생장갑, 세면도구 등을 공급하기도 했다.

타국에서 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도 있었다. 성서공단 인근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사)성서공동체FM’은 코로나19 특별방송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기증받아 이주노동자센터로 보냈다. 2월과 3월에는 모든 마스크가 품귀였고, 현장에서 직접 일을 구해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마스크가 없으면 취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성서공동체FM’을 통해 지원받은 마스크를 갖고 있던 덕택에, 3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강제 추방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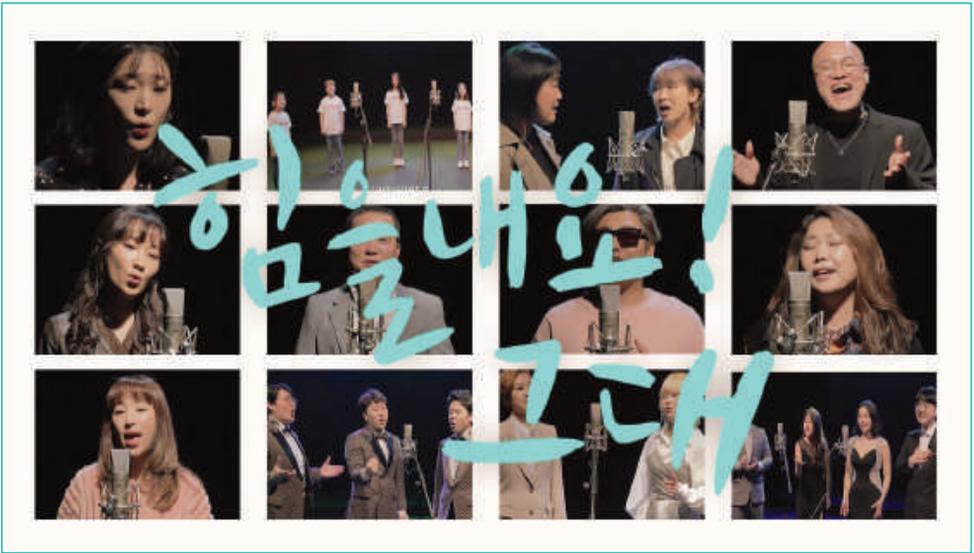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당시 의료 지원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의료진들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통째로 내놓은 기업도 있다. ‘(주)공감씨즈’라는 사회적기업이다. ‘공감씨즈’는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 3곳 중 2곳을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무상으로 내놓았다. 1인 1실 기준으로 최대 15명까지 투숙하도록 제공했고, 총 50일간 564박을 제공했다. 사실 대구는 코로나19 대량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는 대구를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맞을 준

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시점에서 “대구까지 온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모텔 같은 데는 숙소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힘을 보탬 수 있는 건 뭔가 고민하다가”⁴ ‘(주)공감씨즈’가 나선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졌고, 수년 전부터 공감씨즈와 교류하던 일본 민간팀도 후원을 했다. 후원품은 추어탕, 곰탕, 홍삼, 방역용품, 스트레칭기구 등 다양했는데, 의료진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탁, 식사 등 생활 지원에 투명하게 사용했다. ‘(주)공감씨즈’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면서 대구의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대구를 알리는 일을 하는 여행·관광·숙박업을 하는 기업이다. ‘(주)공감씨즈’도 이번 코로나의 타격을 적잖이 받았다.⁵ 코로나19로 인해 두 달 동안 영업을 못해서 5,000여만 원 적자를 보고 있고, 직원들은 절반의 월급을 반납하는 등의 경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공감씨즈’의 대표는 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코로나로 우리 기업은 간부들 급여 30~50% 삭감, 무급휴직 3명, 게스트하우스 스텝 주 2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며 버텨가고 있다. 다행히 지난 7년간의 작은 역사를 통해 구성원들을 평가해서 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고통을 나눠 지는 방식으로 고난 극복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급여가 반으로 줄고 근무시간이 반으로 주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해고 아닌 해고의 상황이 오겠지만 이러한 고통 분담으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며 새로운 매출 확대를 위해 밤낮없이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극복해보자는 우리 기억 속의 긍정의

4 매일신문 (2020.3.3),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22918323452027>.

5 지난 3월 아시아개발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매출 감소가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경북 문화예술 사회적기업들이 제작한 영상 <힘을 내요! 그대>

DNA를 불러오기 위해 애쓰고 있다.⁶

‘(주)공감씨즈’처럼 크게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업계도 연대의 행동에 나섰다. 모임이 취소되고, 행사들이 연기되면서 대구 문화예술 분야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⁷, 재능 기부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시작은 ‘대구소셜캠퍼스 온’에 입주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MS엔터테인먼트’와 ‘(주)컬처팩토리아지트’가 대구·경북 시·도민을 위로하기 위한 사업을 (사)대구사회적기업협회에 제안하면서였다. ‘힘을 내요, 그대!’ 프로젝트의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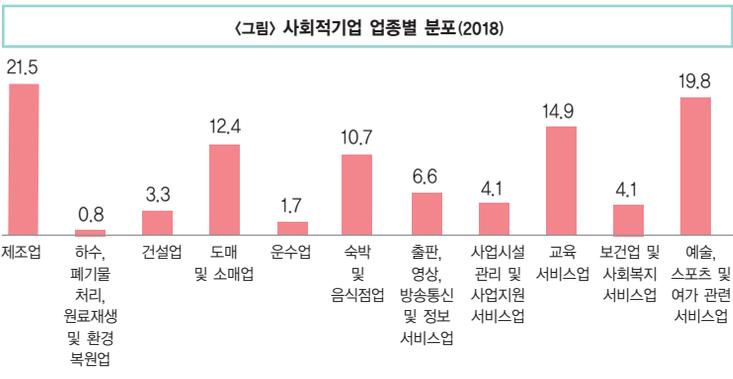
6 허영철 (2020. 4. 7). 「우리 기억 속의 긍정의 DNA」,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www.dgse.kr/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50

경북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8개사 14개 뮤지컬 팀이 참여, 퓨전음악, 팝페라, 인디밴드, 트로트, 재즈, 합창단까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 간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각 팀들은 시간대별로 구분해 노래를 녹음하고 영상을 촬영했고, 유튜브로 음원과 영상을 공개했다. 희망 가득한 가사와 멜로디로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이밖에도 예비사회적기업인 '(주)희망정거장'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무관객 콘서트로 3번에 걸쳐 열면서 온라인 생중계를 하기도 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생사를 같이하는 중간지원조직도 작은 힘을 보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은 잠시 중단되는 듯 보였다. 기업들은 힘들어했고, 대구시 행정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간지원조직도 사태의 변화를 지켜볼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는 다른 해법을 만들고 행동해야 했다.⁸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7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3월 18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발표에 따르면 금년 1~4월 취소·연기된 행사는 2,500여 건에 규모로는 약 600억 원에 이르고, 예술인 10명 중에 9명은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문화예술 관련 기업은 대구 전체 사회적기업 중 약 19.8퍼센트를 차지하며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업종이다. (사)커뮤니티와경제 (2019). 「2019년 대구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기업들에게 전화하고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물었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했다. 기업들의 피해 현황과 예측 피해 상황, 제도권 내에서의 긴급 요청 사항, 정책적 제안 사항 등을 묻고, 연일 발표되는 유관기관 정책들을 모니터링했다. 현장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대응 속도에 따른 기업의 혼란이 컸으며, 지원 정책과 현장이 겪는 괴리로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었다. 경영 애로에 대한 대응 체계가 턱없이 부족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내려고 ‘좌충우돌’ 뛰었다. 현장 모니터링 결과와 개선안을 해당 부처와 기관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기업들의 민원을 수합 정리하고 신속히 대안을 찾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TF 대책회의에 부문별 지원기관(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실무 책임자도 동석해 논의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11번가 상생장터와 우체국 홈쇼핑을 사회적 경제 전문 판로유통채널인 ‘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와 함께 뚫는 노력

8 당시에 중간지원조직 역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다. 중간지원조직은 당사자들의 새로운 시도에 지지를 보내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자율’과 ‘분산’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면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당사자 조직들의 위기를 목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간지원조직의 한 활동가는 내부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재난 환경 속에서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코로나는 기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왔던 습관과 수칙들을 변화하게 하고 또한 지역사회와 경제 구조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전환의 시대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다만, 유연하고 투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이며 신속하게 대처하고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의 경제도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의 사회적경제 현장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기관의 지원은 제한적이고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의 노력과 결과를 고민하고 과정과 결과를 현장과 잘 소통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과 과정들을 현실로 받아들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IGHT UP 대구!

코로나19로 어두워진 일상에 불을 밝힐 때

대구 사회적경제 X wadiz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삶이 더 위태로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사업 중심의 경제, 대구 사회적경제인들이 선순환 펀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펀딩 소개

- 간접으로 돌려막힌 기업으로 노숙인, 빈곤가정에 입양한 대구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
- 친밀한 계약한 커리어즈 전문 위탁도 제공

펀딩구조



후원기간 : 4. 14일 ~ 4. 30일(일) 직영타인

문의처 : ☎ 0213-256-4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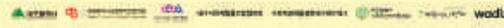
참여하기

- www.WADIZ.kr 접속 혹은 모바일폰으로 QR 코드 스캔
- 로그인(회원가입)
- Light Up 대구 참여 > 프로젝트(후원) 선택
- 후원 옵션 선택
- 연납 참여

QR코드 스캔하기



QR코드를 모바일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와디즈 펀딩 프로젝트

을 했으며, 공공 민간기관과 연계해 긴급 금융지원의 방법을 전략적으로 모색했다.

동시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 활동에 함께 힘을 보탰다. 온라인 펀딩 사이트 와디즈(www.wadiz.kr)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두워진 일상에 불을 밝힐 때, Light Up 대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펀딩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취약계층(노숙인과 빈곤가정)

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0만 원 기금 마련이 목표였는데, ‘(사)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사)대구마을기업연합회’, ‘대구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대구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등 사회적 경제 분야의 대표 조직들도 가까이 동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기금은 본래 취지대로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인데,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부 를 넘어 사회적경제가 지역과 함께한다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을 보여주는 사례”⁹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 중이다.

소통과 합의로,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은 개별 기업들의 임의 협력을 넘어 조직적 협력을 위한 연대 활동으로 이어졌다. 대구사회적경제 통합 연대체를 지향하는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준비위원회’와 ‘(사)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코로나19 극복기금 모금활동’을 통해 대구 사회적경제인들로부터 성금 4,356만 원을 모았다. 이 성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지역 6개의 청소년·청소년 쉼터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대구이주민선교 센터로 전달되었다. 모금 과정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이 300여만 원의 출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병원비도 지원했다. (사)대구마을기업연합회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고, 기초 단위 사회적경제협의체인 ‘(사)동

9 이로운넷 (2020.4.3). 「대구시-대구사경센터, 코로나19 이겨내는 'Light Up 대구!' 와디즈 펀딩 진행」.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89>

구사회적경제협의회’, ‘달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는 회원사들의 후원 물품과 기금을 모아 의료진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전달했다. 대구 사회적경제 부문별 네트워크도 특성에 맞게 나눔활동 영역을 넓혀 갔고 상생의 관계를 축적해 나갔다.

의미 있는 것은 2019년부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온 ‘대구 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실질적인 수평적 통합 연대체로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 통합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구 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는 2019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는 11월 하순부터 전국 사회적경제지역협의체 현황 조사(11/25~12/13)를 실시, 지역 5개소 이상의 인터뷰를 시작했다. 동시에 대구 당사자 조직 실태조사와 함께, 대구에서 활동하는 부문, 기초, 연계 단위 16개 조직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후 12월 24일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해, 조직화의 방향과 위상, 명칭을 결정한다. 가칭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로 명명하고, 2020년 4월 초 총회를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총회 개최가 무산되었다.¹⁰ 그러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3월 15일 정부는 대구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취약 계층을 포함, 대구시민 전체가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확산으로 경제·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사태 안정 이후에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했다. 기존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실험과 행보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이었다.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는 3월 31일 대구시 당사자 조직,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및 관련

10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책 TF’ 3차 회의에서 5월 26일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등 민관 공동으로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책 TF팀'을 구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을 하기로 결정한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7월까지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서의 TF팀에 특별대응분과를 설치,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 부문 조직으로부터 피해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취합하여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았지만, 수평적 협의에 바탕을 둔 열린 통합 연대체로서의 정체성에 입각해 긴급 당면 현안을 공유하고 나아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역할로 자기규정을 한 것이다. 활동의 첫 시작으로 우선적으로 대구 사회적경제에 도움을 준 전국 사회적경제에 도움 물품을 공개, 잔여 후원 물품의 배분 원칙을 공유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책 TF팀'은 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코로나 피해지원 특별대응분과를 운영하되, 민관 거버넌스 구조로 분과를 구성하고 피해 기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로 결의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시장 변화에 따라 기업 역량 강화 및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온라인 시장의 입점 경험이 있는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경험이 없는 기업에게는 컨설팅, 사업개발비 지원, OEM-ODM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자원 연계 등을 제공하자는 데 합의를 모은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여행·관광, 교육·기타 서비스, 문화·예술, 일반 제조·유통, 식품·먹거리 등의 업종별 간담회를 정례화해 피해 현황과 경영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지원 정책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사업화 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기로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 속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 대구 사회적경제인들은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조직화를 이루어냈다. 코로나 사태 발발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프로세스가 그것을 보여준다. 3월 초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대구 부문-지역별 협의회¹¹’ 등과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내 모든 주체들이 동참하는 ‘거버넌스형 위기관리’ 형태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회의를 거듭하면서 연대 활동 속 조직화를 자연스럽게 이뤄낸 것이다. 달라진 환경에 맞게 스스로를 재조직하는 것, 이것이 자기 개혁 능력 일 것이다. 대구 사회적경제인 등은 서두르지 않고 확실하게 단계를 밟아 나가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중요한 동행자이자,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 회원으로 참여하는 교수 중심의 ‘대구연구자네트워크’에서는 3월 31일 코로나 대응 대구 사회적경제인들의 공헌 활동을 조사, 기록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구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에서는 다른 활동을 줄이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고용 유지 노력, 의료진들에게 숙박시설과 식사 제공, 기부금 전달, 취약계층에게 보호장비 및 식사 제공 등 자발적인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백서로 제작하고 비용은 ‘대구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누구 할 것 없이 각각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 할 수 있는 만큼 집중해 상호 보완적으로 퍼즐을 맞춰나가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이 갖춰나가고 있는 것이다.

11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남구사회적경제협의회, 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중구사회적경제협의회, 수성구사회적경제협의회, 달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달성군사회적경제협의회 (사)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대구마을기업연합회, 대구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대구·경북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협의회,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활성센터, 대구사회적경제연구자네트워크, 사회적경제활성화대구네트워크,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스스로 사회적경제를 확인하다

석 달에 걸쳐 발생한 일련의 대구 사례들은, 대구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 당면 문제에 대응하고 현장 활동을 통해 더 많이 사회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와 세계,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안목과 호혜적 관계망을 확보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난 상황에서 이윤 획득 이상으로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결사체 활동의 특성을,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확장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또한 위로와 연대로 대응하는 방식들을 통해, 사회적경제인과 사회적경제 조직 스스로 상호 돌봄을 통한 ‘사회를 바꾸어가는 힘’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키워내고 있었다.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논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시행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인 스스로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을 체감하고 사회적경제인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세상을 돌보고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도 했다. 사회적경제 스스로 현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을 거쳤다고 감히 정의하고 싶다.¹²

대구 밖의 사회적경제인들도 대구 사회를 소생시키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발 빠르게 연대의 힘을 보여주었다. 대구 사회적경제인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긴급지원’용(‘코로나 대응 고용조정 0%를 위한 임대임차료 지원사업’)으로 1억을 내놓았다. 매년 민간 교류를 통해 우호를 다지고 있는 광주에서도 대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치 1톤을 포함한 먹거리와 각종 위생용품을 직접 트럭에 싣고 달

12 소외된 이웃을 찾아 모금 배분 활동을 한 ‘위드협동조합’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말한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언젠가는 멈춰지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변화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전 지구적인 사랑, 시민적 형제애라는 것들요... 그리고 그것들이 살림살이 경제로서 실천되고 조직될 때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들요.”

http://www.dgse.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6

려왔다. 광주 외에도 제주, 전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대구를 위한 물품 기부가 이어졌다. 재난의 현장에서 ‘연결’과 ‘공유’의 꽃을 피웠다.

사회적경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

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 대해 예측이 어렵다. 계속해서 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가동시켜 시급히 운용 가능한 지원정책을 발굴, 제안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촉발시킨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와 충격을 줄이는 대응만 찾기에 역부족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환적인 사회적경제의 도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대구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 복지 실행 수단으로 보던 시각을 벗어나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통로로 공동체 문제를 일상에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로와 연대로 삶의 활력과 인간적 자부심을 만들어내는 거점이기도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점점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에서 스스로 돕겠다는 자조意識과 이를 도와주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제 지금까지의 사회적경제의 문제를 냉엄하게 진단하고 사회적경제가 갖는 가치 중심으로 사회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이번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졌다.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재난, 안전, 돌봄, 생태 등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좋은’ 고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IT, 골목상권

등과도 연계해 호혜적 사회적경제가 우리 삶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도 융복합적 방식으로 발굴하고 연결해야 한다. 크고 작은 사업적 연대를 통해 지역에 협력을 안착시킬 시스템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지역력을 구축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성공은 작은 단위, 지역에서의 성공이다. 외국의 경험도 소상공인, 소지역 등 작은 단위의 경제활동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성공의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재난의 시대에 사회적경제인들은 사회적경제가 가져야 하는 사회적 유용성과 자발성의 가치를 잘 살려내면서 ‘시민들의 욕구에 잘 부응하는가’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여러 주체에 의한 혁신적 협력 실험을 통해 시민 욕구에 더 다가가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대안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거버넌스는 늘 유용한 도구이자 사회적경제의 혁신성을 지탱하는 힘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제 중심의 다양한 연대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해 더 깊게 사유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삶과 사유의 틀을 넘어 새로운 지향의 사유와 실천을 과감히 준비해야 한다. 그 전에 비해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신재민

해외정보분석연구 협동조합

지역과 국가의 경계 없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

“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
시장과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자본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인간을 우선시하는 집단적 연대,
공공서비스 강화, 나아가 삶의 보호와
맞닿아 있는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강조되었다. ”

*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가 미국과 유럽으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의 상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1. 들어가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여파로 인해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5월 15일 현재 세계 코로나19 확산 현황을 보면, 전 세계 확진자 수는 452만 2,000명, 사망자 수는 30만 3,000명에 달한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서의 피해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고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결합돼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위기가 미국과 유럽으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한 3월부터 국제협동조합연맹ICA¹,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등의 국제조직², 몇몇 국가의 협동조합총연합회 및 부문·업종 연합회, 사회적경제 연합 조직들은 수많은 정치적 메시지와 연대·협력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코로나 위기 대응 사례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현재는 각 나라마다 사회적경제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충격의 수위와 여파를 파악, 진단하여 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우선 충력을 기울이고 있다.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자

1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홈페이지

<https://www.ica.coop/en/newsroom/news/towards-common-destiny-cooperative-values-and-principles>

2 유엔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 홈페이지

<http://unsse.org/sse-responses-to-covid-19-information-from-the-members-and-observers-of-the-untfse/>

구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 연대와 협력, 금융협동조합 및 사회적금융기관들의 재정적 지원, 정부의 특별지원정책 제안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국제 사회적경제에 가져올 충격을 총체적으로 진단해내기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코로나19 위기가 사회적경제에 미친 영향력을 제대로 측정해내야 긴급 처방을 넘어 적절한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각 나라마다 코로나19 위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충격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할지 성찰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데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국제적 수준이든, 국가적·지역적 수준이든 더 정확한 조사 내용과 데이터에 기반한 중장기적 대응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기초해 ①피해 현황 조사 및 정책 제안 활동, ②지역사회 기여 및 연대 활동, ③고용 문제에 대응한 활동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코로나 위기와 사회적경제의 대응

코로나19 위기에 맞선 사회적경제의 접근법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국가·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사업 분야에 따라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두 가지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먼저 정부의 재난구호정책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법인의 형태, 규모와 분야에 관계없이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접근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미션과 역할에 비춰볼 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직면한 상황 및 조건에 맞는, 위기 극복에 절실히 필요한 특별지원정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사회적경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미션(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소비 및 유통, 노동자 보호 및 고용 유지,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노동자, 조합원, 이용자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위기 극복의 의미 있는 주체가 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를 새롭게 재건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사회적경제 코로나19 위기 대응 소통 채널 구축

사회적경제 관련 국제조직들은 지역 간, 국가 간 경계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로 현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 아래,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 위기 대응 사례,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으로 초동 대응을 시작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의료품 수급과 같은 긴급조치부터 각국 협동조합들의 니즈 및 경험 사례, 현안 및 중장기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정보와 콘텐츠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로서 루미오 플랫폼 Loomio Platform³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협동조합 관련 업데이트된 소식을 접하고 주제별 포럼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국제협동

3 루미오 노동자협동조합이 개발·운영하는 토론, 의사결정 등을 위한 온라인 툴
<https://www.loomio.org/international-cooperative-alliance-ica/>

조합 저널인 <협동조합 뉴스Cooperative News>는 글로벌 협동조합운동의 최근 대응 및 활동 사례들을 전해주고, 협동조합 관련 지침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 사회적경제 커뮤니티는 유럽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술적 솔루션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취합하여 웹사이트⁴를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관련 각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과 협동조합연합회 및 단위협동조합들의 대응 사례를 홈페이지⁵에서 계속 업데이트해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소식들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기본적인 보건 관련 대응 지침뿐만 아니라 고용, 세제, 금융, 법률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항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다.

1) 피해 현황 조사 및 정책 제안 활동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복합적 위기의 충격을 기업 혼자의 힘으로 극복해내기는 어렵다. 각국 사회적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대응은 주로 협동조합총연합회 및 각 부문·업종 연합회, 사회적경제 연합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일부 사례를 소개한다.

4 사회적경제 관련 유럽연합 홈페이지

<https://webgate.ec.europa.eu/fpfis/wikis/display/SEC/Social+economy+in+the+fight+against+Corona>

5 협동조합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홈페이지

https://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news/WCMS_740254/lang-en/index.htm

영국 사례

먼저 4월 28일에 발표된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의 피해 현황 조사 결과⁶를 살펴보면, 48%의 협동조합이 현금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고, 약 40%의 협동조합이 생존을 위해 직원을 무급휴가 보내야 하는 실정이며, 협동조합의 70%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이 위태로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17%의 협동조합이 생존에 필요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데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7,215개 협동조합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생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확대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사업 중단 대출제도^{CBILS}, 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가 사회적기업 및 공동체이익회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국협동조합연합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분명한 사회적 목적 추구하고 이익을 재투자하는 모든 중소기업(연간 매출 63만 2,000파운드까지)으로 확대, ②코로나바이러스 사업 중단 대출제도^{CBILS} 개선, ③사회적임팩트금융기관에 추가 자본을 제공하여 협동조합, 공제조합 및 기타 사회적기업에 신속, 장기, 저리 및 무이자 대출 제공, ④지역공동체이익회사도 복권기금을 통해 자선단체 및 사회적기업에 제공되는 3억 7,00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영국협동조합연합회는 “영국에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10만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제에 600억 파운드를 공헌하고 20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의 부족은 일자리를 위협에 빠뜨

6 “Covid-19 and co-operatives”, CO-Operative UK, 2020.4.28.

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는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사회적경제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⁷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사례

프랑스 비영리민간단체연합회(Mouvement associatif)가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 『진단부터 긴급 대안까지』⁸에 따르면, 65%의 단체가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6%의 스포츠 분야 단체가 활동을 중단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대응해 활동이 불가피한 사회복지와 구호, 지역개발 및 환경 분야 단체 가운데 43~50%는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이래 수입 손실 예상액이 약 14억 유로(그중 고용 직원이 있는 단체의 손실액은 9억 7,5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21%의 단체가 최소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금유동성 문제가 심각하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 직원이 있는 단체 중 69%가 부분 실업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합회에서는 ①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안정 지원 협약” 체결, ②비영리민간단체 특별지원기금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7 이 캠페인은 커뮤니티레저, 로컬리티, 플랜켓재단, 사회적기업가학교, 소셜엔터프라이즈, 사회적기업 마크 공동제이믹회사, 소셜블류, 사회적기업가재단 등과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8 “Du diagnostic aux mesures d'urgence”, Mouvement associatif, 2020.4.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법에 근거해 비영리민간단체(Association)는 사회연대경제의 범주에 포함된다. 비영리민간단체연합회(Mouvement associatif)에는 약 60만 회원이 속해 있고 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지난 4월 21일 사회연대경제인연합회^{UDES}의 보도자료⁹에 따르면, “사회연대기업들이 코로나 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다. 문화, 스포츠, 관광 분야는 사업을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분야는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시설과 가정에서 보건 위기에 맞서 최전선에 서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어려움을 지적했다. 위기 초반 정부가 실시한 지원정책(임시 실업¹⁰과 은행 대출)과 사회연대경제 고등위원회가 실시한 사회연대경제 소기업에 대한 구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출 서류의 복잡성, 공적 지원과 부분 활동 간 조정의 모호성, 신청 처리 관련 지역 간 동질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은행 대출 절차가 까다롭거나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금융 지원(정부의 보증 대출, 연대기금, 지자체 대출)을 거부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의료와 대인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개인 보호장비를 공급해 줄 것을 덧붙였다.

스페인 사례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은 정부에 제출한 코로나 위기 대응 제안서¹¹에서 10억 유로 규모의 금융지원사업을 비롯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사업(short-term/temporary unemployment scheme)을 자영 노동자, 어업조합 등의

9 “Pleinement engagées dans la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les entreprises de l’ESS doivent être soutenues pour assurer leurs missions et préparer «l’après Covid»”, UDES, 2020.4.21.

10 ‘임시 실업(Chomage partiel)’ 제도는 사업장 폐쇄 등으로 노동자들이 일하지 못하는 동안 기존 급여의 80~100%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고용주가 지방정부에 직접 신청한 뒤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지방정부가 고용주에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11 사회적경제유럽 홈페이지

<https://www.socialeconomy.eu.org/2020/04/23/mobilisation-see-members-overcome-covid19/>

조직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임시휴업 및 휴직에 돌입한 직원 50명 이상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특별 고용센터, 장애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협회, 재단의 사회보험료를 100%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노숙자 등에게 직접 대인 케어 서비스를 하거나 소매업종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마스크, 보호안경 등 자가보호용품을 보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거 시설이나 컴퓨터의 방역 직원 고용 등의 조치를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비상시기 속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중요한 노동자들로 간주하고 그들의 이동성, 안전, 자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업 및 휴직에 들어간 보호작업장들이 법에서 지정한 70%의 장애인 최저고용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호작업장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도록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고용, 세제, 금융 관련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앞서 살펴본 사례로부터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위기의 시기에는 더욱 중요하다. 이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경제 연합조직들은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노동자 및 사업체에 대한 지원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회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여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발 빠르게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확인하여 정부에 지원 방식 및 수단의 개선, 부족한 조치의 보완, 신규 특별지원제도 마련 등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건강은 사회적경제 구성원들과 그들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고용, 세제, 금융 관련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은 반드시 제고될 필

요가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원 프로그램

또한 영국협동조합연합회 등 9개 단체는 정부에 보낸 편지 “사회적기업 코로나19 지속 가능한 복구 계획”¹²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제품 및 서비스 생산, 소비 및 유통 방식의 변화 등)에 적응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수요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및 사업모델 전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¹³를 취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여러 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금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경영지원 프로그램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영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사업모델을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 기여 및 연대 활동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기존 서비스를 유지·확대하거나 생산 및 서비스 전

- 12 “Social Enterprise COVID-19 Sustainable Recovery Plan”, 영국협동조합연합회, 커뮤니티레저, 로컬리티, 플랜켓재단, 사회적기업가학교, 소셜엔터프라이즈, 사회적기업 마크 공동체이익회사, 소셜밸류, 사회적기업가재단 등 9개 단체가 정부에 보낸 성명서 첨부자료.
- 13 미국농촌전기협동조합의 등장 및 성장 사례는 변화된 수요에 대응한 신규 사업모델 창출 및 사업모델 전환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미국이 대공황 이후 경제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뉴딜 기간 동안 대부분의 농촌지역 미국인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연방정부가 보장하는 저렴한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오늘날까지 미국 6명 중 1명에게 전기를 계속 공급하는 전기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거의 모든 미국 농촌에 전기를 공급했다. 현재 미국농촌전기협동조합연합회(NRECA)에는 약 900개의 전기협동조합이 속해 있다.

환 등을 통해 조합원 및 지역사회를 구호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위기의 시기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연대와 협력 활동이 더욱 빛을 발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기존 서비스 유지 및 확대 사례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식료품 및 생활용품 공급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 미국의 식품구호연합(Food Rescue Alliance), 이탈리아의 바리카마 협동조합, 소매협동조합그룹과 또 다른 소매협동조합 체인인 코나드 등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전국의 매장에서 물품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영국 카디프의 택시협동조합인 '드라이드 택시', 롬바르디아 지역의 택시협동조합은 이동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무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소매협동조합그룹(Coop Italy)의 경우는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 긴급 구호물품, 식료품 등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식품 자선단체의 기부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식료품 기부도 이루어졌다. 영국 소비자협동조합그룹(Coop Group)은 150만 파운드의 식품을 기부해 식품구호 자선단체 FareShare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했고, 롬바르디아 협동조합은 로디 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상설 식품 모금대를 설치·운영했다. 케이터링 협동조합 그룹인 시르푸드는 취약계층을 위한 식당에 미사용 식품을 기증했다. 프랑스의 그룹업(Groupe UP)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위생용품과 식료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약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숙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바우처를 공급하

기도 했다.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독거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제공했다. Dar=Casa 협동조합은 밀라노 대도시 권역에서 “나는 내 이웃을 돌본다”는 활동에 참여해 독거노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했고, 포지아 지방의 빅카리 마을협동조합과 코센짜 지방의 ‘나는 바카리쪼에 산다’ 마을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커뮤니티 협동조합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택배 서비스를 제공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고 온라인 원격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저소득 농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해 광대역 인터넷 설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었다. 로어노크 전기협동조합은 노스 캐롤라이니아주 헬릭스 카운티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학교 주차장에 무료 공용 와이파이 핫스팟을 설치해주었다.¹⁴ 이탈리아 베르가모 지역에서 학교를 관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이미베르그 Imiberg는 고등학교 20개 클래스의 원격 수업을 맡아 정규 학교 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생산 및 서비스 전환 사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마스크, 안면보호대, 손소독제, 장갑 및 인공호흡기 등 보건의료 제품 및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품목을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마스크 등의 대량생산이 어려움을 겪자 일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보건의료 제품 생산으로 전환했고,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들과

14 미국농촌전기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electric.coop/co-ops-deliver-free-public-wifi-hotspots-during-covid-19-pandemic/>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라이선스의 신속한 처리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일도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2개 협동조합이 40만 개(1일 생산량)의 안면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 모였으며, 스페인 정부는 인공호흡기, 코로나 진단 테스트 장비 및 개인용 보호장비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몬드라곤복합체 소속인 벅센 메디컬 협동조합-cooperativa Bexen Medical과 마스크 6,000만 개(주간 생산량은 250만 개) 생산을, 또 다른 협동조합인 몬드라곤 어셈블리Mondragon Assembly와는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기계 제작 협약¹⁵을 체결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국제적 연대 사례도 돋보였는데, 불가리아 소매협동조합은 복잡한 물류 시스템으로 인해 긴급 공급이 어려워지자 이탈리아소매협동조합그룹Coop Italy의 배송 시스템 지원을 받아 소독제 및 손세정제 부족에 대처할 수 있었다. 또한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 9개국에 네트워크를 둔 벨기에의 스마트협동조합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일자리를 잃은 문화예술계 프리랜서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플랜Plan Corona을 시작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집 발간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는 383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활동 사례를 모은 보고서¹⁶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보건의료용품 생산 및 공급, 의료시설 제공, 식료품 기부, 취약계층에게 식사 제공 및 배송 서비스, 청소·방역·세탁 등 서비

15 https://www.lavanguardia.com/vida/20200406/48356147919/una-empresa-del-grupo-mondragon-fabricara-60-millones-de-mascarillas.html?utm_term=botones_sociales&utm_source=whatsapp&utm_medium=social

16 "Iniciativas y actuaciones de las empresas de economía social ante el covid-19", CEPES, 2020.5.14.

스 제공, 격리 및 입원 환자를 위한 애완동물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서는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정책 제안 및 코로나 이후 사회적, 경제적 재건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사회적경제 역할 제고 등을 위해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고용 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

사회적경제의 고용 관련 초기 긴급 대응 사례

위기 초반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질병으로 결근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가 소득 손실 또는 기타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급휴가 정책을 취하거나 사업장 폐쇄 기간에도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지원이 기존에 받아왔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등 여러 긴급조치를 취했다.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그룹인 Coop Group¹⁷의 경우에는 증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매장에서 진열대 관리, 온라인 주문 이행, 취약계층 고객 및 커뮤니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5,000명의 임시직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채용된 직원 대부분이 코로나 위기 후 실직자들로, 사회적경제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위기 시에도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긍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에 미칠 고용 쇼크를 처음으로 수치화한 이탈리아 레가쿱¹⁸에서는 여러 주요 분야의 노동자조합원과 근로자를 기반으로 추정된 결

17 173년의 역사를 가진 소비자협동조합 그룹으로 조합원 460만 명, 매장 3,600여 곳, 직원 63,000명. 식료품 도소매, 의약품, 장례, 보험, 법률 서비스,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8 https://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news/WCMS_739990/lang–en/index.htm

과, 봉쇄 조치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협동조합 부문에서 실직 위험에 처하게 될 근로자는 최소 2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분야는 데이케어센터 폐쇄 또는 재가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 중단으로 노인 및 장애인을 돌보는 등 사회서비스 활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야만 해도 20만 명의 근로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케이터링 및 청소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2만 6,000명의 근로자가 실직할 위험이 있다. 예술 및 문화유산 관리,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및 관광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2만 1,000명 이상의 근로자들과 조합원들도 그들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1만 8,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물류 및 운송 협동조합도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이탈리아 협동조합연맹 The Alliance of Italian Cooperatives은 고용주 및 노동자 조직과의 협의 하에 정부를 대상으로 가계, 기업,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확대, 강화해줄 것을 호소했다.

고용 위기 대응 해외 정책 사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올해 말까지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3월 16일 공포한 “이탈리아를 치유하자 Cura Italia”라는 법률 명령에 노동자 보호와 고용 지원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정부는 총 250억 유로를 긴급 지출하면서 이 중 100억 유로는 사업 분야와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안정망을 확장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등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했다. 고용주가 직접 정부에 신청하면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놓이는 직원들이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최대 연속 13주간 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

고, 프리랜서 등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집단을 포괄하도록 실업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3월 17일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일시해고제도ETRE, Expediente Temporal de Regulacion de Empleo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일시해고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동자 대표와 협의 기한은 15일에서 7일로 단축시켰다. 코로나19 관련 일시해고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보고 노동자들은 임금 총액의 70%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시해고 또는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동안 기업은 실 노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서비스청이 나머지를 지급하게 된다. 소기업, 자영 노동자 및 소규모 업체 등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의해 전액 보장받고, 50인 이상 기업은 75%를 보장받는다. 적용 요건은 조업 단축 기간 종료 후 6개월간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건비, 사회보험료, 임대료 등 고용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과 소득 감소 충격에 대응하여 일자리 유지와 실업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취하는 고용정책이다. 그 중 독일과 미국의 고용 유지 지원정책¹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단축근로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를 지원하고, 미국은 중소기업에 인건비, 임대료, 주택담보대출 및 부채 상환 목적의 비용을 대출하되, 6월 말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탕감하는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²⁰을 대규모로 도입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독일과 미국의 지원제도

19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고용·노동브리프 제95호(2020-02), 한국노동연구원.

와 같이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임대료 등 고용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 보존을 위한 정부 조치의 일부로써 노동자 기업 인수 지원

영국협동조합연합회는 코로나 위기 대응 정책 제안서 『코로나19와 협동조합』²¹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노동자소유기업의 5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백만 오너(#1MillionOwners)〉 아젠다 지원과 새로운 노동자협동조합의 창립 및 기존 사업체를 노동자소유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영 지원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²²

기업 파산의 경우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한 노동자 기업 인수는 일자리 보존을 위한 정부 조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 위기는 사업체의 노동자 인수를 통해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은 노동자소유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이다. 지난 3월 31일에 기재부가 발표한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는 기업 인수·전환, 사업 중단·폐업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노동자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 쇼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노동자 기업 인수 수요 발굴과 구체적인 전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은 3,000만 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직원 500명 이하인 중소기업에 급여 지급을 위해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대출 형식이지만 두 달간 급여,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에 쓰면 보조금으로 전환된다.

21 “Covid-19 and co-operatives”, CO-Operative UK, 2020.4.28.

22 <https://www.uk.coop/1millionowners> ‘백만 오너(#1MillionOwners)’는 영국협동조합연합회와 노동자소유권협회가 주도하는 캠페인으로 2019년 7월부터 시작됐다.

3. 나가며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던 경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단 며칠 만에 정지되는 모습을 목도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의 가장 약한 부분과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 시장과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자본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인간을 우선시하는 집단적 연대, 공공서비스 강화, 나아가 삶의 보호와 맞닿아 있는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강조되었다.

물리적 거리두기의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에서 자원을 동원하여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신속히 식료품 등 필요한 물품을 유통시키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 및 방역을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돌봄, 이동,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증명했다. 사회적경제는 위기 때마다 회복력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충격에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경제 조직 내외에서 강화된 연대와 사회적 신뢰는 회복과 변화의 근간이 될 것이다.

위기는 항상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한다면 위기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긴급을 요하는 일에 잘 대응하는 것만큼이나 한걸음 물러서 시간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관련 국제조직들은 코로나 위기 초반부터 줄곧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공정하고, 더 포용적이고, 더 생태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발전 모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

시지를 전달해왔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생태적 농업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실천적 대응, 윤리적 생산 및 소비 제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안전망 구축, 일자리 보호 및 괜찮은 일자리 창출, 민주적 소유 및 거버넌스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 구현 등 다양한 의제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제사회, 정부, 기업, 시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염병이 지나간 후 우리가 사회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함께 선택하는 가치와 원칙은 앞으로 수 세대에 영향을 미칠 궤도를 설정하게 할 것이다.

- 자료 출처**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홈페이지
<https://www.ica.coop/en/newsroom/news/>
 - 유엔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SE) 홈페이지
<http://unsse.org/sse-responses-to-covid-19-information-from-the-members-and-observers-of-the-untfssse/>
 - 루미오 노동자협동조합이 개발 · 운영하는 토론, 의사결정 등을 위한 온라인 톨
<https://www.loomio.org/international-cooperative-alliance-ica/>
 - 사회적경제 관련 유럽연합 홈페이지
<https://webgate.ec.europa.eu/fpfis/wikis/display/SEC/Social+economy+in+the+fight+against+Corona>
 - 협동조합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홈페이지(사회적경제 코로나 대응)
https://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news/WCMS_740254/lang—en/index.htm
 - “Covid-19 and co-operatives”, CO-Operative UK, 2020.4.28.
 - “Du diagnostic aux mesures d’urgence”, Mouvement associatif, 2020.4.
 - “Pleinement engagees dans la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les entreprises de l’ESS doivent etre soutenues pour assurer leurs missions et preparer 《l’apres Covid》” UDES, 2020.4.21.
 - 사회적경제유럽 홈페이지
<https://www.socialeconomy.eu.org/2020/04/23/mobilisation-see-members-overcome-covid19>
 - “Social Enterprise COVID-19 Sustainable Recovery Plan”, 영국협동조합연합회, 커뮤니티레저, 로컬리티, 플랜켓 재단, 사회적기업학교, 소셜엔터프라이즈, 사회적기업 마크 공동체이익회사, 소셜밸류, 사회적기업가재단, 2020.4.28.
 - 미국농촌전기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electric.coop/co-ops-deliver-free-public-wifi-hotspots-during-covid-19-pandemic/>
<https://www.lavanguardia.com/>
 - “Iniciativas y actuaciones de las empresas de economia social ante el covid-19”, CEPES, 2020.5.14.
 -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고용 · 노동브리프 제95호(2020-02), 한국노동연구원
 - 협동조합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홈페이지(레가툼 코로나 대응)
https://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news/WCMS_739990/lang—en/index.htm
<https://www.uk.coop/1millionowners>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재난 속 생활 방역 그리고 돌봄 노동자

“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적경제가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의 주요 주체라고 주장해왔다. (...) 작은 실천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특히 위기 상황에 취약한 가정 내 돌봄을 강화하고, 공적 지원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내 돌봄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

코로나19는 이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지 못한 사회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난생처음 맛보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한 환기 등 거시적 변화 외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숙고하게 만들었고 재택근무나 배달 소비와 같은 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사회적 접촉을 꺼리기 시작했고 이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직접적 대인 접촉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시 ‘공동체’란 무엇인지, 이전의 인적·지역적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필자는 오랫동안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산후조리사로 상징되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에 몸담아오고 있다. 가정 내 돌봄 서비스는 가정 방문 서비스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야 하는 업무이다. 배달이나 가전제품 관리가 일시적 방문이라면 가사 돌봄, 아이 돌봄, 산모 돌봄은 최소 3시간 이상 가정에 머물러 진행하는 업무이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생활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도 불안하고 종사자도 불안하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2월 말부터 그 여파가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한 독감’이라 불리던 초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교포 가사노동자들이었다. 입주를 해서 집안 살림부터 아이, 어르신 돌봄에 이르기까지 가사일을 모두 맡아서 하는 입주 가사노동자들, 요양원·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재중동포 혹은 중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미 입주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돌봄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타격이 적었지만 새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집단적 혐오 감정이라는 돌풍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2월 말이 되자 돌봄 서비스 주문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3월부터는 신규 주문이 제로에 가까워졌다. 20~30%에 이르는 고객들이 불안감 때문에 서비스를 일시(실제로는 무기한) 중단했고 신규 고객은 주문을 취소했다. 서비스 급여로 고정생활비를 충당하던 분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가사노동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가사관리사, 일명 가사도우미로 불리는 분들의 월평균 소득은 80만 원 정도이다. 시급이 1만 2,000원이라고 할 때 이 정도 소득을 얻으려면 매주 네다섯 군데의 가정에서 1회당 4시간씩 청소, 세탁, 설거지와 같은 가사일을 해야 한다. 워낙 불안정한 노동인지만 늘 위기는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 소득으로 월세, 식비와 같은 고정비를 충당해야 하는 고령자, 여성 가장, 저소득 가구에 타격이 집중되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휴직급여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문자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안부를 묻는 일부터 시작했다. 가정에 들어가 개인적으로 고립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정보에 늦거나 왜곡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간 고립된 노동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월례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오프라인 모임을 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을 위해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소문만 들리면 신청을 하기 시작했고, 이들에게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지원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계에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현장 종사자들과 고객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회원 단체들도 저마다 지혜를 짜내기 시작했다. 가정 내 돌봄은 어떠한 경우든 '위생과 청결'이 우선이다. 가사 서비스는 청소, 세탁 등을 통해 가정의 위생과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가족의 건강과 내일을 위한 충전을 돕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영유아의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산모 돌봄 역시 위생적인 환경과 돌봄을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종사자에 대한 청결 교육은 직무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서 아는 것이 중요했다.

부천에 소재한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고객 가정에 ‘청결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돈이 없으면 힘으로, 힘이 없으면 지혜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가정 방문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소독제와 일회용 장갑, 소독 솜을 준비하여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는 문고리, 리모컨 등을 무상 소독하기 시작했다. 기존 업무에 추가 업무가 더해지는 것이었지만 회원들 모두는 기꺼이 동의했다. 가정 소독 매뉴얼을 만들어 소독 방법을 알려 주고 고객에게도 미리 안내하여 원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부천의 청소·방역 전문 사회적기업인 ‘우렁각시매직케어’는 무상으로 검증된 소독제를 제공해주었다. 회원들은 본인들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었고 자신이 위기 상황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데 만족했다. 고객들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부천의 공공기관에도 알려져 부천시에서 워킹맘들을 위해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주민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은 조합원들의 논의를 거쳐 대출 이자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에서 LH 공사와 함께 아파트 안에서 돌봄 나눔 동지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돌봄세상’은 고립된 주민들이 상호 유대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와 함께 재료를 나누어 주고 ‘콩나물 키우기’, ‘요리하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상호 유대를 활성화하

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이 휴관하고, 정부의 노인 돌봄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고, 각급학교의 개학, 개원 일이 일시 미루어지면서 또 하나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어르신 안부 전화 등은 유지되고 긴급 돌봄이 일부 제공된다고 해도 시설에 가지 못하고 고립된 허약한 노인들의 돌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하는 한 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감염예방의 기본인 가정의 청결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이는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적경제가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의 주요 주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가 지역 현장에서, 생활의 최일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누구도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앞에서 얘기한 작은 실천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특히 위기 상황에 취약한 가정 내 돌봄을 강화하고, 공적 지원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내 돌봄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미정*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
(에이팍코리아) 이사장

감염병 재난, 생활공동체로 살아남기

“ 감염병 재난에서 협력, 연대, 공생의 가치는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나의 안전이 공동체의 안전과 직결되고 공동체가 안전해야 내가 위험하지 않다는 상호 연결의 끈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로의 안전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스스로 좋은 결정을 하게 만드는 자발적 네트워크 공동체가 중요하다. ”

* 경주아이쿱 이사장과 아이쿱생협재난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아이쿱생협의 재난 대응 활동을 만들고 진행했으며 지금은 퇴임 후 에이팍코리아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문적인 민간의 재난 구호 활동에 힘쓰고 있다.

1. 코로나19, 새로운 감염병 재난과 패닉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확산

2020년 2월 18일은 아이쿱생협이 경북도청에서 청도자연드림파크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한 날이다. 그러나 이 좋은 사건은 순식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소멸하는 듯했다. 이날 대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대문짝만 하게 장식되었고 그 환자가 바로 31번 확진자이다. 당시 MOU 체결을 위해 마련된 도청 행사장에는 경북으로 전파될지 모른다는 긴장과 걱정이 감돌기는 했지만 이것이 앞으로 몇 달간 대한민국을 멈춰 세울 대형 감염병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당시 협약식에 참석했던 청도군수와 군 관계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청도군을 찾은 것은 자연드림파크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이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사흘 만에 첫 사망자가 나왔고 경북과 대구를 중심으로 순식간에 전파되면서 확진자 수는 불과 며칠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1만 1,018명, 사망자 수는 260명을 기록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대구시와 청도군에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식사 대체 물품으로 라면과 생수 등을 긴급하게 보내기로 했고, 이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청도군을 찾아갔다. 군 경계를 넘어서서 군청까지 가는 동안 거리에는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공포는 이미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예상치 못한 급속 확산에 사람들은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마스크를 사 모으기 시작했다. 약국과 마트의 마스크는 일찍 동이 났고 인터넷 쇼핑물은 구매 자체가 막히기 시작했으며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워졌다. 구하기 어려울수록 마스크에 대한 욕구는 강해

졌고 ‘금 마스크’라는 우스갯소리가 우습지 않게 들리기 시작했다. 자연 드림 매장에도 조합원들의 마스크 구매 문의가 속출했고 몇 개라도 입고 되면 조합원들이 순식간에 몰려 어떻게 배분해서 판매해야 할지 매장마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스크 대란

아이쿱생협재난대응위원회¹는 우선 대구·경북 지역 조합원 구호를 시작했다. 확보할 수 있는 전국 스토어(아이쿱생협 매장)의 마스크를 대구·경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의 스토어 법인은 즉시 의사를 결정해 전국의 물량 1만 장을 우선 몰아서 보내주기로 했다. 매장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1장씩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비용은 대구·경북 7개 조합과 쿵스토어대구²가 조합비와 스토어 홍보비로 지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구하더라도 한 장에 5,000원을 웃도는 가격에 사람들의 허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쿱이 마스크를 조합원에게 판매하지 않고 무료로 배포한다는 소식은 조합원에게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아이쿱이 재난 시 조합원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팔지 않고 나누는 것은 포항 지진 당시 포항·경주 조합원에게 구호 물품을 배포한 이후 두 번 째였다. 포항 지진 당시에는 전국 지역조합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했으나 이번 마스크 무료 배포는 스토어에서 비용을 분담하면서 매장 사업 법인

1 아이쿱생협연합회는 2018년부터 대형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대응위원회를 구성해 특별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

2 쿵스토어대구는 대구·경북 7개 아이쿱 지역조합의 공동 매장사업법인으로 2020년 5월 기준 23개 자연드림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마스크 팔지 않고 나누어요”. 아이쿱은 마스크 1만 장을 확보해 이를 판매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의 조합원 구호 사례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마스크 무료배부에 감사하며 아이쿱협동조합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반응이었고 조합 활동가들에게는 협동조합이 재난 시 조합원 구호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난 현장 기부의 어려움

아이쿱은 조합원 구호와 동시에 대구시에 기부 물품을 보내기 위한 지원 논의를 시작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감염병 재난에 대구시가 의료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전국에서 쏟아지는 기부 물품과 구호 문의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아이쿱은 대구시와 대구지

역 의료기관에 물품 기부를 시도했으나 구호품 접수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과 담당자와 통화 연결 자체가 쉽지 않았다. 어렵게 담당자와 연결되어 어떤 물품을 기부하면 좋겠냐는 문의를 했지만 담당자의 대답은 ‘자신도 모르겠다’는 답변이었다. 전국에서 기부 물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분배가 쉽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조차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아이쿱은 현장의 수요 파악이 어렵게 되자 라면과 음료수 등을 대구 스타디움으로 직접 배송했다. 재난 현장의 수요 파악이 어려우니 필요한 물품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이든 유통기한이 긴 물품이면 나쁘지 않다는 의견에 라면과 음료 등을 보냈지만 이 물품들이 정말 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 같은 사례는 2019년 강원도 대형 산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구호물품 기부 장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한 기부자들의 물품들이 쌓여 갔지만 이를 분배할 기준과 인력의 부재로 재난 현장의 주민들은 정작 필요한 때에 물품을 지원받기 어려웠다.

기부 과정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도 발생한다. 대구지역 아이쿱조합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보내기 위해 병원과 의료진, 시청에 문의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걱정과 우려가 생겼다. 구호를 위해서라는 명분이긴 하지만 혹시 기부 자체가 현장의 행정과 의료진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오히려 적절한 구호를 방해만 하는 ‘기부자의 이기심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보통의 재해 현장의 경우 기부 의사는 전국에서 쏟아지지만 행정 과부하로 이를 적절히 소화하지 못하고 마비가 오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장 인력은 부족하고 구호라는 선의가 넘치는 마음은 오히려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지난 3월 3일, 아이콕생협재난대응위원회와 씨앗재단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구와 청도에 자연드림 컵라면과 음료를 지원했다.

재난 구호의 병목현상

이처럼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국내 기업들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물품을 기부하고 싶어한다. 선의가 가득한 개인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행정마저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재난 구호에도 병목현상이 온다. 그 결과 체육관 등에 구호 물품은 쌓이기만 하고 현장에는 구호품이 필요한 시점에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 성금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로 전국에서 쏟아진 국민 성금은 4월 말 기준 약 2500억 원이 모였다. 행안부에 재난 성금 모금 기관으로 등록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 곳을 통해 집중적으로 모금된다. 이 기관들은 모금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때문

에 현장의 수요를 알기 어려워 지자체가 현장 수요를 찾아 나눠 주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미 지자체가 과부하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집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모금 기관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원 계획을 세우고 수요처를 선정하는 데 물리적 시간을 투입한다. 이러다보니 기부 집행 속도는 기부자들의 기대치를 따라잡지 못한다. 대구지역 병원의 한 간호사가 열악한 식단을 SNS에 올린 것이 화제가 되면서 코로나19로 대구에 기부된 ‘기부금 사용 내역을 진상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것은 이 같은 실망을 보여주는 예이다.

아이쿱생협재난대응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괴산자연드림파크에서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³(이하 에이팟코리아)와 ‘재해 구호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것은 구호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협약에서 아이쿱생협은 재해 현장으로 들어간 에이팟코리아가 구호 현장에서 필요한 현물이나 기부금 지원을 긴급 요청할 경우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선지급한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과부하가 걸리는 행정을 통하지 않고 현장에 깊숙하게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 구호단체를 통해 필요한 구호품을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의도이다. 특히 현물의 선지급은 아이쿱생협이 셰이프넷을 통해 물품 생산과 물류 체계를 가동하면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구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가능하며 이는 다른 기부 단체나 기업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3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에이팟코리아 : A-PAD KOREA, Asia Pacific Alliance for Disaster Management korea)는 국가와 조직을 넘어 언제든지 협력 가능한 재난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만든 아시아 재난대응플랫폼 한국협회로 아시아 6개국(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일본, 스리랑카)이 회원국이다. 아이쿱과는 경주, 포항 지진 이후 2018년부터 재난대응리더 양성교육으로 협업을 시작해 강원도 산불 구호를 함께 진행한 단체이다.

재난구호단체와의 협업 : 현장에서 찾다

예상한 대로 현장에서 대구시를 통한 기부와 지원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자 아이쿱생협재난대응위원회와 에이팻코리아는 회의를 열어 코로나 19 대구지역 긴급 구호를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에이팻코리아는 당일부터 대구 현장의 구호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긴급구호사업 지원을 아이쿱에 요청했다. 장기간 개학 연기와 대구지역 식당들의 운영 중단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결식이 새로운 구호 수요로 떠올랐으나 우선 지원 대상에서 밀려 있었다. 아이쿱생협재난대응위원회는 요청 당일 구호사업비 2,500만 원의 선지급을 바로 결정했다. 보통의 경우 수요 조사와 내부 검토, 결제, 송금까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결정이었다.

에이팻코리아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대구에 현장 활동가를 파견했다. 대구 수성구 지역아동센터와 연결해 문을 닫은 동네 식당 4곳을 찾아내고 13개 지역아동센터 2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공급하기 시작했다. 결정 사흘 만이었다. 1회성의 도시락 제공은 구호 효과로는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200명에게 개학까지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아동센터는 개학 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센터 운영 중단으로 아이들에게 결식뿐만 아니라 적절한 돌봄 부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시락을 나눠 주면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게 되어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표시했다.

도시락 제공 사업은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동네 식당의 생계를 구호하는 효과도 발휘했다. 식당 4곳과 2,800개의 도시락을 계약하고 현금을 바로 송금했다. 보통 사업 후에 비용을 받는 것으로 예상했던 한 식당 주인은 구호성 현금이 바로 입금되자 ‘하늘이 돕는 구나라’라는 말로 감사와 안도를 표시했다.

영세 식당들이 도시락을 만들며 다시 수입을 얻게 되었고 이 도시락은 지역의 아동 결식을 구호하는 역할을 하며 주민 스스로가 구호의 주체가 되게 한다. 수동적인 구호 대상에서 자발적인 구호 주체로 역할을 부여하는 구호 방식은 재해 피해자의 효능감을 높여 회복을 더 빠르게 하는 회복 탄력성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안산 단원고의 학생 일부가 후에 ‘운디드 힐러리’는 단체를 만들어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이나, 경주 지진 이후 경주아이쿱 조합원들이 재난안전위원회를 만들어 재난 피해자가 스스로 구호 주체가 된 것은 아낌없이 주목해야 할 사례들이다.

빠른 구호는 마중물로도 역할을 한다

아이쿱과 에이팍코리아가 협업한 한 끼 도시락사업은 재난 현장에 빠르고도 깊숙하게 들어간 민간의 구호 사례로 이슈가 되었고 결국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게 되는 마중물로 작용했다. <한겨레>와 대구KBS 9시뉴스를 통해 기사화되면서 재해구호협회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성금 중 4억 원가량을 에이팍코리아를 통해 같은 사업에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세계 최대의 비영리 기부 펀딩 플랫폼으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이어주는 글로벌기빙GlobalGiving : <https://www.globalgiving.org>에서도 2,4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더불어 카카오에 개설한 ‘같이가치’에도 1,000만 원의 성금이 모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명의 아이들과 4개 식당으로 시작한 ‘대구지역아동센터 한 끼 도시락 구호’는 대구를 넘어 경북 경산 지역으로도 확대돼 110개 지역아동센터 2,000여 명의 아이들이 3주에 걸쳐 도시락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리고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다시 문을 열고 생업을 시작한 골목 식당도 4곳에서 60곳으로 확대되었다.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을 준비하는 대구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들.

민간 재난 구호 협업 플랫폼의 새로운 도전

대구지역아동센터 한 끼 도시락 사업은 아이쿱과 에이팟코리아의 협업 이외에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구호 플랫폼 이기자코로나닷컴(<https://이기자코로나.com>)과도 연결된 협업의 결과이기도 했다. 이기자코로나닷컴은 코로나 19 집단감염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는 빈 곳을 찾아 연결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6개 단체가 긴급하게 구성한 민간의 온·오프라인 통합 구호 플랫폼이다. 대구지역에 시급한 구호 수요와 기부자를 연결하기 위해 사단법인 디모스와 위즈온협동조합, 대구시민센터,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한국지역재단협의회, 한국시민센터협의회 등 6개 단체가 협업했

다. 대구시민센터가 대구 현장에서 구호 수요를 파악하면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 등 4개 단체가 기부자 발굴과 요청, 그리고 정보 공유를 맡아 적극적인 연결을 시도했다. 위즈온협동조합은 장애인들이 창립해 운영하는 웹서비스 운영업체로 재난 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잘 공감하고 있어 빠르게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 결과 대구지역 장애인 공동체와 노숙인 쉼터, 이주노동자회, 의료노조, 지역아동센터 등 19개 단체가 마스크와 도시락, 식료품, 놀이감 등을 지원받게 되었고 40여 개 단체와 개인들이 물품 후원에 참여했다. 장애인과 노숙인의 경우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식사와 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이주노동자들은 마스크 5부제 등으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 구호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이기자코로나닷컴에 참여한 단체들은 재난을 공동체의 정신과 힘으로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경험이 되고자 한다는 취지로 플랫폼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재난 상황에서 사실상 직접 구호에서 외면 받고 재난에 더욱 취약한 소외계층을 구호하고 연결하는 일에 민간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재난에서 민간 공동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아이쿱의 슬기로운 재난 대응

경주 지진 이후 준비된 재난 대응

아이쿱에서 재난 대응 활동이 시작된 것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당시 정부의 무능한 재난 대응력은 경주 지진 당시에도 연장선상에 있었다.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

한 규모인 5.8의 본진과 1년간 600번 이상의 여진은 일상을 흔들었고 경주아이쿱생협은 지진재난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원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도쿄방재東京防災』를 우리 실정에 맞게 재편집해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비상 담요와 한 끼 식사 대용품 등 긴급 구호 물품을 매장에 비치했다. 그리고 조합원과 경주 시민이 참여하는 재난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지역사회 재난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국제구호협력기구 ‘더프라이미스The Promise’,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AEGIS’와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 아이쿱은 포항 아이쿱과 경주아이쿱 전 조합원에게 경주에서 만든 지진 책자와 비상 물품을 배부하며 조합원과 걱정을 함께 나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2018년 아이쿱생협재난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아이쿱생협 연합회 전국 차원의 재난 대응이 시작되었다. 에이팻코리아와 협업으로 ‘아이쿱 재난대응 리더 양성을 위한 기초 입문과정’(이하 재난대응 리더 양성 과정)을 처음으로 진행해 30명의 리더를 배출하고 130쪽 분량의 『가족을 지키는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정부가 아닌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지진 재난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유래 없는 신기한 풍경이었다. 잦은 대형 지진으로 방재 데이터가 풍부한 일본 덴츠사⁴의 콘텐츠를 활용해 30명의 리더가 워크숍 형태로 참여해 만들었으며 국내 최초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시각에서 제작했다. 전국 조합에서 2만 부를 인쇄해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2019년에는 재난대응 리더 양성과정을 확대해 기초와 심화 과정에서 각각 30명을 배출했고 이 리더들은 전국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상의 재난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와 포항아이쿱은 안전팀을 조직 내에 구성해 일상에

4 일본의 대형 기획사로 도쿄도의 의뢰를 받아 『도쿄방재』 책자를 만든 기획사이다.



‘재난대응 리더 양성과정’에서 제작 배포한 『가족을 지키는 대응 매뉴얼』, 『도쿄방재』를 낸 일본 덴츠사와 계약해 아이쿱이 제작했으며 국내 독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서 조합원들과 안전체험캠프 등을 진행하며 마을에서 이웃과 시작하는 일상의 재난 대응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더불어 아이쿱생협재난 대응위원회 위원들은 일본 연수를 통해 고베 지진과 서일본 홍수 피해 지역에서 생협 공동체의 재난 대응 방식을 고민하고 사고를 확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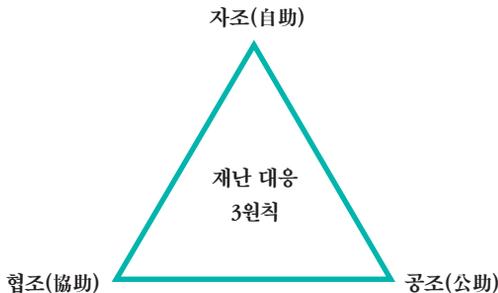
아이쿱 재난 대응의 원칙 : 자조와 협조

2016년 대형 지진 피해가 발생했던 일본 구마모토에 연수를 간 것은 2018년이였다. 구마모토 광역방재센터에서 담당자가 안내한 교육 자료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1995년 일본 고베대지진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였다. 고베대지진 생존자를 대상으로 ‘당신은

누구에게 구조되었나?’라는 질문에 국가의 소방단이나 구조대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자기 자신이 66.8%였다. 두 번째로 가족이나 이웃이 28%, 국가나 지자체는 1.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립된 재난 구호의 원칙은 우선 자신이 스스로를 구조하는 자조(自助)를 기본으로, 다음은 이웃을 구조하는 협조(協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나서는 공조(公助)의 원칙이다.

지진과 해일, 화재 등 대형 재난의 급박한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교육과 훈련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가족, 혹은 이웃이 구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희망이며 국가나 지자체는 구호 수요가 많고 긴급한 곳에 먼저 출동하기에 대형 재난에서는 구호의 손길이 미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

이 같은 경험으로 아이쿱생협의 재난 대응은 조합원과 마을이 스스로를 구조하는 ‘자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조는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스스로 사업체를 세우고 운영하는 원칙이기도 하며 이는 재난 구호에서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아이쿱생협은 생활공동체로 평소에 마을과 동아리 모임 등의 자치 조직을 가동하고 있어 어느 조직보다 재난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다.





경주아이쿱 조인스에서 여름방학 특강과 함께 실시한 '놀토안전캠프' 모습.

코로나19 이후 대구·경북 지역 조합원에게 전국의 마스크 물량을 모아 1만 장을 무료로 분배한 것, 그리고 조합마다 조합원 밴드와 SNS를 통해 '#안부를 묻습니다'라는 릴레이 캠페인을 벌인 것도 이 같은 '자조원칙의 인지'의 여부를 떠나 공동체 협동의 원칙 속에서 자연스럽게도 충실하게 재난 대응 활동이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아이쿱생협 조합에서 일상의 재난 대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은 경주아이쿱의 안전팀 '조인스'이다. 조인스는 한자 도울 助와 사람 人에 알파벳 S를 붙여 助人's 혹은 함께한다는 영어 단어 join을 이중으로 내포한 이름으로, 마을에서 이웃이 기대어 일상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조인스는 7명의 팀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난 영화를 가족이 함께 보는 '놀토브런치 영화제'를 열고 아빠도 참여하는 '놀라운 토요일 안전한 가족캠프'를 마련해 생존배낭 싸기 카드게

입과 주먹밥 만들기를 진행했다. 또 안전체험관 단체 견학을 추진하고 경주 시민 행사에서 커뮤니티 맵핑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일상의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조합 밴드에서 꾸준히 셀프심리케어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안내하며 마을에서의 일상적인 대응을 위해 서로를 돕고 있다.

협조의 원칙 : 경계를 넘어 연대로

2019년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번졌다. 강풍은 쉽게 잠들지 않았고 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고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에이팟코리아는 대피소나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마을회관으로 바로 깊숙하게 들어가 구호를 시작했다. 전국의 구호 물품은 체육관 등에 쌓인 채 적시에 배부되지 않아 주민들이 요청하는 옷과 식품, 생필품을 즉시 구매해서 배포하기 시작했다. 여러 곳의 마을회관에 분산되어 있던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요청한 물품은 생각지도 못한 신발이었다. 맨발로 대피하거나 슬리퍼를 신고 나와 제대로 된 신발이 없었다. 신발은 일일이 치수를 재어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구호 물품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품목이다. 그러나 에이팟코리아는 일일이 380여 명의 치수를 재어 운동화를 구매했고 아이쿱은 협업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신발 구매에 필요한 현금을 바로 지원했다. 이어서 주민들이 불에 탄 집을 보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해 심리구호후원금을 2차로 지원해 한 달간 심리지원이 추가로 진행되었다. 아이쿱생협 재난 대응의 협조 원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아이쿱과 에이팟코리아의 강원도 산불 재난 이재민 구호 지원은 사회적경제와 구호단체의 협업이 재난 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이 같은 협업을 가능하게 한 아이쿱

의 시스템은 구호사업에 필요한 금액 모금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에 기초한다. 통상의 경우 모금이 진행된 후 구호를 집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간차가 발생해 구호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그러나 아이쿱은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을 통해 미리 구호비용을 지급하고 모금을 차후에 진행해서 시간차를 메운다. 더불어 세부 구호 계획서 등을 생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원을 빠르게 결정해 결제 과정보다는 문제 해결을 앞세운다.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의 신발 지원은 절차보다는 현장 해결을 우선한 구호사업의 적극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생협 재난 대응의 장점 : 물품과 물류 그리고 사람

생협이 다른 조직과 달리 재난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은 물품과 물류, 그리고 자발적이고 선의가 넘치는 조합원 네트워크의 결합에 있다. 아이쿱생협은 2019년 12월 기준⁵ 전국에 자연드림 매장 239곳, 배송센터 8곳, 물류센터 6곳을 보유하고 있다. 재난 시 물품과 물류는 전국 어느 곳이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재난 지원 인프라가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구·경북 마스크 지원과 대구시와 청도군에 물품을 빠르게 배송해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물품 생산 시스템과 전국에 연결된 물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아직 시도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특정 지역에 대규모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생필품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아이쿱의 물류는 조합원 구호는 물론 해당 지역의 이재민 구호에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더불어 아이쿱생협은 전국에 99개 조합⁶과 1,880여 개의 마을, 동아리

5 2019년 세이프넷 연차보고서 자료

6 2019년 12월 기준

모임, 그리고 2,900여 명의 조합원 리더가 있다. 정밀하게 짜인 일상의 조합원 네트워크는 전국 어느 곳에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구호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조합마다 매장과 조합 공간이 있어 재난 시 구호 캠프로 활용할 수 있고 재난구호단체가 현장으로 들어가 조합과 협업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물류까지 더해지면 재난 구호에 있어 물품과 사람, 전문 구호까지 세 박자가 모두 갖춰지는 것이다. 코로나19 대구지역아동센터 도시락 긴급 구호 시 지역조합이 대구에 상주하고 있는 에이팟코리아 활동가에게 조합 공간을 제공하고 아동센터 간식 지원을 함께 진행한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전국 조합의 재난구호 모금은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금전적인 추진력이 된다. 최근 아이쿱생협 회원조합과 씨앗재단이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사회적 치유프로젝트’ 모금 캠페인에서 1억 원의 금액이 조성되었으며,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구호 모금에도 5,000만 원이 모금된 사례가 있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

감염병 재난과 사회적 거리두기, 공동체의 해체?

코로나19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다. 지진이나 해일, 태풍 등은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재난으로 회복과 재건에 집중하면 비교적 빠르게 정상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 재난은 물리적 장소와 시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국을 시작으로 이미 전세계에 전파되었고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대유행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사람이 재난의 전파자로 작동하면서 사람에 대한 혐오와 비난이 쉽게

일어난다. 대상은 이웃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특히 사회적 약자는 더 쉽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인종차별의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 동선이 실시간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난과 혐오가 쏟아진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는 더욱 약자가 되고 있다. 장애인 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아동보육센터 등이 감염 우려로 문을 닫아 공공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취약계층은 더욱 격리된다. 재난 시 사회적 약자가 최대의 피해자가 된다는 말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를 더 쉽게 만든다. 오프라인 모임이 모두 중단되면서 공동체와 관계 해체를 우려하게 만든다.

재난 회복의 사회적 자본 : 생협 공동체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감염병 재난에서 협력, 연대, 공생의 가치는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감염병 재난은 나의 안전이 공동체의 안전과 직결되고 공동체가 안전해야 내가 위험하지 않다는 상호 연결의 끈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로의 안전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스스로 잘 결정하게 만드는 자발적 네트워크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번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아이쿱생협은 조합원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고 '#안부를 묻습니다'라는 온라인 댓글 릴레이 캠페인으로 조합원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활동을 만들어냈다. 더불어 전국의 조합들은 직접 재봉틀을 돌려 천마스크를 손수 제작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격무로 힘들어하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 물품을 기부했다. 병원 의료진에게는 샤워용품을 기부하고 복지센터가 문을 닫아 고립된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는 물품 꾸러미를 기부하는 등 전국 조합에서 다양한 나눔과 기부에 나섰다. 동시에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민간 구호 단체와 협업해 재난 현장에서 직접 구호에 나서는 등 재난 약자를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소득이 낮거나 먹는 음식이 상대적으로 부실해도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지역보다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로세토 효과Roseto Effect’⁷는 재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 간의 유대와 공동체의 위로는 재난 회복력을 높이고 회복 탄력성을 증대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공동체를 지향하고 연대하는 사회가 더 빠르게 감염병 재난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적경제, 특히 자조와 협조의 재난 대응 원칙을 바탕으로 서 있는 아이쿱생협의 마을과 사람, 경제의 연대는 보다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할 것이다.

7 1960년 미국 로세토 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웃 간 신뢰와 상호 존중의 공동체 문화가 가난 또는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 질병을 줄여 개인의 건강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떠오른 기본소득

홍기빈

칼플러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들어가며

우리나라 일각에서나마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된 것은 대략 십수 년 전이었다고 기억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낯선 정책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뭐 그런 게 다 있느냐’라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하지만 끈질기게 이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변형된 모습으로나마 이 이름을 단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하면서 조금씩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기본소득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정책으로서 성큼 다가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진보, 보수, 좌파, 우파도 없었다. 그레고리 맨큐Gregory Mankiw와 같은 정통 주류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네트워크인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s에서도 기본소득이 절실하다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왔고, 스페인을 위시하여 코로나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단절을 겪은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개발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최소한 몇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또한 그 기간 동안 지구 곳곳에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것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뒤에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글은 먼저 기본소득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이 어째서 최근 몇 십 년간 대안적인 사회정책으로서 각광받아왔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 기본소득이 급부상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나타나게 될 추세에 대해 조심스럽게 전망해보도록 한다.

기본소득의 개념

보통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좌파에서 우파에 이르는 다양한 논자들이 존재하며, 논자에 따라 그 정의와 내용 또한 다종다기하다. 이 글에서는 국제기본소득연구자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창시자이자 대표적인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필립 반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의 입장에 의거하여 그 개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¹ 그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의 이념은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Real freedom for all)’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은 궁핍에 처한 이들을 사회가 돕는다는 도덕경제(moral economy)의 원리를 배경으로 한 공공부조(public aid)와 분명히 다르며, 수혜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미래에 당하게 될 각종 리스크를 공유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도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혹은 미래의 불안을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것 등의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 자유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정책 범주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이 도출된다.

첫째,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시설의 직접 서비스와 바우처와 같은 ‘현물’ 형태는 물론 원칙적으로 그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품권 등의 ‘증표(token)’들도 배제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지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 자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현금을 따라올 수가 없다. 현금은 수혜자에게 시장경제에서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무엇이든 조달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1 필리프 판 파레이스, 야니크 판데르보흐트 (2017). 『21세기 기본소득(Basic Income :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홍기빈 옮김 (2018). 흐름출판.

둘째,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에서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이 있지만, 이것이 지급될 때에는 수혜자를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특히 가구 단위 혹은 가족 단위의 일원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급이 될 때에는 그 가구 혹은 가족의 ‘수장’으로 여겨지는 개인에게 몽텅이로 지급될 때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바와 같이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한 그 실제의 삶의 양태가 어떠한지와 무관하게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도 많다. 반면 기본소득은 그 지급의 단위를 철저하게 개인으로 삼는다. 그래서 그 개인이 어떠한 가구 형태로 어떠한 가족 관계에서 살아가는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만인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셋째, 아무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업수당의 경우 비록 현금으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 수혜자는 구직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 밖의 각종 현금 수당들 또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으며, 항상 수혜자에게 그 수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이런저런 의무를 지우게 마련이다. 하지만 ‘실질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은 그러한 조건이나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설령 그 수혜자가 전혀 일할 의지가 없이 일생 내내 그 기본소득만 타먹으며 바닷가에서 ‘서핑이나 하는’ 한량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지급된다.

넷째, 수혜자의 재산과 소득 상태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경우처럼 수혜자가 과연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재산조사(means test)는 필요 없다. ‘모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난뱅이 예술가에게도 지급되며 삼성전자의 이재용 씨에게도 지급된다.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나열하고 보니 앞에서 말한 대로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하는 황당함을 느낄 이들이 많을 줄 안다. 복지란 정말

로 절박한 가난에 처한 이들에 국한하여 주어져야 하며 그것도 그들의 근로 의욕을 줄이지 않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실로 신성모독의 죄악으로 느껴질 것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다. 첫째, 기본소득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각종 수당 및 사회 서비스 등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종류의 사회정책이다. 방금 말한 세 가지의 현존하는 사회정책의 구성 요소들은 모두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각자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바, 기본소득 또한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논리와 역사를 가진 새로운 요소이다. 둘째, 특히 기본소득의 사상이 사회 성원 전체의 재산인 ‘커먼스commons’, 즉 공유재산의 균등한 분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긴 논의와 설명이 필요하므로 여기에서 상술할 수는 없다.²

기본소득과 ‘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은 21세기에 새로 나타난 개념이 아니다. 이미 18세기 말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이 처음 주장한 바 있었고, 특히 1920년대 영국과 1960년대 미국에서는 많은 정책가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유독 기본소득이 새롭게 각광을 받는 데에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산업과 경제의 대변화라는 새로운 조건이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첫째, 주로 미국 실리콘 밸리 등의 혁신 기업가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있다. 지금 벌어지고

2 앞의 책, 『21세기 기본소득』을 참조.

있는 기술혁신은 19세기 및 20세기와는 달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일자리, 즉 노동 자체를 소멸시키는 경향을 뚜렷이 가지고 있을 을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예 노동의 기회조차 박탈 당하는 이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서 전통적인 노동=소득이라는, 즉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전통적인 경제 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이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사회 전체가 책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³

둘째, 이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즉 불안정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했음을 지적하는 논리가 있다. 현재의 기술 혁신은 2차 산업혁명 당시에 정식화된 자본-노동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들을 양산했다. 종신고용은커녕 하루 단위로 갱신 되고, 고용의 주체도 애매하며, 업무의 성격도 일하는 사람의 지위도 불 확실하기 짝이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피고용자로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못하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프레카리아트가 지배 적인 고용형태로 부상하고 있는 오늘날 예전과 같이 완전고용의 노동시 장과 안정된 자본-노동 관계를 전제로 하여 마련된 사회복지 정책은 힘 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본소득이 유일하게 합당한 사회정책 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이 ‘소득’ 측면과 ‘생산 능력’ 측면의 문제가 악순환의 고리를 만 들고 있으며, 이를 깨는 강력한 무기가 기본소득이라는 논리이다. 프레 카리아트가 스스로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조건과 생산 자로서의 정신적·육체적 역량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시

3 이러한 논리는 이번 미국 민주당의 예비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앤드류 양의 저서 『보통 사람들의 전쟁』(흐름출판, 2019)을 참조하라.

장에서 소득이 극히 불안정하거나 거의 없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다. 그 때문에 프리카리아트로서의 파편화된 일자리에 묶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태가 무한히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일하는 이 스스로가 자신을 강화시킬 일종의 ‘활동 자금’이 주어져야 하며,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긴급성’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기본소득의 주장이 절실한 현실성을 갖는 상황을 낳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사회와 경제의 작동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정도와 방향으로 교란 혹은 중지시켜버렸기에 그에 대한 대책 또한 교과서와 정통적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첫째, 이는 전통적인 자본-노동의 고용 관계 바깥에 있는, 눈에 잘 보이지 않던 프리카리아트들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초기에는 경제적 부조의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면제나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기여금 면제의 방안도 논의가 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 관계로 포착되는 공식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식당의 알바 노동자, 방과 후 교사, 행사나 강연 등으로 소득을 얻는 ‘프리랜서’ 등에게는 아무 도움도 될 수 없는 것들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더욱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후자로서, 실제로 소득이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이야말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이들일 수밖에 없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붕괴를 막는 일은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긴급성을 가진 일이다. 당장 근로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소득이 0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이들로서는 사

실상 극심한 재난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구호를 내어주는 가운데에 재산조사 등의 ‘자격 심사’를 조건으로 건다면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아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가령 소득의 순위를 따져서 전체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고 기준을 정할 경우 그 70%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약 한 달 전에 벌어진 논란에서 잘 드러났듯이 이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나 종합소득세 등 어떤 데이터를 쓰든 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물론 여러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 70%에 근접한 선별점을 찾아내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는 대단히 긴 시간을 요하는 일일 것이며 그 과정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까지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긴급성의 문제를 생각하면 재산조사 등의 자격 심사 없이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방법이 큰 적실성을 갖는다.

셋째, 경기부양의 목적에서 보자면 훨씬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경제학자들이 이번 사태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온 중요한 이유라고 보인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총수요가 침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총수요의 구매력을 창출하기도 해야 하지만,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사회적 분위기의 침체도 막고 오히려 다행증^{多幸症}, euphoria의 분위기를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돈을 푸는 일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 경제학자들은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으로 흔히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는 풍유를 사용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풍유일 뿐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돈을 내어줄 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복식부기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 화폐의 유통이 운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다.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부풀려 줘야 자산시장의 거품만 늘어날 뿐 시중에 대출로 풀리지 않는다. 정부가 재정 사업을 해봐야

관련된 일부 업자들의 배를 불러줄 뿐이다.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헬리콥터’로 뿌리는 것에 제일 가까우면서 또 동시에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밝고 행복한 쪽으로 반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가며 : 급속히 가까워진 기본소득

백신 혹은 치료제의 개발만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고, 그 시점은 최소한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우한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듯이 봉쇄 혹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가,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를 일부 완화했다가, 이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감염의 물결이 나타났다가, 그래서 다시 봉쇄 혹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가… 등의 주기가 반복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⁴

그렇다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지속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70%로 제한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밀리고, 결국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또한 경기도와 전주시와 같이 명시적으로 ‘기본소득’의 이름을 걸고 지원이 벌어진 경험도 있다. 그리고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이러한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진 지원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본소득 운동의 전진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몇 년

4 중요한 예외로는 개인 차원에서의 방역 수칙 강화와 정부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개입을 전제로 일상적 사회·경제생활을 지속하는 스웨덴의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의 성공 여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아직 평가하기 힘들다.

전 까지만 해도 너무나 허황된 헛소리 정도로 치부되던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사람들 모두가 골고루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시행할 행정적인 인프라의 기초도 마련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정책의 전진은 ‘불퇴전’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한 번 전진하게 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는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아주 강하며 재분배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을 맞본 한국인들이 미국식 의료 시스템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라는 예외적인 상황이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아본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어도 사람들에게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확산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사태가 아닐 것이라고, 즉 이와 비슷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전염병 사태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또 얼마 전 호주 산불의 경우에서 보듯, 기후 위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전염병 이외에도 정상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의 작동이 멈추거나 교란당하는 여러 양태의 생태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낮지 않다. 그때마다 다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으로서 기본소득 방안이 호출되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소득이라는 것이 꼭 노동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확산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이웃들 모두에게도 최소한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밑에 깔아놓는 것이 모두의 그리고 나 자신의 실질적 자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차츰 이해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은 우리 인류가 새로운 의식을 가진 존재로 진화해 나갈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생점과 정책적 함의

윤모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성장지원팀장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비전	COOP 2.0 시대로의 도약		
목표	협동조합의 성장 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		
	성과지표	2018년	2022년
	평균 출자금	5,744만 원	8,000만 원
	평균 매출액	3.7억 원	6.0억 원
	취약계층 고용비율	42.3%	45%
연합회·협의회 가입률	39.9%	60%	

협동조합의 “효과적 성장” 지원으로 “질적 내실화”

‘성장 기반’ 확립 + ‘정체성’ 강화

Advance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Band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Community
지역사회 중심 운영

Deregulation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Educ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설명자료(2020. 03. 31)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정부 협동조합 정책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년 3월 31일)'을 발표했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2년 12월) 이후 기재부장관이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것이다. 이 글은 기획재정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쟁점 사항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기재부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평가를 중심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2년 12월) 이후 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적 확대 측면에서는 성장 일로에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시 예상 설립 수와 달리 협동조합 설립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4월 말 기준 1만 7,000여 개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제4차 실태조사¹에 따르면 운영·경영 성과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파악했다.²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이 매출액도 높은 경향을 보이며 대규모 협동조합이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본법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에 있어 높

1 기재부 제4차 실태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 말 기준 신고·인가된 14,527개 기본법협동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2019년 4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했으며, 최종 실태조사 보고서는 2020년 3월 31일에 발표했다.

2 기재부 제4차 실태조사에서 위 내용 인용.

은 효과를 보였으며 지역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고 정부-시장의 중간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³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의 성장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업종·규모 측면에서는 저성장과 소규모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특화 분야 발굴 및 성공 사례 확산, 규모화 등을 통해 기본법협동조합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개별 협동조합,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에서 협동조합연합회, 협의회, 연대 등을 통한 상호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아직 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부족하여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을 위해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⁴

이러한 평가 위에서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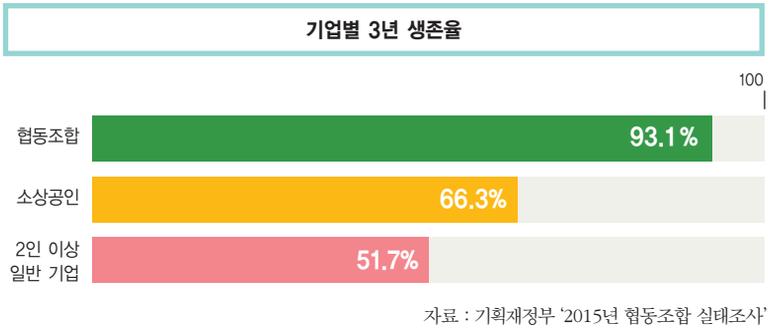
1.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이며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 기재부는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도 함께 발

3 관계부처 합동 (2020.3.31),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20~2022』, 4쪽 인용.

4 관계부처 합동 (2020.3.31),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20~2022』, 6쪽 인용.

표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말 등기 기준, 기본법 협동조합 전체 13,016개 중 54.2%가 실제 운영되고 있다. 아주 높은 운영률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타 법인의 창업 3년 생존율과 비교하면 나쁜 성적도 아니다.⁵



또한 2018년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인 협동조합 수는 7,050개로 2016년의 5,100개에 비해 38.2% 증가했다. 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 출자금, 매출액 등이 증가하며 운영 및 경영 성과도 개선 추세에 있다고 파악했다.⁶ 즉,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이러한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이제는 협동조합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연착륙을 돕

⁵ 중소기업뉴스 (2015.6.1). "창업 3년 생존율 41%, OECD 꼴찌"
⁶ 관계부처 합동 (2020.3.31).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20~2022』, 3쪽.

는 데 그 방점이 있다. 기존의 협동조합 정책이 ‘자유로운’ 설립 지원으로 양적 확대(COOP 1.0)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효과적인’ 성장 지원으로 질적 내실화(COOP 2.0)를 꾀하자는 것이다.

2. 협동조합 성장 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성장 기반 확립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를 밝히고 있다.⁷

■ Advance :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미래 인구 변화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한 돌봄 분야·노동자·프리랜서협동조합 같은 혁신형·한국형 협동조합 특화 모델을 발굴하고, 협동조합 스케일업⁸을 지원한다. 특히 Covid-19 사태 이후 지역공동체의 보건 및 안전을 담보할 아동 및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돌봄 분야 협동조합의 규모와 역할이 미미한 만큼 협동조합형 돌봄 시설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공유 재산 임차 등을 통한 공간 확보 지원, 돌봄 분야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마련, 위탁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돌봄 분야 협동조합의 확장(육아, 방과 후 교육, 노인 요양)이 가능하도록 특화교육을 추진하도록 했다. 대상별 특화돌봄이 아닌 지역공동체 내 각종 돌봄을 지원하는 ‘조합형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는 가운데, 기업 인수·전환, 사업 중단·폐업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노동자협

7 기재부 제3차 기본계획에서 직접 인용.

8 기업 및 생산 규모의 구성 요인인 자본, 노동력, 자산, 설비, 경영, 조직 등을 확대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한 단계별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며,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 형태를 협동조합으로 흡수, 이들에 대한 '노동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인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 IT 개발자, 프리랜서 등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을 협동조합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 스케일업을 위해 사업 연합·합병을 통한 규모화, 성공 모델의 복제·확산 지원 및 창업 지원 사업을 고도화하는 방향이다.

■ Band :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이종연합회 허용)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자생^{自生}, 자립^{自立}, 자정^{自淨}이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으로 협동조합 정체성을 고양한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지원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업종별 연합회가 매트릭스 구조로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연합회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종 협동조합들을 연대하게 하는 구심점이 되고, 업종연합회는 업종별 협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고, 연합회 고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모화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해외 사례 및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연합회를 통해 자율감사를 추진하고 자율공시 강화도 추진한다. 경영공시 대상이 아닌 협동조합을 위한 연차보고 매뉴얼을 마련하고 경영공시 교육을 확대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케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상 변경신고 사항도, 현행은 협동조합의 변경 사항을 전부 신고하게 하여 현장 협동조합의 유연한 사업 변경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협동조합 주소, 출자좌수, 납입출자금 총액, 임원 인적사항 등의 등기 사항과 기타 조합원 수, 법인 전화번호 등과 같은 기타 주요 정보만을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부담 경감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

무엇보다도 기본법과 개별법(생협, 신협) 협동조합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가능하게 한 조치가 제3차 협동조합 기본 계획에서 주목받는 점이다. 기본법협동조합·생협·신협 중 2개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총 5개 협동조합이 만나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종연합회는 중앙행정기관(기재부)의 인가에 의해 설립되므로, 설립 절차, 인가 취소 시 공고 방법, 임직원의 겸직 기준 등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연합회 고유 사업인 공제사업을 활성화하며 협동조합 간 연대를 촉진한다.

■ Community : 지역사회 중심 운영

지방정부를 지원체계의 허브로 재편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 구조를 구축한다. 지역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자치 단체 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여성가족부의 지역돌봄공동체시범사업과 서울시공동주택 같이살림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맞춤형 모델이 이를 추진하는 범례가 될 것이다.

■ Deregulation :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일반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기존 법인(상법 상 회사 등) 위주의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협동조합 진입이 제한되는 차별적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협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환영할 만하다. 기존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금융 조달의 애로사항도 개선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종연합회 허용과 더불어 가장 큰 이슈라 여겨지는 우선출자제도를

활용한 자기자본 확충도 문을 터주었다. 우선출자제도는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의결권·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 출자 방식이다.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해 사업 확장을 계획하는 협동조합이나 인내자본이 필요한 창업 초기 협동조합에게는 청신호인 셈이다.

■ Education : 교육 및 홍보 내실화

준비된 창업을 위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참여형 교육을 확대하며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려 인식을 제고한다.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정책적 합의와 쟁점

첫째, 무엇보다도 이종연합회 허용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개별 협동조합들이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정부지원체계에 따라 개별 부처에 연계되어 조직화되어 있는 구조를 허물고, 협동조합 간 관계에서 협동과 연대의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협동조합의 규모화·협업화 및 새로운 성공 모델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종연합회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많은 재정 능력이 있는 농협·새마을금고·중소기업법협동조합들은 이종연합회 구성에서 제외되었다. 또 협동조합연합회는 가입이 안 된다.

차기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이종연합회 구성에 있어 실질적인 시너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연합회뿐만 아니라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들도 이종연합회에 포함 시켜야 한다. 이종연합회 구성 조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현 이종연합회 구성 요건에서도 새로운 성공 모델이 나오려면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금융협동조

합이 다른 협동조합의 출자를 활성화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앞장서려면 개별법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신탁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신탁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둘째, 우선출자제의 도입은 기대감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자본 확보의 한계가 많은 협동조합에게 우선출자제의 도입은 하나의 희망이다. 하지만 우선출자 총액을 자기자본 또는 납입출자의 30% 이내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자금 확보나 사업 규모 확장에 도움을 받는 협동조합의 수는 소수가 될 듯하다.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및 양도, 총회 등 우선출자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우선출자와 관련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채무상대 양호'의 기준, 자기자본의 범위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이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제3차 기본계획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부처 간 '칸막이 행정'도 벗어나고 자치단체 협력이 필수적인데 자치단체 사업도 일관된 목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내부, 외부를 떠나 사회적경제기업을 향한 최대 비판은 '경로의존성'이다.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만들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인증·지정제도를 활용하여 지원을 받으며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역시 기업으로 시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사회적경제기업보다도 협동조합은 특히 지원사업을 활용할 경우 비난에 직면하곤 하는데, 조합원 출자금만으로 사업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비판이다. 협동조합들은 출자금도 빈약하지만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을 해주어야 하므로 출자금을 자본 대신 부채로 인지하는 금융권의 대출

심사 기준도 현실의 높은 벽일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자체, 학계 등에서 '협동조합은 성장이 너무 느리다, 협동조합이 성장하려면 규모화·협업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일갈한다. 협동조합 나아가 사회적경제가 기존 국가(정부) 실패, 시장 실패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운동임을 상기해야 한다. 영리기업의 성장 지원과 협동조합의 성장 지원이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식회사와 같은 타 영리법인과 균형 잡힌 운동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COVID-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위기, 사회위기 시 협동과 연대를 조직 원리로 한 결사와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넷째,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정부의 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하향식 Top-down 방식으로 사회적경제가 성장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의 방향과 계획이 향후 방향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단지 우려되는 지점은 기본계획에서 정부 중심보다는 연합회 중심의 민간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식을 천명하는 한편, 지자체의 협동조합 관리·감독권이 강화되는 방향 또한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협동조합의 자율성 고양에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듯이 정부는 유럽처럼 협동조합 내지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협동조합들은 일견 긴장 관계로 보이는 사회적경제의 대의(연대와 협동, 취약계층 지원 등)와 시장원리를 양립시킬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재부의 제3차 기본계획은 제4차 실태조사에 기반한 것이라 보이는데 제4차 실태조사 자체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먼저 기재부 실태조사의 정확성 부분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전체적 생태계를 분석

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즉, 표본조사를 통한 평균적인 수치에 기반하기 때문에 극단치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가령 협동조합 매출이나 조합원 수 등은 대규모 협동조합이 극단치를 조성하기 때문에 평균값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태조사 설계 과정과 실시, 산출 데이터를 놓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2년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빈번한 행정 조사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며 실제 참여도도 낮다. 이 또한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재부의 실태조사 횟수와 방식을 조정하여 실태조사에 대한 현장의 피로도를 낮추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가치를 올리자!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COVID-19 사태는 우리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다. 기존의 자원 수탈적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경쟁적 효율성, 개인(개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 신자유주의적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계기가 주어진 것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곤경에 처할 때마다 협동조합들은 오히려 힘을 발휘했다. 고용조정 위기를 견대내고 함께 연대하며 위기를 버텼고, 지금도 분투하고 있다. 지역에서 서로 연대하고 상생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정부 그리고 시장과 관계를 맺어온 경험과 실천이 협동조합의 힘이다. 위에서 논의한 기본법협동조합 개정안을 이러한 가치와 실천을 확산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 기본법협동조합들은 성장하고 있다. 그간의 양적 성장이 비판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전환의 토대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기본법협동조합과 신흥, 생협이 만나 새로운 모델

을 상상하고 현실화하며, 성공적인 한국형 협동조합이총연합회의 실천을 시작하자.

- 참고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0. 3. 31).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 기획재정부 (2020. 3. 31).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2020. 5).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내용 및 향후계획』
 -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7158호) 공포 (2020. 3. 31)
 - 중소기업뉴스 (2015. 6. 1). "창업 3년 생존율 41%, OECD 꼴찌"

- 참고 사이트**
- 국세청 사이트 <https://www.nts.go.kr/>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사이트 <http://www.coop.go.kr/COOP/>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생협 zoom in

김성광

작가, flysg2@gmail.com



우리에게 필요한 여행

전쟁 또는 재난의 상흔을 보며 그 의미를 살펴보는 여행을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고 말한다. 관광객들은 어두운 현장에서 아픈 기억을 되돌아본다. 다시는 어두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는 과정을 겪는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2020년 6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여행이 아닐까. 관광객들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통일 염원 리본이 매달린 철조망 너머 임진강을 바라보고 있다.



기획
연재

생협평론이
만남 사람

우미숙
『생협평론』 편집위원

사회적경제와 제도정치를
잇는 안성시장,
김보라

“생각의 출발은 협동조합 활동에서 경험했던 좋은 기억에서부터입니다. 같이 논의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경쟁보다는 협력하며,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변화를 위해 일하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배워왔습니다.”

올해 봄에 치러진 4.15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에서 안성시장으로 당선된 김보라 시장은 20년 넘게 안성의료생협에서 활동해온 사회적경제 전문가이며, 9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안성시 혁신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들과 지역 기관장들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의를 보이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들어주는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 시장은 한 달 조금 넘는 짧은 기간이지만 출발이 희망적이다. 아마도 오랫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한 경험과 수많은 고민에서 나온 행동이기에 사람들이 그의 진정성을 알아본 것이리라.

선거 개표가 마무리되고 당선이 선포되던 4월 16일부터 시장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시장이 요즘 주로 하는 업무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다. 공무원들과 지역 기관장들과 만나는 약속이 이어지다보니 정작 안성 시민들과 얼굴을 마주할 일은 많지 않았다. 먼저 김보라 시장이 누구인지 알리고 협조를 부탁하는 일이 필요했다. 큰 변화를 예상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뭔가 뒤바꾸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라며 안심시키는 말을 꼭 전한다.

의료봉사로 인연 맺은 안성, 안성의료생협 활동에서 시작한 사회적경제 전문가

2014년,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인의 삶을 시작한 그는 간호대학을 나와 의료인을 꿈꾸던 사람이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1989년부터 대학 4년간 안성시 의료봉사

에 참여했다. 연세대 의대 기독학생회 예비 의료인들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1987년부터 안성시 고삼면에서 주말 진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 마을 청년들과 함께 농민의 건강권에 대해 고민을 나눴다. 이때 상설 의료기관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 199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당시 그보다 2년 전에 문을 연 안성농민한의원이 의료생활협에 합류해 규모 있는 의료기관을 갖추면서 출발할 수 있었다.

김보라 시장은 1993년에 의료생활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안성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김 시장보다 한 해 먼저 농촌 활동으로 안성 고삼면과 연을 맺고 있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리하여 안성시와 인연은 31년째를 맞이했다.

1990년대 초, 생활협이라 하면 친환경 생산물 공동구매 협동조합이 전부이던 시절에 의료 소비자들의 생활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김 시장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의료생활을 알리고, 이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의원을 이용해야 할 안성의 농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을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이었다. 1989년부터 의료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밑천 삼아 매일 매일 조합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함께 활동을 만들어갔다. 그는 정작 간호사의 역할보다 간사, 사무장, 사무국장을 거쳐 전무이사까지 의료생활의 행정 업무와 활동 기획 모두를 총괄하는 일을 해왔다.

“저는 감히 협동조합형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협력하고 배려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요. 단, 협동조합 하는 분들이 잘 안 하는 것을 해왔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 시장이 경기도의원으로서 수행한 일들,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사회적경제센터장으로서 해온 일들이 20년 넘게 몸담아온 의료생활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동과 경험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풀뿌리

현장 활동에서 행정 전문가의 훈련을 충실히 받아온 셈이다.

정책적 접근 없이는 사회적경제 활동 어렵다는 것 절감

“가정간호 방문사업, 조합원 검진, 노인 돌봄사업을 하다보면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프고 나이 드는 데는 빈부격차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불평등이 존재한다. 김 시장은 의료생협 조합원 건강돌봄사업과 검진사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중앙부처 사람들을 만나거나 정치인을 대할 때 의료생협 활동을 알리는 동시에 의료 사각지대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그들은 말하는 순간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한 노력이 가정 간호사업이나 공단 검진,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같은 보건 관련 정책이 마련되는 데 보탬이 되었지만 현장 활동의 한계도 뼈저리게 다가왔다.

“의료생협이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이르면, 정치권이나 행정 영역에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기보다 조금 도움을 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지자체가 보건의료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사업 내용이 달라지고 경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김 시장이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일 때, 준비된 정치인은 아니었다. 문제의식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사회적경제 활동가였을 뿐이다.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공무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돈만

바라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일도 있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누군가가 정치를 하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사회적경제에서 정치 영역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실제로 정치인의 시작은 우연이었다. 지인으로부터 도의원 출마 권유를 받았고, 이에 선뜻 응했을 뿐이다. 20년간 이어온 의료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접고 다른 세계로 활동의 맥을 이어가야 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아주 우수한 역할을 해냈고, 그동안 쌓은 행정력과 조직 운영 노하우를 훌륭하게 발휘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부터 생협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고, 협동조합기본법 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도 큰 힘을 보탰다.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에도 기여했다.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뿐 아니라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 시장은 의료생협 조합원을 만날 때 이런 당부를 빼놓지 않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났을 때도 현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법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이제 그는 정책 제안자, 정책 수행 감시자에서 정책 수행자의 위치에 섰다. 비록 18만 명 조금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기초지자체이지만 그에게 새로운 삶을 마련해준 안성시에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을 만들어가고 싶어한다.

안성시 사회적경제, 자생적이며 공동체성이 높은 편

김 시장에게 사회적경제는 각별하다. 비록 시정 전체를 돌봐야 하는 위치지만 시민들의 삶, 안성시라는 공동체 발전에 사회적경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안성은 캐나다 퀘벡과 비슷합니다. 내부 공동체성이 매우 높은 편이지요.”

김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안성시는 축산 농가들이 많은데 다른 지역과 달리 축협을 축산 농가들이 직접 만든 점이 특징이다. 신용협동조합도 성당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고, ‘아름다운 가게’도 지역 주민들이 돈을 건어서 스스로 만들어 운영한다. 이곳에는 어린이 음료와 유기농 솜사탕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회적기업도 있다. 그 선두에는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현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과연 협동조합다운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설립 과정을 보면 지역의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사례들이 많다.

대부분 지자체가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조성해간 반면, 안성시는 24년간 보수정당이 집권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



했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어떤 정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안성시 사회적경제는 시 행정의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자수성가한 셈이다. 그래서 김 시장은 마음이 더 쓰인다.

지금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하는 식이고 이렇다 할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다. 김 시장의 의료생협 활동을 하던 때에는 연대 활동이나 학습 모임과 같은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흩어져 있다.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 절실했다. 지역공동체의 공공의료와 사회적경제의 사회 안전과 돌봄 역할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가는 주체들의 연대, 나아가 민과 관의 거버넌스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안성에는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는 없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각 조직들이 제각각 살림살이에 몰두하다보니 지역공동체의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 힘든 탓이다.

“거버넌스가 되려면 민간이나 관 모두 역량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둘 모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간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중간지원센터에 대한 김 시장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지금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분야에서 각각 중간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각각 한두 명의 실무 인력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행정 민원 업무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10여 명의 인력을 갖춘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합리적입니다.”

김 시장은 기초지자체는 지역자원 조사와 교육사업을 주로 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적 지원센터는 도 단위로 설치하고 기초 단위와 연결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2년이라는 시장 잔여 임기는 뭔가 결과물을 내기에 길지 않은 시간이 다. 김 시장은 2년 후를 내다본다.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라고 생각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당사자 영역의 역량을 키우는 일입니다. 나는 개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조금 거들어줄 뿐입니다.”

조금 거들어주는 일로 보기에는 김 시장의 포부가 크게 느껴지는 공약들이 있다. 그는 공공의료와 관련한 것과 원도심 사회적혁신타운 설립 계획을 공약에 담았다. 김 시장의 설명으로는 안성시가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세우는 데 안성맞춤이다. 일찌감치 중앙정부는 지역사회 돌봄사업으로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 시범지역으로 안성을 지목했다.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주요하게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입원 병상 300베드를 갖춘 안성의료원이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현장 예방 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곳곳에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다. 다른 지역은 보건지소가 없어서 마을 단위 공공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없거나, 병원급의 공공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안성은 읍면동 마을 진료소와 시내 민간의료기관, 지역 주민 보건소, 병원급 의료원이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루고 있다. 보건의료 인프라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왜 결실을 맺지 못했을까. 그동안 안성시의 의지가 없었다고 김 시장은 진단한다. 그는 안성시장 후보에 나서면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 계획을 공약에 넣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공동체의 의료체계, 즉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원도심 사회적혁신타운도 그가 꼭 해보고 싶은 사업 중 하나다. 이는 중앙정부가 균형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물을 지어 사회적경제 주체를 양성하고 창업을 돕고, 이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안성시도 다른 소규모 도시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나갈대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원도심의 공동화현상도 심해졌다. 지역 주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듦으로써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게 사회적혁신타운 사업이다.

공약은 시장이 꼭 지키고 해내겠다고 시민들에게 한 공식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장 혼자 할 수 없다. 약속을 지키는 일은 어떤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 김 시장에게 든든한 파트너는 누구일까.

“오랫동안 의료생협 활동을 했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가장 든든한 뒷배죠. 단,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적 한계 때문에 조직의 이름을 걸고 공식적으로 돕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촘촘하면서도 넓게 포진해 있는 인맥 네트워크가 많은 힘을 줬습니다.”

인맥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하는 김 시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로 공무원을 지목한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업이면서 공익적인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수에 비해 업무가 너무 많아 내실을 기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김 시장은 시장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라도 파트너로서 공무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명감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면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쌓고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

정치는 현장이 달라졌을 뿐 '활동의 연속'

시장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짧은 임기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 시장은 “사회적경제 출신이 정치권으로 나갔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문제 해결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적경제 현장 활동가들이 제도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데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의사소통을 하고 회의를 통해 민주적 의결 과정을 훈련하는 것 모두 중요한 정치교육 과정입니다.”

그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 자체가 정치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인 양성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다양한 인맥을 쌓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쌓아 정치가로서 역할을 이어가라는 뜻이다. 그에게 정치는 현장이 달라졌을 뿐 ‘활동의 연속’이다.

김 시장은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를 여는 일이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공무원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인문학 강좌가 열리는 시청 대강당에 공무원과 시민들로 가득 차는 풍경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객석 한 자리에 김 시장이 함께한다.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고 지역 주민의 역량이 커지는 게 가장 바라는 겁니다. 시장은 장을 열어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요. 시장이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불협화음이 생길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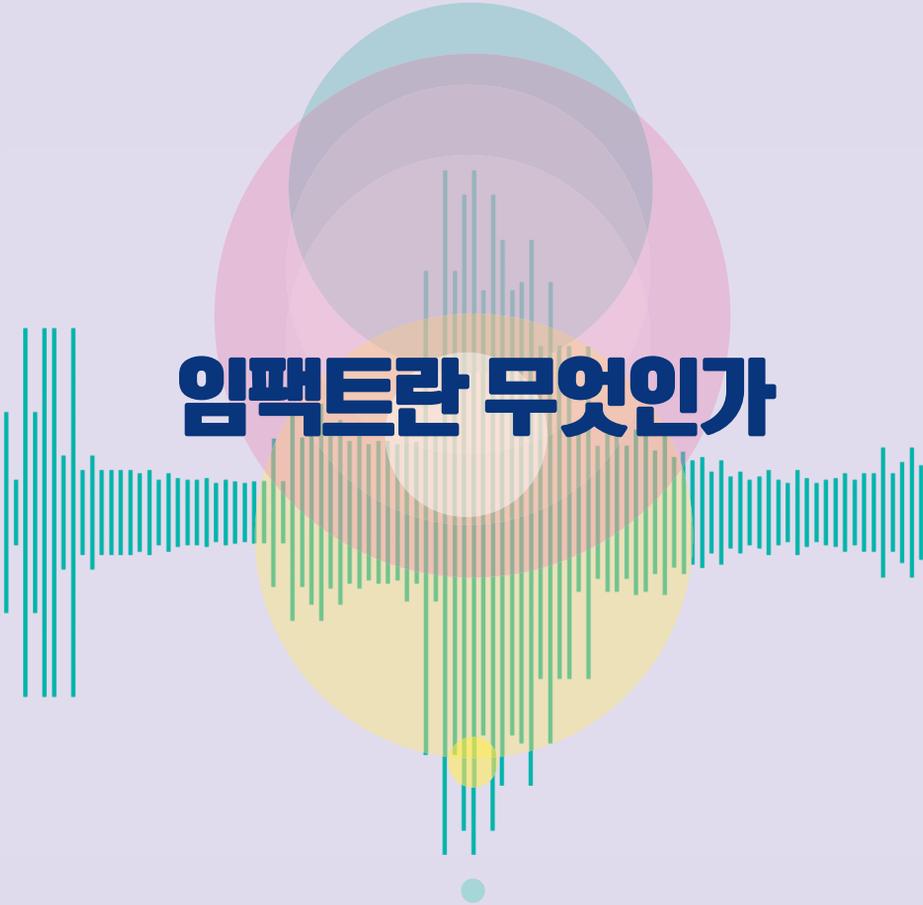
김 시장은 2년 후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다만 ‘김보라, 팬찮았어’ 하는 말을 듣고 싶을 뿐이다.

기획 연재

주요 개념 길라잡이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임팩트란 무엇인가

논의의 배경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에 자주 등장하고, 심지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임팩트Impact’이다. 임팩트 투자, 임팩트 금융, 임팩트 스타트업, 소셜 임팩트 본드, 임팩트 이코노미 등 매우 다양한 곳에 임팩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그 말을 들어나름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임팩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오늘 ‘임팩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렇게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소통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단어가 필요하게 된 본질적인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숨에 임팩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마무리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런 용어의 정의는 학문적으로 뚜렷하게 정리가 되거나, 사용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의미가 구성될 때 용어에 대한 논의가 종결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 둘 다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지금의 흐름과 우리가 접하게 되는 좀 더 좁은 범주에서 가장 쓸모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약간이나마 논의의 진척을 기대해본다.

임팩트의 기본 정의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임팩트라는 단어는 사실 ‘소셜 임팩트 social impact’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러나 실제로 글로벌에서 사용할 때는 대부분 소셜이라는 수식어를 제외하고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꼬박꼬박 언급하는 상황과는

다르게 임팩트는 그렇게 대별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경제 생태계에서 임팩트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당연히 소셜 임팩트를 말하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에서 임팩트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합의 수준은 임팩트 관리 프로젝트 IMP Impact Management Project에서 살펴볼 수 있다. IMP는 임팩트를 서술하고 보고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이니셔티브이다. 이미 2,000개가 넘는 임팩트 관련 조직들이 참여하여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들의 양대 네트워크인 진GIIN과 토닉Tonic이 모두 참여하고 있고, 국제금융공사IFC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주요 7개국G7도 여기에 참여했다. IMP는 무엇보다 참여 기관들이 가진 경험과 의견의 합의consensus를 도출하여 표준화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임팩트에 대한 정의도 포함되었다. 그 결과로 제시된 임팩트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임팩트는 한 조직에 의하여 야기된 성과의 변화량이다. 임팩트는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¹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임팩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보고자 한다.

1 IMP 홈페이지

<https://impactmanagementproject.com/impact-management/impact-management-norms/>

임팩트의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요소 1 : 임팩트는 성과의 변화량이다

‘임팩트가 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한 일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 성과outcome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출된 결과output와는 다른 의미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확률과 실력과 경쟁 상황 등이 모두 적용되어서 나오는 실전적인 변화이기 때문이다. 임팩트라는, 성과의 변화량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했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는 접근인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한 고등학생이 그간 잘 못했던 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다. 부모에게 20만 원을 받아서 15만 원은 독서실 등록을 하고 5만 원으로는 수학책 두 권을 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1개월 동안 독서실에서 열심히 수학 문제집을 풀었다. 그 결과 두 권을 다 풀 수 있었다. 그 학생은 이 일을 왜 했을까? 1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20만 원을 잘 사용하려고? 또는 다 풀 문제집 두 권이 너무 갖고 싶었을까? 그럴 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수학 점수를 올리고 등수를 올리기 위함이다. 임팩트는 우리가 변화시킨 등수나 점수가 되어야 한다.² 물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이나 직업의 기회를 얻고, 결국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현장에서 점수나 등수의 변화라는 기대한 성과보다도 다 풀 문제집 2권이나 투입한 1개월의 시간,

2 엄밀하게 성과에는 개입 없이 생기는 변화(depth counterfactual)를 차감해야 하지만 논의의 편의상 여기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20만 원의 비용을 뿌듯하게 여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나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만든 성과의 변화량, 즉 임팩트라고 하기 어렵다. 사실 임팩트의 정의에서 가장 크게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은 그저 좋아 보이는 어떤 것^{something good}을 임팩트로 여겨버리는 오류에 대한 경고이다. 때로는 태도나 적합성을 가지고 임팩트와 동일선상에서 놓는 경우도 있다. 민주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성과 남성 고용비율이 같고 임원과 직원 간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은, 좋은 기업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임팩트가 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근육량이 많지만,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모두 달리기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교묘하게 원하는 성과를 위한 투입(20만 원)이나 행동(문제집 풀기) 그 자체, 또는 일을 대하는 태도와 조직의 건강성 등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성적 상승과 대학 진학, 취업 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임팩트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IMP도 '5가지 차원에서 임팩트를 서술하는 프레임워크³'를 제시하고, 각각의 차원에서 기여한 '변화량'을 올바르게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요소 2 : 임팩트는 양수와 음수 모두 가능하다

임팩트는 변화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음수일 수도 있다. 우리의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만 낳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음수로 기록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하는 것

3 IMP는 임팩트의 5가지 차원, 즉 무엇을(what), 누가(who), 얼마나 많이(how much), 기여(contribution)했으며, 어떤 위험(risk)이 있는가를 제시하고, 이 5가지 차원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임팩트 데이터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있다.

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IMP에서는 기여가 아닌 변화량을 차감하는데 엄밀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직 글을 모르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단어 맞추기 놀이수업을 듣고 나서 단어를 1분당 20개 맞춘 것으로 끝이 아니다. 아이는 단어 맞추기 놀이수업을 하기 전에도 2개 정도는 맞췄고, 또 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1년 동안 평균 5개 정도는 단어 맞추기 실력이 저절로 올라간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들어낸 진짜 변화량은 얼마인가? 놀이수업을 하기 전과 후의 변화량 18개에서 수업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변화량 5개를 차감한 만큼이다. 즉 20개가 아니라 13개가 놀이수업의 임팩트이다.

이렇게 차감을 하다 보면 음수가 나올 때도 있다. 위의 예를 이어서 보자면, 놀이수업 후 본 시험에서 아이가 평균 6개를 맞추고 14개를 틀렸다고 해보자. 그럼 차감 뒤에는 오히려 -1개가 된다. 놀이수업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깨우치도록 두는 경우보다 못한 음수 임팩트가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요소 3 : 임팩트는 의도성과 상관없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 자체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든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한 라이브스톡이라고 하는 소셜벤처는 카자흐스탄의 유목민이 방목한 가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센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본래 의도한 분실 위험의 감소 외에도 자동화를 통해 아동 노동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때 아동 노동의 감소도 임팩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도한 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임팩트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은 임팩트 안에도 품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좋은 임팩트는 첫 발생 자체에는 의도한 변화가 없었

더라도 그 뒤에라도 의도와 의지가 투영되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지속 가능해진다. 때문에 임팩트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상관없는 것으로 정의했지만, 우리가 사회의 진보를 이끌어가기 위한 관리 목적으로는 결국 의도성의 부여는 중요한 질적 요소로 취급이 된다.

임팩트의 본질을 이해하자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었는데, 왜 임팩트라는 말이 새롭게 쓰이게 되었을까? ‘사회’라는 어감이 주는 정치적 오해나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너무 넓은 의미를 가진 개념인 ‘사회’와 ‘가치’가 결합되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임팩트가 대두된 것은 사회적 가치가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긍정적인 가치에 너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임팩트는 우리의 사회 진보를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도성에 대한 범주도 넓혀 놓았다. 다만 변화량 자체에 대해서는 엄밀성을 제고하여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임팩트라는 어휘를 대해야 하는 자세는 그 정의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는 그 본질을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포대교에서의 투신을 막기 위해 2012년 생명의 다리가 조성되었다. 다리 난간에 따뜻한 문구들을 새기고 조명을 설치했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생명의 다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오히려 자살 시도자가 늘어 ‘자살 명소’라는 오명을 얻으면서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괜찮은 아이디어

와 기획으로 직접 결과물인 멋진 다리를 만들고, 좋은 광고라는 호평을 받으며 수많은 수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도했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통계를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취약계층 고용율은 매출이 오르는 만큼 높아지지 않는다. 규모가 커진 기업에서 사회적 혁신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인증을 취득하고 임팩트 펀드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 측정해보면 임팩트가 음수로 나타나는 곳도 심심찮게 보인다.

우리는 임팩트를 수없이 정의하고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의 변화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반성하고, 스스로는 물론 생태계 내에서 자정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임팩트란 무엇인가에 답하는 임팩트적 방향이다.

서평

가치를 넘어서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소비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최인석 지음, 지형, 2020

오경아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2019년 8월 19일, 미국의 재계에서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프레임을 바꾸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여 미국 내 181개 기업 CEO들의 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지난 수십 년간 철칙처럼 여겨온 '주주 이익의 최우선 원칙'을 수정했습니다. 대신 이들은 기업의 목적이 고객, 직원, 공급업체, 지역 커뮤니티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헌신하는 것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13쪽)

주주의 이익보다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

미국 의회에 발의되어 있는 '책임있는자본주의

법Accountable Capitalism Act’의 내용은 주주의 이익보다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저자는 기업 스스로 주주의 이익 대신에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 착한 기업이 세상을 바꾼다』에서는 기업이 이윤뿐만 아니라 더 확장된 미션을 수용하고 운영할 때 오히려 경쟁사들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더 빨리 성장하며 이윤도 더 많이 낸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최근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산층의 몰락, 빈부격차의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의식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근거로 자본주의 최첨단국인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GDP 대비 기업의 이윤은 계속 올라간 반면 임금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새로 성장하는 세대는 기득권의 천장을 뚫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현실을 들었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회원국들의 가계 가처분소득은 전체 가구 중 98%가 증가했고, 2%만 감소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극적인 변화가 왔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98%에서 30%로 떨어지고, 감소한 가구는 2%에서 70%로 올랐다. 저자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암울하다고 말한다. 현재보다 미래에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오늘보다 내일이 결코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 가난해지고, 더 불평등해지고, 더 팍팍해진 현실에서 홀대당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와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더 찾게 되고, 정부와 기업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깨어 있는 미래세대가 오고 있다

밀레니얼·Z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는 이제 기업을 달리 본다. 2018년 미국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비즈니스의 주된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밀레니얼세대가 63%에 이른다. 2014년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되었고,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젊은 세대도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이 자연스럽고, 자신의 소신과 맞는다면 구입 과정이나, 사용할 때의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이들은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가지고 있는 신념에 맞는 브랜드를 찾는다. 경제적인 수익과 부의 축적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던 산업화시대에서 보다 인간답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밀레니얼·Z세대의 특징은 최근 정치 프레임을 바꾸는 데서도 나타난다. 2018년 민주당 경선에서 스물여덟 최연소 나이로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되어 미국 정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오카시아-코르테즈. 민주당 내에서 그녀가 최근 주도하고 있는 정책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로 지구온난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오카시아-코르테즈 의원은 이제 미국 정치에서 밀레니얼·Z세대의 정서와 생각을 대변하면서 미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들이 지향하고 옹호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은 이제 단순히 상품의 선호도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까지,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착한 기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앞으로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역사상 가장 많이 요구하는 새로운 고객을 접할 것이다. 변화가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변화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하지만 저자는 사회적 가치만으로 시장에서 성공하기란 쉽지 않고, 제품 자체의 차별성과 가치사슬 내에서 비용을 낮추는 방법 등을 혁신하지 못하면 경영의 지속가능성과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말한다.

착한 기업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저자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필자 역시 평택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현장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다. 공공기관 처음으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네 곳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고, (주)한국서부발전의 후원금 4억 원으로 지역의 장애인 관련 협동조합에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스팀세차장과 카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주)BGF리테일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CU 새싹가게’는 평택의 자활근로사업을 활용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용 및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CU 편의점’ 세 곳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근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하는 주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주체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과거 ‘경영 효율화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구현’하는 것으로 대폭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를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듯이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조직 운영 과정에 내재화하는 사업 추진

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2년, 영국에서 ‘공공서비스(사회적가치)법’이 통과되어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조직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에서 조달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둔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용어와 의미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회적가치기본법’ 안이 통과된다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 책을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는지, 어떻게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별난 사람들의 별난 기업

『별난 기업으로 지역을 살린 아르들렌 사람들』
베아트리스 바라스 지음, 신재민·문수혜·전광철 옮김,
착한책가게, 2020

정설경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대표운영자



아르들렌협동조합의 이야기가 담긴 원제 “복종하지 않는 양들 *Moutons rebelles : Ardelaine, la fibre developpement local*”을 소개한 역자들은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¹’ 소속이거나, 번역협동조합 조합원들이다.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를 담은 도서를 찾던 중에 만난 아르들렌 이야기는 이것을 다 갖춘 현장의 사례였다. 『별난 기업으로 지역을 살린 아르들렌 사람들 : 다르게 일하기, 다르게 기업하기를 실현한 노동자협동조합 이야기』는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가 발간한 첫 번째 총서로 노동자협동조합 이야기가 담겨 있어 협동조합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1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워커쿠피연합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국제제조·서비스·노동자협동조합연맹(시코파, CICOPA)에 가입되어 있는 공식회원 조직으로 직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프리랜서협동조합, 노동자자주관리기업 등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기업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연합회.

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우리나라도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날 수 있는데, 5명 이상이 어울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상을 현실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별난 기업 아르들레노동자협동조합이 벌인 양모산업과 지역개발, 그리고 그들의 기업문화는 협동조합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

별난 청년들의 양모산업 재건하기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이 책은 아르들레노동자협동조합의 역사를 담고 있다. ‘아르들레’이라는 독창적 기업을 만들고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열정의 시간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10개의 이야기로 채웠다. 생피에르 빌에 남아 있던 마지막 양모 방적공장을 발견하고서 ‘아르들레 사람들’의 한 사람이 된 베아트리스 바라스^{Beatrice Barras}가 저자다. 옛날 옛적 방적공장에서 지금의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성장하기까지 40년의 로드 다큐가 펼쳐진다. ‘할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황폐하기 그지없는 시골 방적공장에서 양모산업이 본격적인 ‘일’로 정착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

‘아르들레’이라는 이름에는 ‘아르데슈’, ‘양모’, ‘양모기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쇠퇴한 양모산업을 재건하는 것은 아르들레를 창립한 중요한 목적이었다. 양모에 대해 배우고 손수 기술을 익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판매했다. 값싼 제품이 출몰할 때마다 원자재 가격을 낮춰야 하나, 제품 생산을 기계화해야 하나, 생산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했으나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오히려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했다. 제조업이 직면해야 하는 고난의 현실에 시장경쟁력을 차근차근 갖춰 나갔다.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해 유럽 곳곳의 박람회장을 찾아다니고, 고객들이 아르들레를 찾아올 수 있도록 박물관을 지었다. 자금 조달

은 곳곳에서 난관으로 등장했다. 매사가 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헌신에 기반 한 그들의 도전과 혁신은 끊이지 않았다.

우애와 연대로 지역발전 도모하기

아르들렌노동자협동조합은 프랑스 남동부의 오베르뉴론알프스 레지옹에 위치한 아르데슈 지역에서 생겨났다. 설립하는 데만 7년이 걸렸고, 16명이 의기투합했다. 쓸모없는 방적공장을 인수한 것에서부터 그들의 임무는 쇠퇴해가는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양모산업을 부흥시키고 공장을 확장할 때도 낙후된 지역으로 작업장을 마련했다.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르들렌을 창립한 중심축이었기 때문이다. 버려진 지역 자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 인구를 유지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일자리라고 보았다.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미션은 아르들렌 청년들에게겐 멈추지 않는 도전이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옛 방적공장 부지에서 아르데슈의 양모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모였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전부였다. (71쪽)

그들의 우애는 진중하게 흐르다가 협동조합으로 이어졌고, 선부른 속도를 내지 않았다. 양모 수거를 담당하는 남동권역양모협동조합을 비롯해 아르들렌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는 동반자가 되었다. 노동자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하면서도 작은 협동조합, 비영리단체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교류에서도 우애와 연대를 통 크게 실천했다. 로치데일공정선

구자들이 세운 바이블이 후대 협동조합에서 빛을 발했고 자조, 자기 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 등 협동조합 본연의 가치는 몸으로 터득하는 것이다. 약한 시장성, 인력·기술·자금의 부족은 일상적 어려움이었다. 그럴 때마다 아르들렌은 조합원과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아르들렌노동자협동조합이 지역을 근거지로 삼은 것은 지역 순환경제로 지역을 개발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돈보다 인간을 우선시하는 것, 사회와 세계에 열려 있으면서도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것,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지역 재생의 주체들에게 아르들렌 청년들이 중심축으로 삼았던 ‘지역발전 도모하기’를 새겨보라고 권한다. 아르들렌 청년들은 개인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이 별개가 아니며, 협동조합과 개인의 성장도 별개이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르게 기업하기

아르들렌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이라는 프리즘이 임금, 기업, 자본, 경쟁, 품질, 소비, 공정성, 노동과 노동 조직, 노동시간 단축, 학습 조직, 예술과 문화의 지위, 농촌의 황폐화, 시민 교육과 사회 변화, 개발 등 사회문제 전반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자본 중심 기업이 강요하는 노동조건이나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삶의 방식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다방면의 시도로 얻어냈다. 아르들렌이 대안 사회를 상상하고 실험하며 유토피아사회주의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평가받는 대목이다. 자신들의 일터가 사회의 실험실이라고 할 만큼 그들의 ‘다르게 일하기’ 방식은 일터문화에서도

혁신자 역할을 했다. 함께 일하는 협동조합은 개인도 성장하고 인생을 채워가는 그릇이 되었다. 가족, 일, 소비, 문화, 학교, 여가 등에서 자본주의가 강요했던 시스템에 갇히지 않으며 삶을 대안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몸소 보여준 협동조합을 탐색해보라고 권한다.

“연대하는 인간 집단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존속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상황 속에서 지식과 기술을 이어왔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온전히 이어갈 것이다.”(350쪽) 그들의 다르게 기업하는 방식은 연대를 기반으로 협동하는 것이고, 기업의 핵심 가치는 변치 않으면서 각 단계마다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일궈가는 꾸준함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별난 사람들, 아르들렌

큰 금액을 대출받지 않고도 협동조합을 할 수 있었던 아르들렌은 자본 조달보다 우선하는 것은 분명한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이라고 강조한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일을 협동조합에 담아 지역을 개발한 아르들렌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노동자협동조합을 계속 실험하고 있다. 임금이나 직급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직원들 사이가 거의 평등하고, 의사결정권자와 실무자 사이에 칸막이가 없이 책임을 분담하는 것만 봐도 선망하고픈 기업의 풍경이다. 기업을 ‘경영’하지 않고 함께 ‘운영’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별난 사람들의 별난 기업문화가 세상 모든 일터에서 꾸준히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COVID-19에 대응하는 스페인, 이탈리아의 의료협동조합

이주희
SAPENet지원센터
국제팀장

현재 SARS CoV-2바이러스 관련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가 타격을 받고, 공공의료 위기에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지원과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소비자생활협회의 경우 매장 내에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배포하거나, 고령자와 의료진들을 위해 별도의 온라인, 오프라인 장보기 시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유통업체들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공급처를 찾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생산자와 공급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곳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러 부문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조합원과 관련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심리치료와 보험보장 범위 확대, 보험료 할인 등을 지원하는 보험협동조합들도 확대되고 있다.

이 중 COVID-19 대응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은 의료협동조합이다. 지난 3월 16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의료협동조합 부문인 국제의료협동조합조직IHCO, International Health Co-operative Organization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성명서를 통하여 의료협동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전선에서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

과 함께 협동조합 진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ICA에 의하면 약 1억 명의 가구가 이용한다는 의료협동조합운동은 전 세계 다양한 모델과 풍부한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UN은 보편적 의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번 COVID-19 팬데믹에 있어서도 의료협동조합은 정부와 협력하여 자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2020년 5월 13일 현재 26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2만 6,00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대표적인 의료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인 에스프리우(Espriu) 재단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COVID-19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이끌어어나가고 있다.

요셉 에스프리우(Josep Espriu) 박사의 주도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비영리로 설립했으며 ICA협동조합모니터에 따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의료협동조합인 에스프리우재단에서는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한편, 늘어나는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의료진을 채용했다. 재단 내의 병원은 COVID-19의 영향을 받는 환자를 우선하기 위해 시설을 재구성하고, 수용 능력을 늘리고, 새로운 집중 치료실을 마련했으며, 전문가를 재 할당함으로써 현재의 예외적인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의 병원은 모든 활동을 재구성하여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OVID-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4월 현재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HLA 병원에서는 COVID-19 환자 6,000명이 치료를 받았고, 그 중 1,500명이 입원했으며 170명 이상이 ICU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니셔티브는 보건 당국이 발행한 지침에 따라 진행함과 더불어 공공보건 시스템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에스프리우재단 소속이기도 한 IHCO의 호세 페레즈(Jose Perez)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협동조

합의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특성은 특히 현재 COVID-19 전염병과 같은 공공의료 위기에 직면할 때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하향식 제도에 익숙한 의료 분야의 일부가 우려하는 점이기도 하나 에스프리우재단과 같은 의료협동조합이 당국과 협력하여 자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어떤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

에스프리우재단 지역의료협회 의사들의 협동조합인 아우토게스티오 사니타리아(Autogestio Sanitaria)의 관련 사업체이자 1962년 설립된 보험회사인 ASISA(Assistenza Sanitaria)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조직의 의료 전문가 팀과 함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특별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개설하며 의사소통 전략을 강화하기도 했다.

에스프리우재단 소속으로 1974년 설립되고 1만 2,000명 의료진들이 참여하는 라비니아(Lavinia) 협동조합은 ASISA를 통해 전화 및 디지털 방식으로 모든 응답 채널을 강화했으며, 이미 20개의 전문 분야에서 모바일 또는 컴퓨터를 통해 새로운 원격 의료서비스인 Asisa LIVE를 시작하여, 매주 2,500건 이상을 처리한다. 이 협동조합 또한 마찬가지로 Ahora-MasQueNuncaTranquilidad.es 포털을 개발했는데, ASISA그룹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운동, 영양, 정신건강, 수면 및 재택근무와 관련된 내용을 제공한다.

Assistenza Sanitaria와 ASISA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부문에서 만든 연대기금에도 참여함으로써 다른 보험사와 함께 의료진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의료협동조합인 OSA(Operatori Sanitari Associati)는 로마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네롤라(Nerola)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지역은 수십 건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견된 후 레드존으로 지정되었다. 이탈리아 라자로 스팔란자니 국립전염병연구소(Lazzaro Spallanzani National Institute for Infectious Diseases)와 협력하여 이들은 전체 지역 인구를

테스트하는 한편, COVID-19 질병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이들의 전염을 추적하는 혁신적인 관리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한편,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ICMIF}에 따르면 현재 2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보험협동조합인 유니폴^{Unipol} 그룹에서는 연중 이용 가능한 코로나 의료상담 창구를 개설했다. 또한, 지역 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집중치료실 등의 병상을 늘리기 위해 200만 유로(약 26억 5,000만 원)를 각출했다. 뿐만 아니라 야전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CT스캐너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피해가 컸던 베르가모 지역에 100만 유로를 기부하기도 했다.

■ 참조

ICA ica.coop

ICA IHCO ihco.coop

ICMIF www.icmif.org/

Esprui Foundation www.fundacionespriu.coop

송소연
라이프인 기자

사회적경제의 시선을 행간에 담다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 미디어 기자로 일하고 있는 필자에게 기사를 쓴다는 것은 매번 새롭고 어려운 일이다. 기자는 펜 끝에서 생기는 힘의 무게를 견디며 뉴스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펜으로 기록한 글이 읽는 이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회적경제 기자가 가진 펜의 무게에는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회적경제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담아내고 싶은 바람도 추가되어 있다.

사회적경제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하고 우리 사회가 마주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는 이제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기업의 핵심 경영 전략으로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는 더욱 다양해졌고 그만큼 고민은 깊어졌다.

사회적경제를 다루는 언론사인 라이프인의 고민도 함께 깊어졌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대안경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의제와 이슈를 발굴하고, 거대 언론의 거대 담론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영역을 조망하고,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활동 사례를 소개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적 가치, 지방분권의 시대적 가치를 담아내고자 노력 중이다.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회 안에 녹아들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기사를 어떤 카테고리로 생산하고 분류할지 점점 어려워진다. 기사 카테고리에는 정치, 사회, 경제, 국제, 스포츠, 연예 등이 있지만 아직 사회적경제는 사회면과 경제면 사이 어딘가에 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현재 사회적경제 기사들은 사회면으로 전송하고 있다. 일반 경제가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에 초점을 둔 글이 많기 때문이다.

세부 카테고리를 나누는 일도 간단치 않다. 해당 분야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세부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은 언론사의 역량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종으로 횡으로 분류해 카테고리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라이프인은 이에 대한 고민을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사회적경제를 세분화하기보다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서 이슈, 현장, 사람, 시선, 뉴스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취재 과정은 매번 새롭고 시시때때로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난해한 내용을 채우다 보면 품도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출입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홍보 담당자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정보 수집도 쉽지 않다. 하지만 글을 쓰다보면 사회적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이 있다. 될 수 있는 한 독자에게 힘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설명충'이 되어보기도 하고, 독자가 꼭 읽어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목 어부'가 되어보기도 하고, 너무 많은 정보에 체하지 않게 중간마다 소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넣어보기도 한다.

날실과 씨실을 엮어 짠 글이 기사로 오르면 뿌듯함을 느낀다. 에필레종을 만들 때처럼 뼈를 녹이는 듯한 느낌에서, 몸과 마음이 한 뼘 성장하는 듯한 느낌으로 바뀐다. 어설피게 알고 있던 정보가 정리가 되고, 인터뷰를 통해 편협했던 관점과 사고가 확장되고, 고군분투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이렇게 작성된 기사는 기자의 손을 떠나 독자가 읽는 순간 비로소 가치를 얻는다. 기사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독자가 있다는 것은 항상 감사한 일이다. 특히 라이프인의 경우 광고 없이 후원회비로만 운영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 그런 독자들 덕분에 라이프인은 2017년 창간해 3년 동안 사회적경제 분야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다.

독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정직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가치를 생산해 내면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언론사로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활동가 그리고 지역 주민 조직들과 소통하고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 독자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 힘이 '아래로부터'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태계가 안착해 지역사회
회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생협평론 2010 겨울(창간호)

창간 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 이정옥(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 정원각(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 이의남(iCOOP고양생협 이사)

[창간 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생협평론 2011 봄(2호)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 권영근(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 배추과동을 통해 생각해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 허현중(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 김진원, 박석원, 오미에, 유재흠, 주정산

생협평론 2011 여름(3호)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 정찬율(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 장종익(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 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 시스템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 丸山茂樹(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 번역: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가을(4호)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 장원봉(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 오향식(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겨울(5호)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 권순실(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 박제선(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 조병민(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쿱생협

— 김대훈(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 北川太一(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이영

생협평론 2012 봄(6호)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 김현대(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 그 성과와 과제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題)

— 杉本貴志(関西大学商学部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 신철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좌담]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이영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특별기고]

살아 있는 역사

: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Living History :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로저 리차드슨(R. C. Richardson, 영국 윈체스터대학 명예교수)

[좌담]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억, 조성돈, 김아영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의 만남

—신효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문드라곤의 기적』 저자)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호중(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연구기획팀장)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생협평론 2012 겨울(9호)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정원자(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맹신협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좌담]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기노채, 김대훈, 민영, 조향숙, 김아영

생협평론 2013 봄(10호)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김홍범(아이쿱축산 상무대행)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권미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항식(아이쿱생협 콕서비스 경영이사)

[좌담]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생협평론 2013 여름(11호)

특집

생협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 関英昭(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 번역 :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 이재욱(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좌담]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생협평론 2013 가을(12호)

특집

협동조합 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 최유성(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 이이재(새누리당 국회의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 김현미(민주당 국회의원)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 강민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 김대훈(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좌담]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완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생협평론 2013 겨울(13호)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장)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틈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실경, 정현화, 손범규

생협평론 2014 봄(14호)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허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김성기(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김영식(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좌담]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생협평론 2014 여름(15호)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 권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좌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생협평론 2014 가을(16호)

특집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 문영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 금현옥(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 박주희(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 김아영(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좌담]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특집

한국협동조합의 성장통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김대훈(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반겨야 할 역설,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윤주일(쿠파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인가

—강민수(롭비즈협동조합대표)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단상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 역설 시각에서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
A Paradox Perspective)

—크리스 콘포스(Chris Conforth, 영국 Open University 교수)

[좌담]

소비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노동의 실제

—김정희, 이선경, 한금희, 손범규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협동조합의 지형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 2팀)

[좌담]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김정원, 유영우, 이석우, 정원오, 김형미, 김현대

생협평론 2015 여름(19호)

특집

청년과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이영롱(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좌담]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김진희, 임소라, 조한솔, 김지만

생협평론 2015 가을(20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마을과 경제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 캐나다 퀘벡의 사례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레자연드림파크 사례

—정태인(갈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좌담]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안진걸, 김남균, 선민, 위성남

생협평론 2015 겨울(21호)

특집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둘러싼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심층 분석

—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원정책과 협동조합 현황

— 정상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유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 김종걸(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좌담]

비판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 박란희, 이현숙, 장승권, 최혁진, 김기태

생협평론 2016 봄(22호)

특집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역사

— 박성재(순천대학교 초빙교수)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안상돈(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농협의 과제

— 이호중(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도시농협,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소비자를 통해 생존하거나 문 닫거나

— 정연근(내일신문 기자)

[좌담]

농협에 기대하는 변화, 그리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

— 장만기, 정기석, 조성규, 조현선, 유재흠

생협평론 2016 여름(23호)

특집

협동조합과 혁신

협동조합은 사회혁신이다

— 이일영(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과 혁신의 과제

— 김동준(성공회대 경영학부 연구교수)

노동자소유기업, 일터를 혁신하고 사회를 혁신하다

— 김활신(안산아이쿱생협 이사)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혁신하다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좌담]

협동조합, 혁신의 DNA를 찾아서

—김대훈, 김아영, 김홍길, 서종식, 정경섭

생협평론 2016 가을(24호)

특집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왜 프랜차이즈에 주목하는가?

—장종익(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소셜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

—김정원(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협동조합·프랜차이즈 현황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버거킹, 던킨도너츠에서 레베(REWE), 코나드(CONAD)까지

—김현대(한겨레 출판국장)

해피브릿지가 바라본 사회적경제 영역과 프랜차이즈

—윤천(해피브릿지 외식창업센터 센터장)

[좌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만나다

—김현, 박승룡, 이우용, 박찬선, 강민수

생협평론 2016 겨울(25호)

특집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교수)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박봉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소장)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살림꾼)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

—장지연(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차장)

[좌담]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김미선, 김종희, 우미숙, 추경숙, 김형미

생협평론 2017 봄(26호)

특집

불안의 시대,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인공지능과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길

—구본권(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는 가능한가?

—최동석(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협동조합의 고용 실태와 과제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홍택(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재미’있는 일하기,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한가요?

—제현주(협동조합 롤링다이스 조합원)

[좌담]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김선경, 마성균, 백희원, 서종식, 최혁진

생협평론 2017 여름(27호)

특집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병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사회적기업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장종익(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 <청년>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며

—조금득(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 <시니어>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

—김만희(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 본부장)

- <여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
— 오김현주(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대표)

[좌담]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

— 김대훈, 김영배, 김인선, 송경용, 서형수

생협평론 2017 가을(28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노동조합의 만남**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 :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 탐구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노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상생 : 캐나다 퀘벡의 사례

—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협력

—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따로 또 같이

— 박경숙(순천광장신문 시민기자), 이종관(순천광장신문 편집장)

평화시장의 모범업체

—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좌담]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는 왜 함께하려 하는가?

— 박강태, 이희수, 조준호, 한석호, 송경용

생협평론 2017 겨울(29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활동**

사회적경제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 김종걸(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 광형모(한국자원봉사문화 교육위원장)

생협의 주인으로서 조합원 활동

— 안인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투명하나 충분한 그림자 : 생협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을 생각하다

— 임정은(강서아이쿱생협 조합원)

조합원의 자부심, 아이쿱 자원봉사

— 이순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자치국장)

[좌담]

열정페이와 자원봉사 사이에서

—김기민, 김수화, 민선영, 박준구, 손홍택, 박범용

생협평론 2018 봄(30호)

특집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문제인 정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와 우선 추진 과제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조(自助)와 공조(公助)로 쌓는 일본의 재난 대비

—편용우(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실천 경험

—임남희(안산선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힐링센터0416쉼과힘 사무국장)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박선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전 세계 협동조합이 난민 끌어안는다

—김현대(한겨레 기자)

안전을 우리 생활공간으로 가져온 사회적경제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생협평론 2018 여름(31호)

특집

순환과 회복의 경제

쓰레기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지구 환경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생의 관계 맺기

—윤숙희(가치가지살롱협동조합 이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살림의 실천

—유현실(한살림고양파주 이사장)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사회적경제

—김경하(더나은미래 부편집장)

과학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새기기

—강양구(지식큐레이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좌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한걸음
: 시민 데이터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김성경, 김신범, 오창길, 윤성미, 이경재, 김형미

생협평론 2018 가을(32호)

특집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뜯어보기

—서종식(의연합동노동센터 소장)

결사체 운동으로서 주민운동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김성훈(한국주민운동교육원 트레이너, 사회적경제 대진플랜 상임대표)

현장 기반 학습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사회적경제 연구자 육성 현황과 전략

—장승권(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교수)

한살림과 한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7가지 방법

—서동재(한살림연합 인사이원팀)

같이 성장하고, 가치를 성장시키는 협동조합 사람들

—김아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좌담]

5인 5색, 사회적경제 인재를 말하다

—김하나, 신철호, 신현상, 원종호, 정찬필, 박범용

생협평론 2018 겨울(33호)

특집

사회적경제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공동체의 진화와 새로운 커뮤니티의 가능성

—김병권(서울시 협치자문관)

공동체는 지역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임경수(전주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아이쿱 모임, 풀뿌리 민주주의로 한걸음 다가가다

—박미정(아이쿱활동연합회 자치활동국장)

청년과 공동체 삶의 가능성

—박희정(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디지털 커먼즈의 위상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좌담]

느슨한 연대로 만드는 현대의 공간

—박동광, 송건, 유한밀, 조완석, 조금득, 장인권

생협평론 2019 봄(34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세대교체

[좌담] 세대 갈등을 넘어서는 세대교체, 이렇게 생각한다

—강성균, 우윤식, 윤하나, 오윤덕, 황명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청년 리더로 활동하기

—김진아(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농협 세대교체의 현 주소와 농민 협동조합의 미래

—이상길(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농정전문기자)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위한 아이쿱 리더십의 과제

—김현숙(사천아이쿱 이사장), 정설경(동작서초아이쿱 조합원)

생협의 세대교체는 어떻게 가능할까?

—위성남(전 마포시민협력플랫폼 대표, 전 성미산마을 대표)

생협평론 2019 여름(35호)

특집

사회적경제의 지형과 전략

[좌담] 사회적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성기, 김영식, 안미현, 정원각, 김찬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쟁점들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김기태((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그 후 6년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前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경남의 사회적경제, 그 발자취와 활성화 전략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 :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김보라(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황명연(한국자활연수원 주임)

생협평론 2019 가을(36호)

특집

사회적 가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최담] 현장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

— 강봉심, 지민진, 박기범, 변준재, 주세운

몸무게 재듯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자

— 도현명(임팩트스퀘어 대표)

사회적가치지표(SVI)의 성과와 과제

— 강경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장)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은 조직을 건강하게 만든다

: ‘사회적 회계와 감사(Social Accounting & Audit)’를 중심으로

—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역량강화센터 소장)

퀘벡 사회투자 네트워크(RISQ)의 ‘사회적경제 조직 평가 가이드’

소개

— 김진환(C.I.T.I.E.S 연구원)

생협평론 2019 겨울(37호)

특집

민관 협력과 중간지원조직

[최담] 사회적경제 당사자로서의 중간지원조직

— 정영화, 조인숙, 이원표, 안준상, 황명연

지원이란 무엇인가?

— 김찬호(『생협평론』 편집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

한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생존 조건

: 경쟁 격화와 전문화/지역화의 요구

—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지역에서 경험한 중간지원조직 민관 협력의 현실

— 윤도현(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전 동작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 사무국장)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경제 인재를 키우는 산실이 되기 위한 과제

: 일자리로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찰

— 최용완(마을과집 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

시민 주체 '새로운 공공'을 위한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실천

: 당사자 조직의 중간지원조직 기능, '협동노동'의 플랫폼 만들기

— 타시마 아스토시(田嶋康利,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옴긴이 :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생협평론 2020 봄(38호)

특집

사회적경제 법, 제도의 쟁점과 과제

[좌담]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 현장을 돌아보다

— 강민수, 박향희, 이경호, 이현민, 김대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강민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생협법 개정이 이 시대에 던지는 5가지 화두

: 협동조합의 상호성 원칙을 전면 제기하며

— 박범용(세이프넷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그 의미

— 이선민(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변화 :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 박철훈(지역과소셜비즈 연구지원실장)

2020년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꿈꾸다

— 방태형((사)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운영위원장)

사회적금융 관련 법 · 제도의 점검

— 장지연(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도시재생은 사회적경제를 담는 그릇?

— 전은호(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단행본

No. 발행년도 제목/ 저자 및 역자

- 1 200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____일본 21세기코프연구소센터 저 | 한국생협연합회 역
- 2 2008 『iCOOP생협 10년사 : 협동, 생활의 윤리』
____iCOOP생협연대 저
- 3 2008 『일본 위커즈 콜렉티브 활동 사례연구』
____김주숙, 김미영, 김양희, 안세희, 정금수, 이향숙
- 4 2008 『생활 속의 협동』
____오사와 마리 저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 5 2009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2009 윤리적 소비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집』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6 2009 『새로운 생협운동』
____한국생협연대 엮음 (초판 : 2002)
- 7 2011 『뒤엎벌은 어떻게 나는가』
____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 김형미·김영미 옮김
- 8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____김형미 외
- 9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____에드가 파넬 저 | 엄찬희 옮김
- 10 2012 『후쿠이생협의 도전』
____일본생협연합회 엮음 | 이은선 옮김
- 11 2012 『일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____오리토이사오와카니시 케이코 저 | 이은선 옮김
- 12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____사이토 요시아키 저 | 다나카 히로시 옮김
- 13 2012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____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 이은선 옮김
- 14 2013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____니시무라 이치로 저 |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 15 2013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___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 정광민 옮김
- 16 2013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___서울특별시
- 17 2013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3)』(E-Book)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8 2014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4)』(E-Book)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9 2014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___김기태, 김형미, 신명호, 장종익, 정병호 외
- 20 2014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___김창진 편저
- 21 2015 『iCOOP생협 2015년 입문협동조합』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2 2015 『사람을 탐하다 : 협동조합 역사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탐하다』
___인물탐구동아리 '사탐' 저
- 23 2015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___아너스 오르네 저 | 이수경 옮김
- 24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보고서』
___A.F. 레이들로 저 | 연찬희 옮김
- 25 2015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___G.D.H. 코울 저 | 정광민 옮김
- 26 2016 『iCOOP생협 2016년 입문협동조합』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7 2016 『아이쿱 사람들 : 협동조합의 문을 열다』
___차형석 지음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8 2017 『로버트 오언 : 산업혁명기, 협동의 공동체를 건설한 사회혁신가』
___G.D.H. 콜 저 | 홍기빈 옮김
- 29 2017 『기업 소유권의 진화』
___헨리 한스만 저 | 박주희 옮김
- 30 2018 『스무살 아이쿱 : 협동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실천』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31 2019 『이탈리아와 독일 협동조합 100년 성공의 비결』
___장종익 외 13 저

- 32 2019 『사회적경제의 힘 : 통계 방법론과 해외 사례들』
____마리. 부샤, 다미앙 루슬리에 저 | 이상윤, 윤길순 옮김
- 33 2019 『한국 협동조합운동 100년사 1권, 2권』
____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편찬위원회
- 34 2019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 효율성에 도전하는 연대』
____티에리 장테 지음 | 편혜원 옮김
- 35 2020 『협동조합 클로즈업 : 만들 땐 몰랐던 협동조합의 어려움』
____김현하 지음

연구보고서(일반)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저자 및 역자
1	2007	연구보고 2007	『생활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보고서 :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____김주숙·김성오·정원각
2	2009	연구보고 2009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보고서』 ____김아영·정원각·이향숙
3	2010	연구보고 2010-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____염찬희·엄은희·이신옥
4	2010	연구보고 201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____장원봉·하승우·임동현
5	2010	연구보고 2010-3	『생협벨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____김찬호
6	2010	연구보고 2010-4	『2009 iCOOP생협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염찬희
7	2011	연구보고 2011-1	『아이쿱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____정혜진
8	2011	연구보고 2011-2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____장종익·김아영

- 9 2011 번역서 2011-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웨덴생협—의 동향』
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 10 2011 번역서 2011-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회계 문제』
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 11 2012 기획연구과제 2012-1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___장종익
- 12 2013 기획연구과제 2013-1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___장상환
- 13 2013 기획연구과제 2013-2 『2012 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염찬희·손범규·지민진
- 14 2013 기획연구과제 2013-3 『생협의 사회 가치 :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이향숙·지민진
- 15 2013 생활과 동향 1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소비생활 지표」 발표』
___지민진
- 16 2014 생활과 동향 2014-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 생각하기』
___손범규
- 17 2014 생활과 동향 2014-2 『일본의 유기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 참가형 인증시스템의 의의』
___지민진
- 18 2014 생활과 동향 2014-3 『밀레니엄세대에 동기 부여하기 :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___손범규
- 19 2014 기획연구과제 2013-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손범규
- 20 2014 연수보고서 2014-1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 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___서진선

- 21 2014 기획연구과제 2014-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
____엄은희
- 22 2014 기획연구과제 2014-2 『생협의 사회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이문희
- 23 2015 연구원리포트 2015-1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____서진선
- 24 2015 연구원리포트 2015-2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____지민진·서진선
- 25 2015 기획연구과제 2015-1 『iCOOP생협 생산자회원의 특성 : iCOOP생산자회 정회원조사 2014년도』
____정은미
- 26 2015 기획연구과제 2015-2 『2014 아이쿱생협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 27 2015 기획연구과제 2015-3 『아이쿱생협 통계 2014』
____지민진
- 28 2015 기획연구과제 2015-4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이예나
- 29 2015 기획연구과제 2015-5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이향숙
- 30 2016 흐름을 읽다 1-01 『저성장 시대, 가치소비의 경험』
____지민진
- 31 2016 기획연구과제 2016-1 『아이쿱 통계 2015』
____지민진
- 32 2016 기획연구과제 2016-2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의 시사점』
____장재봉
- 33 2016 번역서 2016-1 『협동조합의 난제 : 자본』
____윤길순·최은주·서진선
- 34 2016 흐름을 읽다 1-02 『소비, 근심을 덜다 : 저성장기 소비의 질적 변화』
____지민진
- 35 2017 기획연구과제 2017-1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____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 36 2017 흐름을 읽다 2-01 『소비, 그리고 쉼(休)』
— 지민진
- 37 2017 흐름을 읽다 2-02 『생활동향연구, 2017. 6』
— 지민진
- 38 2017 흐름을 읽다 2-03 『생활동향연구, 2017. 7』
— 지민진
- 39 2017 흐름을 읽다 2-04 『생활동향연구, 2017. 8』
— 지민진
- 40 2017 흐름을 읽다 2-05 『생활동향연구, 2017. 9·10』
— 지민진
- 41 2017 흐름을 읽다 2-06 『생활동향연구, 2017. 11·12』
— 지민진
- 42 2017 기획연구과제 2017-2 『GMO 없는 사료 도입에 관한 일고찰 : 생협 사례
를 중심으로』
— 이향숙
- 43 2017 흐름을 읽다 2-07 『경기와 일상의 괴리 : '나'를 찾는 소비』
— 지민진
- 44 2017 기획연구과제 2017-3 『아이쿱생협의 공급망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 박상선·권영기
- 45 2018 I, B 2018-01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1 : 한
국 GMO 보급 및 표시제 현황』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6 2018 I, B 2018-02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2 : 소
비자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7 2018 I, B 2018-03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3 : Non-
GMO 표시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현황과 시사점』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8 2018 I, B 2018-04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4 : GMO
이력추적제의 도입 필요성—소비자 신뢰와 위해성
차단의 관점에서』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9 2018 I,B 2018-05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5 : BT와 GM 시대, 농업의 진로를 다시 생각한다』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0 2018 기획연구과제 2018-1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1 2018 기획연구과제 2018-2 『2018년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2 2018 기획연구과제 2018-3 『한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일고찰』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3 2019 요약본_인포그래픽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요약본(인포그래픽)』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4 2019 요약본_인포그래픽 『2018년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요약본(인포그래픽)』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5 2019 기획연구과제 2019-1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의 공동체 활동 비교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센터와 아이쿱생협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6 2019 경제소비브리프 2019-1 『어수선한 한국 경제, 다가오는 변화』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7 2019 기획연구 2019-02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생협 이용 결정요인 탐색』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8 2019 기획연구 2019-03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9 2019 경제소비브리프 2019-2 『2019년 경제 리뷰—새로운 시대로의 도입』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0 2019 기획연구 2019-04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생협 이용 충성도 탐색』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1 2020 기획연구 2019-05 『리뷰, 한국 생협의 궤적』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2 2020 흐름을 읽다 2020-01 『생활 일기 모음집 : 2017~2019』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서(수행연구)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연구자
1	2014	연구원 리포트	『훗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___이향숙
2	2014	서울시 기획 연구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___지민진·최은주
3	2015	기획연구과제 2015-6	『고양과주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손범규·신효진
4	2016	양천구 기획 연구	『양천구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조사』 ___이향숙·김경아
5	2019	한국법제연구원	『협동조합 관련 주요국의 입법사례 연구』 ___박광동·김형미·Hirota Yasuyuki·강봉준·신창섭·홍성민
6	2019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성방안 연구』 ___김용진·김형미·최은주·신창섭·이태영·김재원

연구보고서(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No.	발행년도	시리즈 번호	제목/ 편역자
1	2012	2012-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___이경수
2	2013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___이경수
3	2013	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의 역할 (地域福祉・高地域福祉と生協の役割)』 ___이경수
4	2013	10-1	『푸드 데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___이경수
5	2013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___이경수

- 6 2013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
___이경수
- 7 2014 2014-13 『이론』 『사례』 『거버넌스』
___이경수
- 8 2015 2015-2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식품 : 소비자협동조합의 시각』
___이경수
- 9 2015 2015-3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___이경수
- 10 2015 2015-4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 도전에 앞서 나가기』
___이경수
- 11 2015 2015-12 『지속가능발전 개발재원과 사회연대금융의 역할』
___이경수
- 12 2016 2016-01 『핀란드 S그룹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1-7』
___이경수
- 13 2016 2016-02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적연대경제의 현황』
___이경수
- 14 2017 2017-02 『바르셀로나 시청의 사회적연대경제 추진 정책』
___히로타 야스유키 지음, 이향숙 번역
- 15 2017 2017-03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 2016 아이쿱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모음집』
___이경수
- 16 2017 2017-09 『사람 중심의 일터 : 사회 혁신 생태계 몬드라곤 사례연구 :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5』
___윤길순
- 17 2017 2018-01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모음집』
___윤길순
- 18 2018 2018-02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 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___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 19 2018 2018-03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 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2』
___가지가지살롱협동조합
- 20 2018 2018-04 『협동조합 과세 : 일반적 가이드라인과 문제들』
___번역협동조합

생협평론 정기구독 안내

『생협평론』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의 공론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청 방법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www.icoop.re.kr) 홈페이지에 있는
‘1년 구독권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남겨주세요.

구독료

- 1년 구독료 : 10,000원

입금 안내

- 계좌 : 국민은행 448601-01-449694
- 예금주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타

- 구독 기간에 책값이 올라도 정기구독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분실이나 반송 등 배달 사고로
『생협평론』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꼭 연락주세요.
- 날권 구매는 연구소 이메일로 개별 신청 바랍니다.

『생협평론』 2020년 봄호부터 우편 발송에 썼던 비닐 포장재를 종이 봉투
로 바꿔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